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배정호 최진욱 박영호

이진영 Sergio DellaPergola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배정호 최진욱 박영호

이진영 Sergio DellaPergola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동북아 문화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 원 장	김 광 역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위 원	김 우 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 영 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 진 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정 하 미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
	최 진 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흥 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본 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8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 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I. 동북아 지역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필요성

지리적 관점에서 동북아지역이란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이 통상·투자·인적교류 등에서 가장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4년 현재 3국은 세계 총생산에서 21.5%의 비중을 차지하며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 3대 축의 하나다. 러시아 극동지역도 자원개발협력의 대상으로 급격히 부상되어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은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문제 등 지역의 안보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은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발전의 수준, 2차 대전 이후의 대립적 동맹관계 구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와 그에 대한 국가 간 갈등의 지속, 자국 중심의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 등에서 갈등적 요인을 안고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전통 문화적 유사성은 지역협력을 위한 일정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정보화, 세계화, 과학기술의 혁명 등 21세기의 빠른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 3국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간 차원에서의 정치, 경제, 안보 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비정부간 차원에서의 협력관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특성은 정치, 경제 이외에 전통, 문화, 지식, 대중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려는 것이다.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극동지역 및 일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 한민족은 이와 같은 동북아 역내의 하위집단으로서 존재한다. 이들 해외 한민족 간의 관계, 한국과 이들 해외동포사회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의 국가 간 관계라는 상부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해외 한민족 간의 교류 현상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

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동북아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 한민족 동포사회는 법률적 조국의 틀 속에서도 모국 또는 고국, 나아가 마음의 조국으로서의 한국과의 접촉 및 교류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한민족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동북아지역 한민족 간의 이동과 교류는 현재의 국적을 뛰어 넘어 한민족의 혈통과 전통 및 문화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국은 빠른 시일 안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국가적 위상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적 위상과 능력에 걸맞도록 부여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새로운 지평의 출발점은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결집할 수 없었던 한민족의 잠재적 역량을 현재화하도록 모으는 데 있다. 우리는 분단의 극복을 향한 평화공존과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선진·문명국가를 건설하고 통일을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는 진취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의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동북아 차원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구축하는 데 해외 한민족 사회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동북아지역 한민족사회 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 한민족 문화공동체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남북한의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매개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외한민족의 역량을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합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문화적 연대를 증대시키는 데 한민족 문화공동체가 모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협력과 평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II. 민족공동체 사례연구

1. 유대인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시 독립선언문을 통해, 국가내 모든 시민에게 있어서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차별을 배제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상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역사적으로 동등한 기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마저도 주어지지 않았던 유대인 디에스포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특수성을 제시하며 유대민족 내부의 문제로 명확히 간주하고 있다. 즉 차별배제 민주주의의 상이 국가의 전술이라면 유대인 디에스포라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상위의 전략적 관계라는 점이 명확하다.

전략적 사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에스포라의 관계는 1950년 제정된 귀환법(Right of Return)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귀환법에서는 자국의 유대인, 유대인 디에스포라의 정의를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내의 제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의 모든 유대인 디에스포라는 이스라엘로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를 유대민족의 민족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나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이스라엘은 전세계 유대인 디에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유대민족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과거 피해자로서의 집단적 기억과 그 역사를 보존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계유대인회의(WJC), 미국유대인공동배분위원회(JDC), Claims Conference, 헤브루이민자지원협회(HIAS)와 같은 유대인 디에스포라 단체의 기여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전세계 유대인 공동체 및 기관들과 연계하며, UN과 그 소속

기관, 위원회, 부속단체에서도 외교관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을 정도의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흐름으로 이스라엘의 Moshe Katsav 대통령이 주창한 ‘제2의회(Secong House)’의 설립 논의는 상징적이며,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Knesset) 외에 해외 유대인의 아이디어, 사상, 경향, 시각을 대표할 조직으로 ‘제2의회’는 유대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스라엘 정책의 문제,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해외 유대인 공동체 사회, 기관, 조직, 사상가, 지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내부 위원회와 직원들의 업무는 상시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에스포라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시사되듯이, 유대인 디에스포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위계적 질서가 아닌 유대민족 생존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호혜와 신뢰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장차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서도 모국과 재외동포 네트워크간의 상호호혜와 신뢰의 관점에서 기존의 모든 질서를 평가하고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국가의 전략적 사고 및 기반 구축의 문제, 동북아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의 문제, 과거 역사의 집단적 기억과 보존의 문제, 재외동포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기본법제 마련 및 정책추진기구의 신설의 문제가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피해의 당사자인 동북아 지역 재외동포들이 스스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국제기구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까지 사고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가가 기본법 등을 통해 ‘재외동포’가 누구인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국가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타국의 사례에서도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는 최근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과거 국권 상실기 등 특수한 역사적 연원으로 거의 반강제로 외국에 이주 정착하게 된 민족

성원을 우대하는 것은 각종 국제법규에도 정확하게 부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제2의회’까지 만들어 유대인 디에스포라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려는 이스라엘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함축적이다.

2. 화교

중국의 화교정책은 역사적으로 연원이 깊고, 국가의 장기전략과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개혁개방 후, 중국은 화교사무를 회복시키고 제도를 수립하였다. 주로 귀국화교 문제에 몰두하던 화교정책은 90년대에는 국내적 차원에서 대외관계 차원으로 변모하였고, 지금은 화교와 중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개념을 발전시켜, 중화적 개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화교정책은 점차 중국 대외정책과 연관되고 있다.

이런 국내적인 화교 정책과 그것의 대외관계와의 연결이 진행된다면, 화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요소는 중국 국내가 아닌 국외 화교 사회의 흐름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면서 자신의 고향 등에 투자했던 화교들이 종족-언어-지방적 차이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귀교 교권 권익보호법(2000.10.31)”을 개정하여 변화를 반영하고 화교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2001년 제 6차 화상대회를 최초로 국내로 유치하여 남경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의 화교 네트워크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였다. 강택민을 비롯한 지도층이 대거 참여하여 화교대회를 축하한 것이다. 그것은 과거 대중화경제권(大中華經濟圈)의 개념을 부정하고 사용조차 꺼리던 태도에서, ‘조국과 화교 사회’의 상호 평등성과 협력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화교정책은 좀 더 공세적인 성격을 보

이고 있다. 이는 호금도 시대 대외관계의 중점이 평화적으로 대국화한다는 화평굴기(和平崛起)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즉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제발전에 걸맞는 외교를 통해 국제문제에서 중재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 화교정책은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 중국이 '중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선화합은 전 세계 화인을 네트워크화하고, 세계화 시대에서 화인 및 중국 경제가 가지는 실력으로 세계를 리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권위주의 시절에는 공작적 성격을 가졌고, 분단에 기초하였으며, 그 결과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변화하였다. 문민화되고 나서도 국가전략 혹은 장기적인 대외관계와 연관된 과정에서 재외동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특히 재외동포를 여전히 대상화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인식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부가 화교에 대한 일관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해외동포들은 점차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21세기 이전 해외동포 사회는 반목과 질시가 존재하여 분열의 양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상황은 중국의 경우도 동일하다. 하지만 중국이 1990년대에 네트워크화를 시작하였다면, 한국의 네트워크화는 199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네트워크화가 해외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한국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 해외한국무역인협회(OKTA)등 많은 자생적 기관들이 생겨나고, 점차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의 전향적인 한상 우대 정책과 네트워크화는 동북아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문제는 해외에서 분출되는 네트워크화를 본국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인식적으로 담보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전히 강한 배타적 경향, 제도적 미비,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유연성의 부족은 한국과 재외동포와의 평등한 네트워크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오히려 문제는 해외동포가 아니라 한국에 있다. 장기적인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해외동포와의 협조가 긴요하고, 이는 이들을 혈연 및 문화 그리고 경제에 기초하여, 네트워크화하게 하고, 한국과 연계를 맺게 될 때 가능한 일이다. 즉 세계화에 대응은 오히려 해외동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서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중화주의의 대두와 화교정책의 문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중국이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인 한국에게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고심해 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화교들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오히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였듯이, 한국의 재외동포들도 이제 남북한 간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화교 네트워크는 중국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한국에게 시사점은 주며, 우리의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공존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 점에서 화교 네트워크의 형성 원리와 중국의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헝가리

제1차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 독일에 가담하였다가 패전한 헝가리는 베르사이유 조약의 부속 조약인 1920년 트리아농 조약(Trianon Treaty)에 의해 국토의 70%와 국민의 반 이상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였다. 종전 당시 1,820만명이었던 헝가리 국민이 76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총 889만 2천명의 헝가리 국민이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4개국으로 편입되었으며, 이 중 헝가리 민족의 수도 322만 3천명에 이르렀다. 전체 헝가리인의 1/3이 타민족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헝가리 디아스포라는 이 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경이 움직임으로써 발생한 특이한 경우이다. 즉 자기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1920년 조약을 통해 하루밤 사이에 소수민족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헝가리 소수민족은 자신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리기를 거부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헝가리는 소련의 점령하에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 하에서 트랜실바니아의 헝가리 소수민족 박해 등 인접국 내 헝가리 소수 민족문제가 헝가리 외교 현안으로 대두되었지만, 사회주의 하에서 계급문제에 가려 민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민족 정체성은 계급정체성에 종속되는 것이고, 계급의식이 생기면 민족주의는 사라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1989년 헝가리의 공산정권이 붕괴는 재외동포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인접국 거주 헝가리 혈통자의 권익보호’가 헝가리 정부의 대외정책의 3대기조 중 하나일 만큼 이들에 대하여 관심이 높다. 헝가리의 해외민족정책은 재외동포들이 헝가리의 문화유산과 전통에 크게 기여하고, 헝가리의 지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풍요롭게 하며, 헝가리와의 관계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헝가리 동포정책 기조는 헌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헌법 6조는 “헝가리는 외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운명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헝가리와의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헝가리의 민족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자로서 헝가리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인접국(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이다.

헝가리 소수민족의 네트워크를 위한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헝가리는 인접국내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국들과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가장 성공적인 조약이 루마니아와 1996년 체결한 ‘기본조약’이다. 둘째,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한 헌법상의 추상적인 의무를 구체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2001년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에 대한 법안 LXII(Act on Hungarians Living in Neighboring Countries)」를 제정하였다. 셋째,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 거주국에서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치 및 정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헝가리 정부는 인접국 헝가리소수민족에 대한 경제·교육·문화 지원을 확대하여 헝가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헝가리로 귀국하지 않고 거주국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정부내 재외헝가리동포처(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GOHMA)를 1992년 신설하여 해외동포에 관계되는 정부부처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

Ⅲ.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 현황

1. 재일한인사회

재일한인 1세대들은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늘 품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강한 민족의식을 지녔지만, 2·3·4세 한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또,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들은 이제 겨우 7%정도에 불과하고, 2세에 이어 3·4세가 재일한인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재일한인 젊은 세대는 ‘조국과의 정신적 거리의 확대’, ‘민족적 열등감’, ‘민족일원으로서의 자기부정’ 등으로 인하여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2~3시간 이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재일한인들은 그다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 한국문화의 일본내 정착, 한국전통문화단체 및 인기 전통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일본 공연 등 한일 문화 교류의 활성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전통 민족문화를 늘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일본사회에서 선풍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3·4세대의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을 주도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TV 드라마 ‘겨울연가’는 몇 번씩 방영되며 일본인들의 한국어 공부 붐을 일으키며 마침내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한국어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재일한인들도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긍지와 함께 한국어 공부에 열의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정착한 교민들 소위 ‘뉴 콤머(New Commer)’들도 한국에서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도일 하였으므로, 한국과의 경제적·문화적 연계아래 재일한인사회의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2. 조선족 사회

중국 조선족은 이중 민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민족으로서의 속성과 중화민족으로서의 속성이다. 이 두 가지 속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 내에 있으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어 사용능력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중국으로의 동화 현상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고유의 전통을 비교적 잘 보존해왔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한민족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들이 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인적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전통적 문화와의 공유점을 찾는 현상이 증대하고 있으며, 3·4세대의 조선족 젊은이들은 한류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현대 한국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한국의 문화 등에 대한 친화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가

중국 내 타 민족에 비하여 그 우수성이 떨어지고 있고, 조선족은 과거처럼 문화정도가 높다거나 민족자질이 높다고 자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조선족 사회의 교육의 쇠퇴 현상은 민족교육의 침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고려인 사회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약 60여년간 모국과의 단절에 따른 고립으로 인하여 콜호즈의 고려인 학교에서 민족언어 교육을 시행하였지만, 제 2세대 이후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한국식 성과 러시아식 이름으로 작명하며 러시아를 모국어로 사용해 왔다. 그리고, 고려인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콜호즈가 붕괴하고, 고려인들의 강한 도시로의 진출 및 활발한 상업활동 등이 전개되면서 타민족과의 통혼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구소련 및 새로운 독립국가들과의 수교와 더불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고려인들은 한국의 국력에 긍지를 느끼면서 한국어 습득에 대한 의욕과 함께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밀려들어 오고 있는 한류 물결은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 제고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교류의 활성화, 한류열풍, 연수기회 등은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 젊은이들에게도 한국어 공부 및 영화·TV 드라마 등의 한국 대중문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고, 고려인들에게는 모국에 대한 존재를 새삼 인식시키고 있다.

고려인들은 뿌리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의 각 주요 지역마다 고려인협회를 조직운영하고 있고, 산하에 전통예술가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IV.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1. 교육 인프라

가. 언어 및 민족문화 교육 인프라

모국어의 구사능력은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민족정체성 유지 함양 차원에서 언어 및 민족문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글 교육과 민족문화 보급을 접목시킨다. 즉, 최근 한국 TV 드라마 및 영화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 물결을 한글 교육 및 민족문화보급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의 단원들이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한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한글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KOICA 단원을 양적으로 증대시킨다.

셋째, 현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글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한글 교사 절대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급 한글 교육 지도 교사의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넷째, 한국어 방송 등을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개발·지원한다. 한국에 대한 포괄적 관심 및 이해의 제고를 위해 한국어 방송뿐 아니라 현지어 방송을 병행한다.

나. 직업교육 인프라

중국 조선족 및 중앙아시아 및 연해주의 고려인 사회는 농업화에서 공업화 및 정보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조선족 및 고려인 젊은 세대가 산업화 및 정보화의 물결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직업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는 삶의 기반인 동시에 경제적 기반이 집단농장이 붕괴되고 있으

로, 전환기의 직업교육은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조선족, 고려인 등 재외 한인의 생존 능력 증강을 위한 모국의 노력은 이들에게 모국의 존재를 새삼 인식케 하면서 민족 정체성 확립 및 제고에 직결될 수 있다.

다. 엘리트 교육 인프라

재외 한인사회의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는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뿐 아니라 재외 한인들의 현지 주류사회의 전략적 진출에 매우 중요하다.

엘리트 교육 인프라는 재외 한인 엘리트들의 활동 거점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엘리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라. 장학재단의 설립

장학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가정환경이 어렵더라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이는 재외 한인 학생들이 졸업후 거주국에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는 한민족으로서의 존재를 새삼 인식케 하도록 할 것이며, 한민족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둘째, 중국·CIS 지역 등 거주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에게 모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수학은 물론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모국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한민족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다.

2. 문화 인프라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주의(大韓主義)를 지향하여 세계한민족 공동체의 형성·구축을 추구해 갈 경우,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 인프라는 전통문화 인프라, 현대한국문화와의 접촉·교류 인프라 등으로 구축될 수 있다.

재외 한인들의 전통문화는 음식문화, 의례문화, 가무문화 등을 통해 계승되고 있는데, 일상생활속에서 침투(浸透)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음식문화이다. 일본의 경우, 먹거리를 매개로 재외 한인들은 물론 일본인들까지 모이도록 하면서 치마·저고리 등 한복가게, 민예품 가게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가게들이 자리잡도록 하여 소위 ‘장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행사때에는 전통예술을 공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한민족 문화 관련 모임의 터’를 전통문화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중국, CIS 지역에도 ‘한국장터’ ‘한국거리’를 ‘코리아 타운’을 지향하면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한국문화와의 접촉·교류는 현지 문화가 정서적으로 용이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야부터 전개하는 것이 전략적이며 효과적이다. 즉, 현지 문화에 동화되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재외한인 3·4세대에게도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에 편승하여 현대한국문화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민족정체성의 함양을 도모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와의 접촉·교류를 위한 한국 국내 인프라는 국내외 한인 문화예술인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전략적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며, 열린문화축제 등의 행사에서는 재외 한인들의 한민족 문화뿐 아니라, 거주국 문화와 접목된 문화 등이 소개되도록 전략적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문화를 통해 한편에서는 거주국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외 한인들의 상호이해 증진을 꾀하면서 한민족문화공동체를 추구해 가는데 있어서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경제 인프라

재외 한인들의 경제력은 거주지 주류사회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물질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족문화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 기반이다.

그런데 중국의 조선족들이 동북지역의 낙후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CIS 지역의 고려인들은 삶의 기반이면서 물질적 토대인 콜호즈(집단농장)의 붕괴로 인해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인프라의 구축은 민족문화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토대의 구축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

경제 인프라는 한편에서는 재외한인들의 삶의 기반의 확충으로서 거주지에 구축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외 한인 경제인간 유기적 교류 활성화 및 상호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해 모국을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는데, 경제 인프라의 구축·운영에는 문화 인프라로서의 시너지 기능 및 효과의 창출을 추구하는 전략적 기획·운영이 필요하다.

4. 교류 인프라

모국과 재외교민과의 교류 인프라, 재외 교민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는 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재외 한인들과 한국도 한민족 네트워크를 지향하여 교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해외 한민족 제전’, ‘재외 한민족 올림픽’, ‘한민족 예술제’, ‘한민족 문학제’, ‘한민족 IT기술 제전’ ‘세계한상대회’, ‘세계 상공인 대회’, ‘글로벌 한민족 경영인 대회’,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 대회’ 등 다양한 정례적인 한민족 행사를 모국과의 교류 인프라 및 상호간의 교류 인프라 구축을 지향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민족 네트워크를 지향한 교류 인프라는 재외 한인들의 거주지에서도 구축되고 있다. 재외 한인들의 거주지에서의 교류 인프라 구축은 교류 이상의 차원에서 전략적 추진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재외 한인들의 거주지에서 구축되는 있는 교류 인프라는 재외한인들이 거주지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정치·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순기능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획아래 추진되어 모국-재외 한인사회-거주지 주류사회를 연계시키는 교류 인프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재외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거주지 주류사회와의 전략적 연계를 추구할 있는 공간의 건립 및 설립을 지원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현지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등은 재외 한인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뿐 아니라 모국 연수, 유학, 비즈니스 등에 관한 상담 역할 등을 행하여 재외한인사회와 모국을 연계시키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행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민족 네트워크 및 문화공동체를 지향한 교류 인프라 구축은 재외한인들이 한민족의 자산으로서 모국과 거주국과의 교류에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배려와 함께 한국-재외 한인사회-거주지 주류사회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II. 동북아 지역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필요성	5
1.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의미	7
2.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필요성	19
III. 민족공동체 사례 연구	27
1. 유태인	29
2. 화교	63
3. 헝가리 민족	95
IV.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 현황	127
1. 재일한인사회	129
2. 조선족 사회	135
3. 고려인 사회	142
V.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151
1. 교육 인프라	153
2. 문화 인프라	159
3. 경제 인프라	162
4. 교류 인프라	163
VI. 결 론	167
참고문헌	171

표 목 차

〈표 Ⅲ-1〉 주요 지역별 유대인 인구 추정치	34
〈표 Ⅲ-2〉 주요 지역별 유대인구(1948년~2004년)	37
〈표 Ⅲ-3〉 주요 출신지와 이주 목적지 별 유대인구의 국제이민 절대 수치, % 분포, 출신국가 유대인구1천명당 연간 비율 (1969년~2002년)	39
〈표 Ⅲ-4〉 세계 유대인구와 전체인구(1945년~2004년)	41
〈표 Ⅲ-5〉 가장 큰 핵심적인 유대인 인구를 가진 국가	41
〈표 Ⅲ-6〉 1920년 트리아농 조약에 의해 주변 4국으로 편입된 헝가리 국민과 헝가리 민족 수	103
〈표 Ⅳ-1〉 고려인들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	145
〈표 Ⅳ-2〉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고려인의 태도	148
〈표 Ⅴ-1〉 2005년 재외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내역 (일본, 중국, CIS 지역)	155

I

서론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21세기의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지역은 대립과 갈등, 협력과 경쟁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대륙과의 단절에 따른 ‘인공의 섬’을 탈피하면서 21세기 동북아 허브(hub)로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즉, 이를 위해 한국은 국내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해외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아래 한국의 해외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한민족역량을 지향하여 기초작업인 전년도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를 바탕으로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에 관해 연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에 관해 살펴 본 뒤, 민족공동체의 사례로서 유대인, 화교, 마자르족 등에 관해 연구하고, 나아가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현황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한민족 문화 공동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제Ⅱ장 동북아 지역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관련, 동북아 한민족 문화 공동체의 의미,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한민족 문화 공동체의 필요성에 관해 살펴본다. 제Ⅲ장 민족공동체 사례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른 국적으로 살고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문화공동체를 유지해 오고 있고, 모국을 중심으로 상호 발전을 위한 상부상조를 어떻게 해오고 있으며, 민족공동체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운영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아래에서 유대인, 화교, 헝가리 민족 등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즉, 유대인 디에스포라(diaspora), 화교네트워크, 헝가리 소수민족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등에 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Ⅳ장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현황에서는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2004)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동북아 한민족 문

화공동체 현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일한인사회, 조선족 사회, 고려인사회 등의 일상적 생활에 어느 정도 전통 한민족문화가 스며들어 있고, 어느 정도 한국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어 교육 상태 및 인프라 현황, 한국과의 문화교류 현황 등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재일한인사회, 조선족 사회, 고려인사회의 문화공동체 현황을 언어능력 및 민족정체성, 전통문화의 계승, 한국문화 접촉 및 교류 등의 관점에서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Ⅴ장 동북아 한민족 문화 공동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에서는 ‘제Ⅲ장 민족공동체 사례연구’에서 분석한 유태인, 화교, 헝가리 민족 등 다른 민족 공동체 사례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동북아 한민족 문화 공동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즉, 동북아 지역의 한민족은 세대교체와 더불어 민족정체성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고려인·조선족 재외 한민족들은 삶의 기반인 동시에 경제적 토대인 콜호즈의 붕괴, 낙후된 경제 환경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존능력이 약화되면서 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한문화 공동체를 위한 교육인프라, 문화인프라, 경제인프라, 교류인프라 등의 구축방안을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서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배정호(서론, Ⅳ장, 재일한인사회 및 고려인 사회, Ⅴ장,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결론), 박영호(Ⅱ장, 동북아 지역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필요성, Ⅳ장 조선족 사회), Sergio DellaPergola(Ⅲ장, 유태인), 이진영(Ⅲ장, 화교), 최진욱(Ⅲ장, 헝가리 민족) 등의 공동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Ⅲ장의 유태인 부분에서는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배덕호 대표의 귀중한 정책조언이 많은 기여를 했다.

II

동북아 지역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필요성

1.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의미

가. 동북아 국제환경의 변화

21세기는 과거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복제인간의 가능성까지도 바라보는 과학혁명의 시대이다. 동시에 정보화, 세계화, 무역자유화, 문화의 상호 침투, 지역통합의 추세 등으로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각 나라들은 경제·에너지·기술 등의 차원에서 자국의 이익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질서의 또 다른 특징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 환경파괴, 인권, 국제조직 범죄, 사이버테러 등 초국가적인 위협 요인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동북아지역이란 지리적 개념이다. 그 속에 포함되는 나라들에 대한 일치된 규정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시킨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동북아지역에 개입되어 있는 정도와 영향력 때문에 동북아 지역 안보·경제 등의 문제를 논할 때 일종의 상수로서 고려된다. 몽골과 대만은 경우에 따라 달리 다루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지역을 논할 때 지리적 관점에서는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통상·투자·인적교류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의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한·중·일 3국만으로도 2004년 현재 세계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49%에 달하였으며, 같은 해 미국은 21.27%, 유럽연합(EU)은 20.9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¹ 이처럼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 3대 축의 하나이며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역동적인 경제

¹ CIA, *The World Factbook* 2005, "Rank Order - GDP"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계산함.

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추세를 지속한다면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20년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국력 신장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전반에 걸친 경제적 침체에서 탈피하여 2005년에는 연 5% 내외의 경제성장을 바라볼 만큼 경제회복의 국면에 있다. 한국은 경제와 민주주의의 동반 발전을 기반으로 역내에서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또한 지리적 위치나 에너지자원개발 및 파이프라인 연결 프로젝트의 진행 등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작용의 증대로 볼 때 동북아시아의 역동적 흐름의 한 부분이다. 최근 동북아시아에서는 역내 교역 및 상호투자액의 증가, 노동력의 이동 등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한·중·일의 동북아 3국 경제협력을 위한 연구,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이 좋은 예이다. 러시아 극동지역도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개발협력의 대상으로 급격히 부상되어 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며 또 동북아시아의 역동적 변화와 더불어 더욱 그 전략적 위치가 부각되는 요충지이다. 더욱이 한반도의 남쪽인 한국은 2003년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으며,²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동북아 국가는 물론 동남아 국가에서 일고 있는 ‘한류(韓流)’의 확산에서 보듯이 국제적 위상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반도의 북쪽인 북한은 경제적 피폐상태에 처해있으나 핵무기 개발문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고

² 산업자원부, “세계속의 한국경제 위상,” (2005. 1), p. 1; 각주 1)의 CIA, *The World Factbook* 2005 자료에 따르면 집합적인 유럽연합을 순위에서 제외하면 2004년 현재 세계 16위로 평가된다.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한반도 주변 환경은 미·일·중·러 4국 사이에 역학관계 재편성을 위한 상호 교차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대, 상호의존적인 국제관계의 발전, 공동의 안보이익 지향 등의 성격을 띤 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존의 영향력 유지·확대,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견제 등 경제·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관계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협력과 견제의 관계 전개에서 관통하는 현상은 전통적인 우방관계라는 명분보다는 자국의 이익이라는 실리추구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북아지역에는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갈등의 지속, 한·미 각각의 국내정치 지형 변화와 그와 연관된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국제적 위상의 부상 및 ‘패권적’ 야망의 대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 욕구,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러의 전략적 협력의 발전 등의 현상이 잠재적 또는 현재적인 갈등의 요소로 등장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 북한, 일본,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증대 현상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동북공정’), 댜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尖閣)열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일 간, 북·일 간, 한·중 간, 중·일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 위에서도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사안들 중에는 지역 국가 간의 제로섬적인 ‘일방 이익-타방 손해’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 협력 차원에서 지역의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적 협력사안으로 접근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자주의적 협력은 동

북아지역에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협력의 주된 양태로서 존재하고 있는 양자주의적 협력의 미비점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문제 등 지역의 안보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한·중·일 3국은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발전의 수준, 2차 대전 이후의 대립적인 동맹관계 구도, 지배와 피지배의 과거의 불행한 역사와 그에 대한 국가 간 갈등의 지속, 자국 중심의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 등에서 갈등적인 요인들을 안고 있다. 더욱이 21세기에 들어 새로운 각축 요인으로 부상한 에너지 등 자원 확보문제와 이와 연관된 영토문제의 지속은 갈등의 현재화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은 유럽, 미주 등 타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한국, 중국,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인 집단 등 각급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특성은 전통적으로 국가 간 상호작용의 중심 고리인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이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려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패권주의’ 현상의 등장을 방지하고 지역 안보협력을 구축하려는 노력,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같이 지역경제협력체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함께 역사, 전통, 문화, 지식, 대중예술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등장해있다.

³ Davis B. Bobrow, “Multilateral Approaches to Peace Building in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n-Governmental Six Party Talks on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sues and Agenda」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October 6~7, 2005).

나. 동북아문화의 유사성

탈냉전 시대의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동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 등 지역적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 차원의 경제통합의 경향이 세계화의 경향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EU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하곤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Euro)화를 사용하는 단일 통화권이 되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역내 경제의 활력을 위한 협력을 향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나, 그 협력 양식은 EU나 NAFTA에 비하면 아직 그 수준이 낮은 것이고 충분히 제도화되지도 않았다. 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이질성,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인종적·종교적 차이 등을 지적한다. 또한 유교적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가 후기 산업사회 내지는 탈산업사회의 경제발전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전통에 기초한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동아시아는 서구의 발전모델과는 다른 유형과 경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싱가포르의 리관유(Lee Kuan Yew)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Mohamad)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서구문명의 산물인 자유민주주의는 아시아적 문화풍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고유의 문화·가치·역사·전통·관습에 잘 맞는 아시아식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질서와 방종을 수반하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아시아 사회에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없으므로, 아시아 문화전통에 잘 맞고 각국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제도를 제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⁴

⁴ 김형기·우준모, “동아시아 정치변동의 쟁점과 과제,” 서경교·김웅진 외 지음, 『동아시아의 정치변동: 연구의 쟁점과 전략』 (서울: 인간사랑, 2000), p. 97.

유교문화 또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현재 세계질서의 흐름의 한 축인 지역화의 추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새로운 협력과 연대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를 지역적, 경제적 발전 단위로서 뿐만 아니라 인종과 문화, 역사와 문명이라는 공동체적 기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제도화하며 통합하는 작업이다.⁵ 그 내적 논리와 외적 경계를 설정해주는 주요한 동기는 지식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연원을 한자문화권이란 오랜 전통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특히 동북아지역의 한·중·일 3국간에는 19세기에 공통적으로 경험한 근대적 민족주의에 대한 각성에서도 연대성 내지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단순히 한·중·일 3국이 유교문화의 토대 위에서 공통의 지식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기적 전환기의 시대적 흐름에 역동적으로 적응하는데 충분한 지적 전거(典據)를 제시할 수 없다.

한·중·일 3국이 서구 문명의 도전에 응전하는 방식에서 일본은 먼저 근대화에 적응하면서 서구에 대항하기 위하여 3국이 연합해야 한다는 ‘아시아연맹론’을 제기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은 ‘동양3국 정립론’을 제기하였다. 즉 3국의 전통적, 역사적 경계를 존중하여 동북아의 질서를 재건하려는 시각이 1세기 전에 3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했다.⁶ 그러나 일본의 ‘아시아연맹론’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로 나타나 한·중을 침략하고 불행한 역사를 배태하였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한 역사적 반성의 미결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3국간의 갈등의 요소로서 남아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국과 일본, 중국의 발전의 길은 달랐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어 자본주의 한국 및 일본과는 다른

⁵ Sung-Hwan Cho·Yong-Jick Kim, “Views of Asian World by Modern Intellectuals in the Northeast Asia,” *NAIS, Agenda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Its Ideal & Realit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Opening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Northeast Asia Intellectual's Solidarity (NAIS) Movement, pp. 28-29 November 2001), p. 235.

⁶ 위의 글, p. 253.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 치하 중국에서 유교적 전통은 허물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역사가 본질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유교적 전통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⁷ 중국은 1978년 제11기 3중 전회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전통 문화의 계승을 둘러싼 논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일본의 성장 잠재력은 이미 일본의 전통 문화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되기 시작하였다.⁸ 한국 또한 신흥공업국가(NICs)의 일원으로서 그 빠른 성장 동력의 원인에 대한 문화적 설명이 일기 시작하였다. 결국 동북아시아 3국에 관통하는 것은 공통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전통에서 찾아진다.

허만 칸(Herman Kahn)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기적은 유교문화에 기인하며 동아시아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현대적 상황에 적응된 신유교문화로서 이것은 서구의 여러 문화보다도 근대화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신유교문화가 예컨대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이 뛰어난 조직화의 능력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개인과 가정의 근엄함, 교육의 중시, 학문이나 문화의 방면에서 업적을 이루려는 욕구, 직업과 가정과 의무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특질이 개인 사이의 협력과 인간관계 그리고 계층적 질서를 중시하는 또 다른 문화적 경향과 결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과 새로이 부상한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가 그리고 중국을 묶어 이들이 모두 신유교사회에 속한다고 판정함으로써 유교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성립시키는 데 기여하였다.⁹

유교문화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아시아적 가치는 “아시아인들이 공유한, 그러면서 서구와는 구별되는 아시아 고유의 세계관과

⁷ Thomas A. Metzger, *Escape from Predica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⁸ Robert Bellah, *Tokugawa Religion: the Cultural Root of Japan* (New York: Free Press, 1957).

⁹ Herman Kahn,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Boulder: Westview Press, 1979).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⁰ 이 용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의 요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시아가 지닌 특성을 표현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행인정사상(行仁政思想), 가족주의, 정실주의, 인치주의, 권위주의, 민족의식, 공동체의식, 교육열, 근면성, 근검절약 등 주로 유교사상에서 나온 동양의 특유한 가치를 말한다.¹¹ 이러한 특성으로 동아시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나, 한국, 중국, 일본 등은 한자문화권의 전통을 일정한 정도로 공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인 전통과 가치체계를 배경으로 이들 국가들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자본주의로의 세계경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아시아적 가치나 유교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동북아시아의 유교적 자본주의가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쳐 세계경제질서에 적응을 해나가면서도, 그 전통문화와 어울리는 경제운영의 독자성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살려 나갈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는 3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의 기본적인 질서원리를 일군만민(一君萬民)의 중앙집권체제, 충효일치(忠孝一致)의 인간관계, 농본주의의 경제관, 평화주의의 경향과 교육의 중시 등 네 가지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¹² 즉 유교적 자본주의는 서구의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와는 달리 인간존중과 공생주의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의 동북아시아는 발전의 선후 차이와 자본주의 도입의 차이가 있지만 유교문화를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집단주의의 유교문화가 높은 경제적 성과와 양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

¹⁰ 최영진,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반성,”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2호, pp. 285-96.

¹¹ 김형기·우준모, 위의 글, p. 101.

¹² 김일곤, “유교적 자본주의의 인간존중과 공생주의”
<<http://user.alpha.co.kr/~eastasia/forum>>.

아니라 비교적 공평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성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북아시아 3국의 독특한 문화적 유산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동인이 되기도 하며, 아시아적 특성을 가진 정치체제를 산출하기도 한다. 동북아 3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적 유사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보다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둘째, 공동체주의적 특성으로서 그 구성원들을 호혜적 쌍방관계로 묶어 거대한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보다는 책임과 집단적 연대를 강조한다. 셋째, 전통사회의 특징인 연고주의적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넷째, 권위와 계서(階序)제를 존중하는 전통이다.¹³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 3국의 문화적 유사성은 경제 질서에 있어서도 집권적인 질서에 의한 동원체제, 계획 선도적인 혼합경제체제의 운용, 사회질서의 안정, 건전한 노동관에 입각한 경제 질서 등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를 조직화하고 가족적인 인간관계의 윤리를 체계화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가족적 집단주의의 문화, 공생주의적 자본주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¹⁴

다.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의미

동북아 3국간의 전통 문화적 유사성은 지역협력을 위한 일정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정보화, 세계화, 과학기술의 혁명 등 21세기의 빠른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동북아 3국들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간 차원에

¹³ Crark, D. Neher·Ross Marlay,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New York: Westview Press, 1995); 김형기·우준모, 위의 글, pp. 97-98 재인용.

¹⁴ 김일근, “유교적 자본주의의 인간존중과 공생주의”
(<http://user.alpha.co.kr/~eastasia/forum>).

서의 정치, 경제, 안보 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비정부간 차원에서의 협력관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는 지역의 연대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사회 발전 단계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즉 중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 개방·개혁과 자본주의화에 따른 사회적 이동성, 자율성, 다양성의 증대 현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양태를 내재화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사회가 발전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통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대 담론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파악과 확립, 특히 최근 다시 이 지역에서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 및 역사교과서 문제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¹⁵ 더욱이 중국이 경제발전 중심의 국가경영과정에서 등장한 사회·정치적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민족 통일국가’론을 내세워 한국의 고대사인 고구려 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시키는 몰지각한 행위를 범하는 중국판 역사왜곡의 문제도 등장하였다.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극동지역 및 일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 한민족은 이와 같은 동북아 역내의 하위집단으로서 존재한다. 이들 해외 한민족 간의 관계, 한국과 이들 해외동포사회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의 국가 간 관계라는 상부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탈냉전시대,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해외 한민족 간의 교류 현상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케 한다. 동북아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 한민족 동포사회는 법률적 조국의 틀 속에서

¹⁵ 박제훈,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 555.

도 모국 또는 고국, 나아가 마음의 조국으로서의 한국과의 접촉 및 교류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한민족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와 규모, 내용의 측면에서 크고 작은 네트워크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나라들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한민족 동포사회 간에는 다른 국가·정치체제에서 생활해온 결과로서의 사고방식, 가치관 등에서의 차이가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아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중국 조선족, 러시아지역의 고려인들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 또는 조선인(북한인)과 함께 동일 민족으로서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공통의 언어적, 문화적 속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분단 이후 오랜 기간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남북관계도 21세기에 들어 과거와는 달리 일정한 정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일제 강점의 희생물으로써 일본에 정착하게 된 재일동포 사회의 한국과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의 역사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탈냉전 이후에는 일본 내의 한민족 사회도 이데올로기에 따른 간극이 좁혀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0년이 넘는 한·중 및 한·러 수교의 역사는 불행한 과거 역사로 인해 타지에 정착한 한민족 간에 상당한 교류와 이동의 상황을 낳고 있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도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한국으로의 이동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이나 유학생들은 새로운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지역 한민족 간의 이동과 교류는 현재의 국적을 뛰어넘어 한민족이란 혈통과 여전히 공유점을 찾을 수 있는 전통과 문화 등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직접적인 이동 및 교류와 더불어 정보 및 의사소통 매체를 통한 문화적 공유성의 확산으로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합체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란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신념과 가치관의 공유를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다면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¹⁶ 문화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사회 성원이 공유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 혹은 양식으로서 사회적 제도들과 세계관, 가치, 윤리, 사고방식 등의 체계”이다.¹⁷ 따라서 ‘문화공동체’란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 그리고 관행을 지니면서도 상호 존중과 의존의 필요성에 의하여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체로서의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 공동체를 의미한다.¹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란 생활 터전의 차이와 각각의 발전과정에서 체화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 관행들을 인정하면서도 공유하는 문화적 양식과 삶의 방식, 가치관 등을 통해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이루는 한민족의 네트워크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문화공동체는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기본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¹⁹

첫째, 이웃 나라나 민족과의 문화적 공유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응력과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다른 나라와 민족이 사용하는 문자와 언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인식 내지는 불신, 왜곡된 이미지 등 서로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이웃임을 인정해야 한다.

¹⁶ Michael Taylor,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¹⁷ 김광익·전영평,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3.

¹⁸ 위의 책, p. 15.

¹⁹ 김광익·전영평,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pp. 26-31.

넷째, 하나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그에 대한 약속은 모두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섯째, 서로 다른 체제, 이념, 국가의 성격 및 문화체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지식과 과학기술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일곱째, 공동체 구성 국가들의 지도자, 지식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동체 비전의 공유와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덟째, 공동체의 비전과 구상, 그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세대 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아홉째,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공동운명체적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필요성

가. 한국의 국가 비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21세기 세계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국가 간 경계를 무너뜨리는 통합의 흐름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민족·종교·문화 등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흐름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동서 진영으로 갈라졌던 세계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의 물결이 시대적 흐름으로 지나가고,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지구의 반대편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어느 한 나라도 독자적으로 경제를 꾸려 나갈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화·세계화의 확산은 동시에 각 나라, 기업, 개

인 간에 무한경쟁의 원리가 작동하고 정치적인 유동성이 증대되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소비에트 사회주의 현상의 종언이 가져오고 있는 결과는 자유주의의 역사적 승리일 수도 있으나, 우리 인류를 지구적,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경제·영토적 경계와 정체성을 둘러싼 새로운 혼동의 시대에 당면하게 할 수도 있다.²⁰ 미국과 일부 근본주의적 이슬람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는 첨예한 충돌이나 약소국 북한과 강대국 미국 간의 갈등은 21세기적 차원의 정체성의 갈등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격변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대와 역사의 변화 흐름을 냉철하게 읽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미래의 도전에 사려 깊게 대처하는 일이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역사의 흐름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강제로 병합된 민족적 수치를 경험하고 그 결과로서 분단의 씨앗을 잉태하였던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 하나로 결집할 수 없었던 한민족의 역량을 다시 모으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1세기의 초엽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선진국으로서 또 국제사회의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서 도약하는, 즉 선진·문명국으로의 진입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한민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참다운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진·문명국인 것이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의 유산을 올바르게 청산하지 못한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러 정치·사회적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예컨대 일제의 압제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하고

²⁰ Ken Jowitt, *New World Disorder: The Leninist Extinc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 328-329.

자주독립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희생한 많은 애국인사와 그들의 후손들이 올바르게 대접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반면에, 일제에 영합하여 권세를 누린 많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 계층으로 활동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미흡한 과거 청산이 군사권위주의적 정권을 등장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 곧고 바른 국가를 건설하는 작업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터전이 된다. 그러나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 비전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도전에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21세기의 정보화·지구화·과학혁명화시대에 역동적인 국가로서 발전하는 일이 함께 추진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선진·문명국으로서 진입할 때, 한민족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관통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선진·문명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확고히 세워질 때 더욱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의 분단현실을 극복하여 민족국가를 완성해야 하는 과업은 21세기에 우리가 선진·문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로 통일된 국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국가’, 즉 ‘강중국(強中國)’ 달성을 21세기 국가비전으로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또는 국민적 역량 신장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비전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류의 보편적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통일된 국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복리증진에 주도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통일은 복고적인 통일이 아니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동북아지역에서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여 남북한이 협력하는 과정이 곧 통일이며, 이는 통일이 미래의 한민족 역사를 재창조하는 과정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국가적 비전은 현실의 측면에서는 분단 극복을 위한 한반도의 갈등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반도가 동북아 차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유럽의 틀 속에서 평화와 안보를 추구했던 서독의 장기적이고도 꾸준한 외교 전략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주변국가의 지원을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²¹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동북아차원의 구상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특히 한반도가 북한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인 위기의 잠재적 발화점(flash-point)으로 간주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변국가로부터의 협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평화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경제협력과 평화의 안정화를 상호 연관 속에서 만들어나가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²²

요컨대 한국은 세계에서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경이적인 성장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이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어 왔으며, 한국의 국가적 위상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²¹ Wolfram F. Hanrieder, *Germany, America, Europe: Forty Years of German Foreign Poli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²²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비전과 과제』 (서울: 국정홍보처, 2003), pp. 13-14.

국가적 위상과 능력에 걸맞도록 부여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새로운 지평의 출발점은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결집할 수 없었던 한민족의 잠재적 역량을 현재화하도록 모으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분단 현상의 극복을 향한 평화공존과 그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선진·문명국가를 건설하고 통일을 지향하며, 그 일련의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는 진취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04년의 세계 11위의 경제력 달성은 비록 분단국가로서 출발했으나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이며, 이제는 경제력을 뛰어 넘어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제반 측면에서 공동체적 인식 위에서 세계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군(群)으로의 진입을 국가비전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필요성

‘문명 충돌론’을 주장한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교류와 협력이 인적 접촉을 가져올 뿐이지 반드시 화합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²³ 즉 경제성장은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 불안은 낳아 국가간, 지역간 세력균형에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아시아의 경제적 서광은 아시아의 정치적 그늘, 곧 아시아의 불안정과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예측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제기되었던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서구 문명에 대한 도전이라는 서구 중심적 문명 내지는 문화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적어도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충분히 평가하고 그로부터 오는 새로운 도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경제력으로 서구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²³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pp. 218-229.

경제력의 향상에 따라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 내지는 유교문화와 그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3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다양한 문화와 지역적 이질성을 이유로서 갈등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헌팅턴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편승'하여 이러한 발전에 합류하거나 '견제'를 추구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는 국가간 분쟁이 싹 틀만한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²⁴ 특히 분쟁의 위험 지역으로서 한반도와 중국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싹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립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갈등의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이 또 다른 전쟁을 벌일 확률은 매우 낮으며, 동북아 3국은 과거 역사의 갈등적 잔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동질성과 상호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의도적인 분쟁의 가능성은 점차로 희박해질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WTO 체제 가입을 계기로 국내에서의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등 경제 이외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의 관계 변화의 흐름은 또한 이 지역 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 간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 동북아시아에는 역사적 타의에 의해 새로운 터전을 자신들의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어 살아온 한민족 동포사회가 있다. 과거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교류와 차단되었거나 단절적·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역사적 경험은 같은 문화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과 또는 그들 동포사회 간의 차이를 낳았다. 1990년대 초 한국과 중국, 소련(러시아)의 국교 수립은 인위적 차단의 벽을 무너뜨렸으며,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교류와 이동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²⁴ *Ibid.*, pp. 218-229.

한편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단일민족사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의 극단적인 반목과 대결구도 속에서 제도상의 차이와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양식, 전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치관마저도 크게 달라졌다. 분단 이후 생성·발전된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이 남북한에서 별개의 공동체로서 발전하며 살아왔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미래지향적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이상적 모델로 볼 수 있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것은 통일을 단순히 정치체제의 결합으로서가 아니라,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을 통해 점진적으로 한민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민족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 민족공동체의 형성이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는 남북한 주민의 인간적인 삶을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체 한민족의 공존공영과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의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동북아 지역 차원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구축하는 데 해외 한민족 사회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지역 한민족사회 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 한민족 문화공동체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매개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외한민족의 역량을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합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그 수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만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문화적 연대를 증대시키는 데 한민족 문화공동체가 모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협력과 평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Ⅲ

민족공동체 사례 연구

1. 유대인

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형성과정

(1) 특수성과 보편성

유대인 이주자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또한 이들은 중국, 미국, 인디안 이주자와 더불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주민들 중의 하나이다. 유대민족의 이주가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시기는 19세기와 20세기로,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폴란드 민족과 함께 거대한 규모의 국제적 이주가 행해졌다. 또한 20세기 후반부에 와서는 세계화로 인한 이주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최근의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유대민족은 누구보다 오래된 민족이지만 제대로 된 주권국가의 틀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냈다. 이스라엘은 고대 유대종교에 상징적 의미가 큰 예루살렘의 Second Temple이 붕괴된 서기 70년 이후, 1948년 5월 14일에 와서야 유대민족을 위한 정치적 주권국가로서 처음으로 독립했다. 지난 57년 동안 이스라엘에서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주운동이 일어나 이스라엘 이주자들이 생겨났지만, 이는 유대인 이주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 세계 곳곳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정되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유대민족과 유대 문명은, 집단학살(Holocaust)을 포함한 위협과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다른 문명에 동화되지도 않았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와의 관계와 같은 역사적 현상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근대국가의 형태가 형성되기 훨씬 전인 2천년을 넘도록 나라없이 살아 남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 민족의 나라와 이스라엘 국민들의 나라

로서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특수성의 기저에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사상들과 규범, 가치 체계와 민속학을 아우르는 “유대주의”가 존재한다.

유대민족은 세계 어디든 정착하여 살지만, 유대주의는 다른 종교와 문화와 대조적으로 수동적이거나 숙명론적이지 않았으며, 역사적으로 외부의 압력과 변화하는 정세에 잘 적응해 왔다.

한편 이스라엘 독립선언은 이스라엘 사회의 이중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등 모든 차별을 배제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내 시민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이스라엘의 국가이성(raison d'être)은 역사적으로 동등한 기회뿐 아니라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마저도 주어지지 않았던 유대인 민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즉 보편성을 지켜나가면서도 동시에 유대인 문제와 같은 특정 민족에 치우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발췌된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역사적이고 당연한 권리의 힘과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안에 의거하여, Eretz-Israel(편집자 주 : 이스라엘의 땅, 혹은 성스러운 땅, 후에 팔레스타인이라 불림)의 유대인 국가, 즉 이스라엘의 설립을 선언하는 바이다.....이스라엘은 유대인 이주와 망명자들의 귀환을 환영한다. 이는 나라안의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나라발전의 촉진을 위함이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종교, 인종, 성별에 관계없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교와 양심과 언어와 교육과 문화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모든 종교의 성지를 보호하며,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충실한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이민을 개방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적

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 흩어진 유대 민족이 이민을 통해 Eretz-Israel의 유대인들과 다시 결합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의 오랜 바람인 이스라엘 상환을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와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한정된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과의 상호관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해외 유대인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950년 6월 제정된 귀환법(Law of Return)이다. 이 법은 세계의 모든 유대인과 그들의 3대 자손과 배우자(유대인이 아닌 경우도 해당됨)에게 거의 무제한적 이주의 권리와 시민권, 그리고 관련된 사회경제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귀환법에는 모든 유대인의 이스라엘로의 이주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여, 이는 이후 이스라엘로의 대규모 이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 이스라엘 인구의 근간이 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권리 부여의 측면에 있어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점차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귀환법은 1930~1940년대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주의 자유를 빼앗기며 겪었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비극을 바로 잡는 데에도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귀환법에 제기되는 주요 의문사항은 바로 “누가 유대인인가”라는 문제이다. 1950년의 첫 승인 이후로,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번에 걸친 수정이 있었지만 5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대법원의 감수 아래 있다. 결국 채택된 안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목적을 감안할 때 ‘유대인’은 유대인 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개종하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 단순히 보이는 문구는 실제 생활에 적용되면서 또 다시 다수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개종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개종의 권한을 주어야 하는가? 개

중은 이주 전과 이주 후 어느 때에 행해져야 하는가?” 등과 같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논쟁들에도 불구하고 귀환법은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잇는 가장 중요한 법적, 인종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2) 역사적 형성 과정

2004년 세계의 유대민족은 전년보다 4만명가량 증가하여 1,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1980년 후반 이후로 세계에 많은 정치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구소련의 붕괴, 독일의 통일, 25개국으로의 유럽 연합의 확장(2004년 5월 1일 새로운 10개의 가맹국을 포함한), 남아프리카의 체제변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불안한 정치경제적 사회양상,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부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 등이 그것이다. 유대 인구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구소련지역에서의 대규모 이주, 그리고 이스라엘의 급속한 인구 증가가 가장 가시적인 예이고,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유대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지리학적 이동성과 지속적인 분열현상, 그리고 세계화에 발맞추는 나라간의 연합으로 인해 80%가 넘는 유대민족이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에 살고 있고, 95%가 넘는 인구가 열 개의 강대국들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G8국가들 중 여섯 나라(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러시아연방, 독일)에 전체 유대인구의 87%에 해당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다. 이러한 집단들이 사실상 세계의 유대사회의 규모와 경향을 좌우한다.

유대인의 역사적 형성과정은 유대인의 정의, 유대인구의 기원과 이동의 역사를 통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 정부 이민 수용의 법적 기반인 귀환법(Law of Return)은 새 유대이민에게 시민권과 기타 시민적 권리를 즉각 부여한다. 수정 귀환법에서 유대인의 정의는 ‘유대인 모친에게서 태어났거나, 유대교(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등의 종파와는 관계없음)로 귀향했고 다른

종교적 정체성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귀환법에 따른 자격을 잃게 된다. 귀환법은 현재 유대인인 사람들, 그들의 자녀, 손자, 그리고 유대인 및 비유대인 배우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표 Ⅲ-1〉은 지난 2천년 동안 세계유대인구와 주요정착지별 유대인구의 발전 개요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20세기 전까지 전체 세계인구가 비교적 꾸준하고 천천히 발전하는데 비해, 유대인구는 세 번의 시기를 통해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왕들의 시대이다. 다윗왕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국의 국경 안에서는 200~250만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 지배하에 살았던 비유대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B.C. 8세기 예루살렘 제1성전의 함락과 이스라엘인들의 바빌론 추방 후, 유대 디아스포라의 영구 기반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로 유대인구가 크게 늘어난 시기는 하스모니아(Hasmonean) (B.C. 3~2세기)시대 예루살렘의 제2성전 건축 시기에 즈음한다. 이 두 번째 시기 인구 수는 B.C. 1세기 동안 약 4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로마제국에 대항한 1~2세기 동안의 투쟁과 최종 패배가 유대인구의 극적인 감소를 가져왔다. 이 시기를 통하여 100~150만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 주된 원인으로 유대인 정체성의 상실과 그리스도교와 그 뒤를 이은 이슬람 헤게모니하에서 주변 문화에 유대인구의 상당 부분이 융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시기는 사망률과 출생률의 전반적 감퇴라는 근대 인구변화 과정의 영향을 받던 시기이다. 대부분 동유럽에서 발생한 18세기 후반,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유대인구 급상승은 사망률과 질병률이 다른 인구 그룹보다 먼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650만 명까지 치솟았던 이 안정적 인구 팽창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600만명이 학살된 쇼아(Shoah)(편집자 주 : 절멸 혹은 파국을 뜻하

는 히브리어로 ‘유대인 대량학살’의 의미)로 급격히 그 끝을 맺게 된다. 전쟁 후, 전세계적으로 남은 1,100만명이 현재 1,30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세계유대인구의 전체성장률은 0에 가깝다.

〈표 Ⅲ-1〉 주요 지역별 유대인 인구 추정치(2004년 1월)

(단위: 1,000명)

연도	수 (단위: 1,000명)						세계총인구 중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총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	서유럽	동유럽 · 발칸	미주· 오세아 니아	
1	(3,000-6,000)	(1,000-2,500)	(2,000-3,500)			-	(33-42)
500	(600-1,200)	(200-300)	(400-900)			-	(25-33)
1170	1,200	5	1,045	103	47	-	0.4
1300	1,200	3	747	385	65	-	0.3
1490	1,300	5	695	510	90	-	0.4
1700	1,100	5	372	146	573	4	0.5
1825	3,281	7	533	458	2,272	11	0.2
1880	7,663	24	606	1,044	5,727	262	0.3
1939	16,500	445	1,155	1,350	8,150	5,400	2.7
1948	11,185	650	1,325	1,035	2,515	5,660	5.8
1970	12,633	2,582	693	1,119	1,969	6,270	20.4
2004	12,990	5,165	122	1,068	468	6,167	39.8

출처: Adapted from de Tudela (ca. 1170), Baron (1971), DellaPergola (1992, 1997, 2004).

한편 고대와 중세초기에 이루어진 이주가 아주 최근까지의 유대인의 지리적 분포를 결정지었다. 유대인구 이산의 주요 단계는 주요 이주 흐름과 정착지에 따라 7가지 과정을 밟게 된다. (1) B.C. 8세기 점령과 제1성전 몰락으로 시작된 Eretz Israel(이스라엘 영토)에서부터 Bavel(바빌론)으로의 첫 번째 디에스포라 단계 (2) Shivat Zion (시온으로의 귀환-Return to Zion) 운동으로 바빌로니아 유배에서 4만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의 이주 (3) 제2성전 몰락과 더불어 일어난 두 번째 디에스포라(서기 1~2세기) 단계. 이탈리아 반도 남부, 북아프리카와 남유럽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의 유대공동체의 탄생 (4) 4~10세기까지로 추정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에서 북쪽으로 향한 이주. 현재 동북 프랑스와 북서 독일 일부인 라인계곡 주변 지역에 아쉬케나지(Ashkenazi) 유대사회의 초기 중심부가 발생 (5) Babel로부터 서쪽을 향해 아프리카 북쪽 해안과 유럽 남쪽 해안, 특히 이베리아 반도에 도달한 이주 (6) 11~16세기 기간, 동유럽을 향한 유대인 아쉬케나지 정착지 팽창 (7) 예멘,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산맥, 흑해의 북쪽 해안, 이디오피아에 이주하는 과정으로 나뉘어진다.

각 주요 유대인 이주운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부만이 기존 공동체에서 이주했으며 대부분은 잔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기존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종종 소멸 아니면 심각한 인구 침식으로 이어졌다. <표 Ⅲ-1>에서 잘 나타나듯이 1170년의 유대인구는 총 1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유대 인구의 80% 이상이 아시아 대륙에 거주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중동에 거주했으며 동유럽 거주 인구는 극히 적었고 드문드문 산재해 있었다. 이후 2~3백 년 동안 동남 지중해에서 서유럽으로, 그리고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향한 이주를 통해 세계 유대 사회의 지리적 구성이 변경되게 된다. 이들 지역 공동체의 성장 또한 출생과 사망률의 차별적 효과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공동체 중 일부는 완전히 융화되어 사라졌고 그 결과 “사라진 부족”이라는 전설이 생겨난다.

1170년에서 1490년까지 유대사회의 중심은 서쪽으로 이동해 유럽으로 옮겨왔고 서유럽의 유대인구 중심은 몇 차례의 연속적인 추방으로 주기적으로 말소되었다. 특히 15~16세기 전환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되었다.

이렇게 포괄적인 동유럽 유대인구 지리적 분포의 정의에서 유대인구는 1300년 25,000명, 1490년 5만명, 17세기 중반 Chemelnitzky

학살 이후 25만명, 1765년의 91만명, 1825년에 225만명, 1880년 550만명 이상, 1900년 850만명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세기 들어 세계 유대인구에 관련해, 두 개의 일련의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즉 제2차세계대전 동안의 쇼아(Shoah)와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것이다. <표 Ⅲ-1>에서 동유럽과 중부 유럽에 있었던 대규모 유대공동체가 급격히 사라져갔고 서쪽으로 세계유대인구의 중심이 계속 옮겨졌음을 볼 수 있다. 1948년 건국 이후, 이스라엘은 유대인구성장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에서 2004년까지 이스라엘의 유대인구는 10배 이상 늘어났고 전체 유대인구에서 차지하는 몫도 5%에서 40%로 늘어났다.

<표 Ⅲ-2>에 상세히 예시되듯이 20세기 후반기 세계유대인구 분포의 변화를 볼 때,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에서 유대인 인구가 거의 사라졌고, 남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서유럽과 북미에서 안정세를 나타냈고, 오세아니아와 이스라엘에서 크게 성장했음이 눈에 띈다.

1970~2003년 동안, 세계총인구는 70% 이상으로 거의 25억 명이 늘어났는데, 이에 비해, 총 유대인구는 2%, 25만명이 늘어난 것이 고작이다. 유대인구성장률은 0에 가깝고, 2004년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세계인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매우 작다. 세계인구 천명당 2명 정도이지만, 미국 인구에서는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는 약 1% 이다. 1970년과 2003년 사이 유대인구 감소율을 보면, 前소비에트 연방(FSU)의 유럽지역에서 거의 80%, FSU의 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91%, 나머지 동유럽과 발칸 지역에서 56%, 남아프리카에서 36%, 남미에서 22%가 줄었다. 이만큼 크진 않지만 북미(-0.5%), 서유럽 (-5%)에서도 유대인구는 감소했다.

21세기 초, 총 유대인구의 92%가 삶의 질이 높은 20% 상위 국가에서 살고 있다.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적 안정과

법적 평등의 전통이 잘 유지된 국가에 유대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로 약 480만명의 유대인이 국제이주에 참여했다. 1948~1968년: 190만명, 1969~1988년: 100만명, 1989~2003년: 190만명. 1969년 이후 이스라엘은 290만명의 유대인 이주민의 59%를 받아 들였고 나머지 41%는 주요 서구 국가에 분포되었다.(〈표 III-3〉참조)

〈표 III-2〉 주요 지역별 유대인구(1948년~2004년)

지역	수(단위:1,000명) ^a			% ^a			% 변동		
	1948 ^b	1970 ^c	2004 ^d	1948 ^b	1970 ^c	2004 ^d	1948 ^b -1970	1970-2004	1948-2004
세계 총계	11,185	12,633	12,990	100.0	100.0	100.0	+13	+4	+16
아시아	1,275	3,080	5,206	11.4	24.3	40.1	+142	+69	+308
아시아내 이스라엘	650	2,582	5,165	5.8	20.4	39.8	+297	+89	+695
아시아내 구소련	350	394	21	3.1	3.1	0.2	+13	-92	-94
기타 ^e	275	104	20	2.5	0.8	0.2	-62	-80	-93
아프리카	700	195	81	6.2	1.6	0.6	-72	-58	-88
북아프리카 ^f	595	71	5	5.3	0.6	0.1	-88	-89	-99
남아프리카 ^g	105	124	76	0.9	1.0	0.6	+18	-33	-28
유럽	3,550	3,088	1,536	31.7	24.5	11.8	-13	-50	-57
서유럽 ^h	1,035	1,119	1,068	9.3	8.9	7.9	+8	-5	+3
동유럽과 발칸 ⁱ	665	212	94	5.9	1.7	0.7	-68	-56	-86
유럽 내 구소련 ^j	1,850	1,757	374	16.5	13.9	3.3	-5	-79	-80
미주	5,620	6,200	6,059	50.2	49.1	46.6	+10	-2	+8
북미 ^k	5,100	5,686	5,661	45.6	45.0	46.0	+11	-0	+11
남미	520	514	398	4.6	4.1	3.2	-1	-23	-23
오세아니아	40	70	108	0.4	0.5	0.8	+75	+46	+54

a: 반올림으로 인한 작은 차이 존재. b: 5월 15일. c: 12월31일. d: 1월1일. e: 유럽에 속한 터키의 아시아 지역. f: 이디오피아 포함. g: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기타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 h: 2004년 1월 5일 유럽연합 가입 국가제외. i: 2004년 1월 5일 유럽연합 가입국가 포함. j: 러시아의 아시아지역 포함. k: 미국, 캐나다. l: 호주, 뉴질랜드.

총 유대 이주민의 55%가 동유럽에서, 16%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13%가 서구 국가, 16%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다. (출신국가의 유대 인구에 비해) 외국으로의 이주 빈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숫자적으로 고갈된 공동체에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동유럽이 잇고 있고, 이스라엘과 서구 국가에서 훨씬 낮은 비율로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로부터의 이주(yeridah)빈도는 이스라엘과 등등한 사회경제적 개발 레벨을 가진 국가에서 기대되는 알리아(aliyah)율과 똑 같다. 이와 유사하게, 유대인의 이민 의사결정은 이스라엘과 디에스포라 양쪽에서 생활방식, 사회경제적 제약과 기회의 제공, 개인 안전 등 실질적인 고려사항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인구와 공동체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좀 더 많은 유대인 이주자를 유치하고 유대인 거주자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창출 능력이 이스라엘이나 세계 어디서나 중대한 정책 우선 순위가 된다.

〈표 Ⅲ-3〉 주요 출신지와 이주 목적지 별 유대인구의 국제이민 절대 수치, % 분포, 출신국가 유대인구 1천명당 연간 비율 (1969년~2002년)

출신지와 이주목적지	1969-1976	1977-1988	1989-1996	1997-2002	합계
절 대 수 치, 1,000명 단위					
총 계	451	589	1,240	535	2,815
연평균	56	49	155	89	83
%					
총 계	100	100	100	100	100
동유럽 출신지에서	39	41	64	62	55
서구 국가로 이주	8	29	23	25	22
이스라엘로 이주 ^a	32	12	41	36	33
아시아-아프리카 출신지에서 ^b	14	14	19	10	16
서구 국가로 이주	5	7	1	1	3
이스라엘로 이주 ^a	9	8	18	9	13
이스라엘에서 서구 국가로 이주	20	24	11	17	16
서구 국가에서 이스라엘로 이주	27	20	5	12	13
지역 소계					
서구 국가로 이주	33	60	35	43	41
이스라엘로 이주 a	67	40	65	57	59
출신국가 유대인구 1,000명당 연간 이주					
총 계	4	4	12	7	6
동유럽 출신지에서	10	12	110	97	51
서구 국가로 이주	2	8	38	40	20
이스라엘로 이주 ^a	8	3	72	57	31
아시아-아프리카 신지에서 ^b	44	73	146	134	97
서구 국가로 이주	14	32	42	13	27
이스라엘로 이주 ^c	30	40	94	121	70
이스라엘에서 서구 국가로 이주	4	3	4	3	4
서구 국가에서 이스라엘로 이주 ^e	2	1	1	1	1

a: 1970년 이후 이주 시민 포함(서구출신). b: 1990년 이후, FSU의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아프리카에 포함됨. c: 여기서는 이스라엘로부터의 모든 이민 포함.

출처: Sergio DellaPergola의 "The Global Context of Migration to Israel" (1998) 58에서 발췌. 이스라엘 중앙 통계 부처(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IAS, 기타 소스 데이터에 기반.

나. 유대인 디아스포라 실태 - 지리적 분포를 중심으로

(1) 세계 유대인 인구규모와 지리학적 분포현황

2004년 초기 세계 유대인 인구의 수는 약 12,989,700명으로 추산된다. 세계 유대인은 세계 총인구 63억1천4백만 인구 중 1,000명당 2.06명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 수는 2003년 5,094,200명에서 2004년 초기 5,165,400명까지 증가했고, 이는 1.4%에 해당하는 71,200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이외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추정되는 유대인 인구는 7,854,000명에서 7,824,300명으로 0.4%에 해당하는 25,700명이 감소하였다.

〈표 Ⅲ-4〉의 통계는 제2차세계대전 이래로 유대인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쇼아(Shoah) 후기 세계에 근거해서, 유대인 인구는 11,000,000명인데 1945~1960년에 1,079,000명, 1970년 234,000명, 1980년 49,000명, 1990년 32,000명이 각각 증가했다. 세계 유대인의 전후 인구가 13년 동안 1백만명 증가하는데 비해, 그 다음 45년 기간에는 채 1백만명의 증가에도 이르지 못했다.

〈표 Ⅲ-5〉에서 예시되듯이 약 47%의 유대인 인구가 미주에 거주하고 북아메리카에는 약 44%가 거주하고 있다. 구소련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약 40%(그러나 러시아공화국과 터키는 아시아의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스라엘에 거주한다. 유럽과 러시아와 터키를 포함한 아시아에는 총 유대인 인구의 12%가 거주하고 있다. 세계 유대인 인구의 2% 미만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 살고 있다.

〈표 Ⅲ-4〉 세계 유대인구와 전체인구(1945년~2004년)

연 도	유대인 인구		세계인구		세계인구 1,000명당 유대인구
	전체 추정 ^a	연도별 변화(%)	전체 (백만명)	연도별 변화(%)	
1945, May 1	11,000,000		2,315		4.75
1950, Jan. 1	11,297,000	0.57	2,524	1.87	4.48
1960, Jan. 1	12,079,000	0.67	3,027	1.83	3.99
1970, Jan. 1	12,585,000	0.41	3,702	2.03	3.40
1980, Jan. 1	12,819,000	0.18	4,447	1.85	2.88
1990, Jan. 1	12,868,000	0.04	5,282	1.74	2.44
2000, Jan. 1	12,900,000	0.02	6,010	1.30	2.15
2004, Jan. 1	12,989,700	0.17	6,314 ^b	1.42	2.06

* a: Based on updated, revised, or otherwise improved information.

Source: The A. Harman Institute of Contemporary Jewr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b: Mid year estimate of preceding year.

Source: Population Reference Bureau.

〈표 Ⅲ-5〉 가장 큰 핵심적인 유대인 인구를 가진 국가

순위	나 라	유대인 인구	전세계 유대인 인구 중 %			
			전세계 인구 중		유대인 디에스포라 인구 중	
			%	누적 %	%	누적 %
1	미국	5,290,000	40.7	40.7	67.6	67.6
2	이스라엘	5,165,400	39.8	80.5	=	=
3	프랑스	496,000	3.8	84.3	6.3	73.9
4	캐나다	371,000	2.9	87.2	4.7	78.7
5	영국	299,000	2.3	89.5	3.8	82.5
6	러시아	244,000	1.9	91.3	3.1	85.6
7	아르헨티나	185,000	1.4	92.8	2.4	88.0
8	독일	112,000	0.9	93.6	1.4	89.4
9	오스트레일리아	101,000	0.8	94.4	1.3	90.7
10	브라질	96,800	0.7	95.2	1.2	92.0
11	우크라이나	89,000	0.7	95.8	1.1	93.1
12	남아공	74,000	0.6	96.4	0.9	94.0
13	헝가리	50,000	0.4	96.8	0.6	94.7
14	멕시코	39,900	0.3	97.1	0.5	95.2
15	벨기에	31,300	0.2	97.3	0.4	95.6

* Jews represented 765.4 per 1,000 inhabitants in the State of Israel, including East(2004년 1월 기준)

(2) 총체적 상황과 전망

몇몇 국가에서의 유대인 인구는 집중적인 증가와 더불어 전세계 유대인 인구의 정체를 반영하면서, 세계 유대인의 97.3%는 가장 큰 15개의 커뮤니티에 살고 있고 95.6%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14개의 가장 큰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들에 살고 있다<표 Ⅲ-5>.

2004년에는, 93개 국가에서 적어도 1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에는 각각 5백만명이 넘는 유대인 인구가 있으며, 다른 7개국은 10만명 이상의, 4개국은 5만명에서 10만, 4개국은 2.5만명에서 5만, 10개국은 1만에서 2만5천, 그리고 66개국은 1만명 이하의 유대인이 있다. 단지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홉 개의 커뮤니티들은 적어도 그 나라의 전체인구의 1천명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유대인 인구의 상대적인 비중에 따라 나열하면, 지브롤터(거주민 1000명당 24명의 유대인), 미국 18.1, 캐나다, 11.7, 프랑스, 8.3, 우르과이, 5.8, 오스트레일리아 5.1, 아르헨티나 5.0 영국 5.0 헝가리 5.0이다.

이스라엘에서의 지속적인 자연증가와 세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서의 낮은 유대인 출생률과 노령화 경향을 고려한다면, 유대인 인구는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곧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유대인 커뮤니티가 될 전망이다.

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인프라 구축 및 운용

(1) 세계적인 유대인 국제 기구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인프라,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관 네트워크는 이미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오래 전에 등장했다. 유대인의 조직화에서 흥미로운 요소는 조직이 뿌리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위로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다. 유대인들은 특정한 관심사나 공동의 사안을 중심으

로 헌신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이에 따라 기관을 설립했다. 이와 유사하게 협력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나 정치의 힘을 이용하는 게 편리할 때는 한 개의 지붕아래에 기관들도 자신들을 복속시켰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럽과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피라미드 구조가 생겨났고 북미의 경우에는 더욱 단순한 피라미드의 형태로 나타났다.

세계적 국제기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세계 시오니스트기구(WZO : World Zionist Organization)와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기구(JAFI : Jewish Agency for Israel)이다. WZO의 역사는 1897년 제1차 시오니스트 총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후 1960년에 다시 재조직되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기구(JAFI)는 비정부(준정부) 기구이며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이주를 조직하고 촉진하였으며,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으로서의 이주를, 이후에는 이스라엘 정착을 주도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사회 및 교육 서비스를 개발했다. JAFI/WZO의 준국가기능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국가건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했던 지역들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71년 이래로 JAFI가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을 하고 WZO가 디아스포라 시오니스트 활동과 이스라엘 안의 행정구역의 정착활동에만 영역을 국한시키면서 JAFI와 WZO의 기능은 분리가 되었다. 전미연합유대위원회(UJC)을 통해 연방에서 JAFI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은 약 2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연방시스템에서 내는 단일 기부금 중에 최고액이다.

JAFI의 2004년 예산은 2억9천7백만 달러이며 이 중에서 1억9천5백만 달러가 연방에서 나온다. WZO의 예산은 약 2천5백만 달러이다. WZO는 유대기구의 명목상 의사결정기구이고, 서류상으로 WZO는 여전히 JAFI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JAFI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교육과 같은 분야의 거대 기업들과 연계를 지어 활동하고 있으며 WZO의 존재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JAFI(그리고 아래에서 논의될 공동배분위원회)

의 자금모집 기구는 미국에 있는 전미연합유대위원회(UJC)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는 Keren Hayesod가 있다.

Keren Hayesod - United Israel Appeal은 미국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위한 전세계 중앙자금모집기관이다. 57개의 캠페인을 통해서 각 대륙의 45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Keren Hayesod (재단기금)는 1920년 런던의 세계시오니스트회의에서 설립되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위원회는 Keren Hayesod라는 이름 아래서 각 지역별로 캠페인을 벌였으며 종종 그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였다(UIA, UJIA, IUA, CJA, and AUJF 등).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기구의 재건 협정에 의하면 Keren Hayesod는 세계시오니스트기구(WZO)와 전미연합유대위원회(UJC)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기구(JAIFI)의 삼대 헌법기관 중 하나이며 도지사과 총회 이사회의 대표 중의 20%가 Keren Hayesod에서 선출된다.

1901년에 설립된 이래로 Jewish National Fund (Keren Kayemet LeIsrael)는 시오니스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가 되어 왔으며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토지를 구입하고, 구입한 토지를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호해 왔다. 전 세계 기부자들의 지원을 통하여 JNF는 20세기를 끝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시작보다 더 많은 뿌리를 가진 유일한 국가임을 증명했다. JNF는 소유주(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유대인회의(WJC)는 국제기구로써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기구의 이익을 도모하고 충족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1936년 제네바에서 유대인들을 결집시키고 전 세계에 나치의 학살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WJC는 6개 대륙에 걸쳐서 아르헨티나에서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100여 개국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와 기관들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WJC는 통일과 유대인의 생존을 도모하며 동시에 정신적, 문화적 및 사회적 유산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WJC는 브뤼셀, 부다페스트,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네바, 요하네스버그, 모스크바, 오타와, 파리, 시드니와 예루살렘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예루살렘에는 WJC의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다. 세계유대인회의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독특한 기관이 되었고 유엔과 그 소속기관, 위원회, 부속단체에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WJC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평화조약, 나치 전범의 기소 및 재판,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계획 채택,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의 삶의 재건계획 채택에 대한 유대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유대인공동배분위원회(American Jewish Joint Distribution Committee, JDC or “Joint”)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이다. 1914년 JDC의 설립은 위기 상황에 대한 유대인들의 공동 대응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1914년의 경우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고(기근을 포함)가 있었다. 위기상황에서 Joint는 세 개의 각각 다른 기관들의 자금모집과 구호활동을 떠맡았다. JDC의 임무는 디에스포라 공동체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JDC는 직접서비스(동 유럽의 가난한 공동체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에 JDC는 많은 동유럽 국가에 돌아가서 지역사회의 가난한 노인층과 공동체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하였다. 1988년에 JDC는 소련에 돌아가서 문화 및 종교 재건 프로그램을 담당할 공동체 기관 설립을 지원했다. 오늘날 JDC가 후원하는 복지프로그램은 거의 2,600백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25만명의 가난한 노인들을 돕고 있다.

작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관에는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가 있다. ‘Claims Conference’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기관은 1951년 설치되었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독일과 체결한 여러 재건 및 배상

협정은 주로 Claims Conference의 결과였다.

1881년 유럽에서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피난을 온 일련의 유대 이민자 집단이 뉴욕에서 설립한 헤브루이민자지원협회 (Hebrew Immigrant Aid Society, HIAS)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음식, 잠자리와 다른 지원을 제공했다. 이에 이스라엘 이주(JAFI와의 협력하에)를 지원한 1백만에 달하는 유대인 피난민들과 캐나다, 남미, 호주, 뉴질랜드와 다른 지역으로 정착을 지원한 수천 명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국제이민 및 난민정착기구로써 HIAS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과 모로코, 이디오피아, 이집트 및 동구유럽 공산 국가들의 유대인들의 구호 및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70년대 중반 이후로 30만명의 유대 난민들을 구소련과 구연방 국가들에서 구출하여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지원했다. 미국 유대공동체의 이민기구로써 HIAS는 국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역할 또한 담당한다.

World ORT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정부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써 100여 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비영리 및 비정치 단체로서 ORT의 목적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및 직업훈련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현재 ORT는 프로그램, 트레이닝 센터 및 학교를 통하여 연간 28만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특히 구소련, 남미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World ORT는 5대륙을 포괄하는 각국 ORT기구의 국제활동을 조율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ORT는 UJC의 ONAD프로세스를 통하여 주요 자금을 공급받는다. ORT의 지역본부는 자금모집 활동을 하고 회원기관 중에서 가장 저명한 기관이 미국여성 ORT이다.

Alliance Isralite Universelle 는 교육과 문화기반의 기관으로 2만명의 학생이 포함된 학교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을 하며 정부 및 국제기관에서 인권옹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이란, 모로코, 스페인 및 미국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본부는 파

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대여성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Jewish Women)는 47개국의 52개 유대여성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거의 모든 활동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업무의 주안점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ICJW의 주 목적은 모든 유대 여성들을 단결시켜서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ICJW는 유엔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자문기구로 등록되어 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다.

Bnei Brith는 1843년 설립되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 인권, 박애 및 공동체 활동단체로써 전 세계 5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의 유엔에서는 국제 NGO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브뤼셀의 유럽연합에 사무실이 있고 예루살렘에 세계본부가 있다. Bnei Brith는 빈민, 억압 받는 사람들을 돕는 공익을 위해 일하며 문화 및 인권 프로젝트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유대학생세계연맹(World Union of Jewish Students)은 1924년 반유대주의를 타파하고 국가 유대학생기구의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력 훈련 세미나를 조직하고 디에스포라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WUJS는 70만명의 학생을 대표하는 51개의 국가연합을 대표한다. WUJS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NGO회원이며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다.

Chabad-Lubavitch movement(차바드 루바비치 운동)은 하시디즘의 일부로써 250년 전에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와 주변국가로 전파되어 나갔다. 차바드는 종교에 관한 가르침 외에도 기관으로서 4천명의 정교회원을 파견해서 3,300개의 기관(직원 수는 수만에 달함)을 관리케 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은 유대인들의 복지에 헌신하고 있다.

차바드는 특히 구소련과 동유럽의 종교 및 교육재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Ronald Lauder Foundation은 유럽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로더 재단은 특히 동유럽에서 교육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2) 미국의 유대인 디에스포라 기관들

미국 유대인에게 있어 핵심적인 조직화 원칙은 유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다. 최근 몇 년간 물리적인 안보나 생존 같은 외부 사안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유대계 영속성에 관한 내부문제(감소하는 출산율, 만연한 기능적 문맹률, 이민족과의 결혼 등)가 등장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대계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확실히 가장 덜 알려진 기관 중의 하나가 전미주요유대인기구대표회의(Conference of Presidents of Major American Jewish Organizations, the Presidents Conference)이다. 1954년 설립된 Presidents Conference의 공식적인 임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유대인 기관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워싱턴에 있는 미국 행정부에 단합된 의견을 내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회의는 50개 이상의 미국 유대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구들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Presidents Conference는 이스라엘 정부 관료 및 유대인 국가기구, 주요 연방 지도자들과 누리고 있는 관계는 “대변인” 수준을 능가한다. 그러나 Presidents Conference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략이나 정책을 만들지는 않으며 대표 기구로서 구성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다.

전미연합유대위원회(UJC)는 국내와 국제적인 유대인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시스템이다. UJC의 기능은 4가지 필라(Pillar)로 나뉘는데 휴먼 서비스,

사회정책, 이스라엘과 해외, 개발(자금모집), 르네상스와 부흥이다 (유대계의 정체성과 영속성에 대해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교육과 문화를 상징한다). ONAD(Overseas Needs, Assessments, and Disbursements Committee, ONAD)는 UJC의 해외 펀드를 이스라엘과 다른 지역으로 배분한다. ONAD는 유대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연방이 통제하고, 해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JAFI와 JDC와 같은 계약자들을 찾아내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역 공동체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ONAD는 JDC와 JAFI에 있어서 핵심자금을 결정하고 JAFI와 JDC를 선택 자금에 있어서는 경쟁에 붙인다.

B'nai B'rith는 국제적인 친목 및 사회단체로 지난 30년간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국제사안에 주요점을 두고 있다. 1843년 독일계 유대인이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설립된 B'nai B'rith는 교회당 이외의 결속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계속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촉진제 및 공동체 관계 기구로 성장했다.

국가 및 지역 유대인 공동체 대표기구로는 공공문제유대인위원회(The Jewish Council for Public Affairs, JCPA)가 있다. 수십 년간 국가유대인공동체관계 자문위원회(NJCRAC)로 알려져 왔는데 JCPA의 임무는 공동체 차원에서 보안을 다루는 공동체 관계 위원회(CRC)의 기능을 국가별로 조율하는 것이다. CRC대표들은 국가 기구와 함께 JCPA에서 조율과 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 수 년 간 공공정책과 공동체 관계 문제와 같은 복잡한 논의뿐만 아니라 유대공동체의 메시지를 권력의 핵심지인 미국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기구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동해 왔으며 사용하는 수단에는 입법 옹호론과 연방 법정에서는 법정 조언자의 의견제출을 이용해서 참여해 왔다.

미국유대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 AJC)는 국방기구

로써는 가장 오래되었으며 1906년 설립되어서 1943년 이후에 확대되었으며 인종, 다원주의 및 그룹간 관계에 관심을 가진 저명한 기관이다. 1990년대의 기관 내부점검 기간을 거쳐서 미국 유대위원회의 주안점과 방향이 국제분야로 바뀌게 되었다. AJC는 지금은 Presidents Conference의 회원이며 유럽 정부들에게 미국 유대계를 대표해 왔고 유럽 무대에서 다양한 관계를 수립해 왔다. 미국 유대인들의 싱크탱크의 기능을 맡는 위원회는 미국 유대인 연감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부서는 그룹간 관계, 반유대주의 및 유대계 정체성에 대한 가치 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미유대인총회(American Jewish Congress, AJCongress)는 1918년 설립되어서 미국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회와 주 및 인권의 분리를 다룬 기념비적인 미국 대법원이 다룬 사건에 참여한 바 있다.

Anti-Defamation League (ADL)은 1913년 조지아에서 있었던 레오 프랭크 구타사건에 대응해 B'nai B'rith의 위원회로 설치가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위장한 반유대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ADL은 반유대주의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적 태도에 대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후원하고 편견퇴치 프로그램, 반이스라엘 활동, 좌파 및 우파 극우주의 및 1981년 이래 주와 교회의 분리 위반, 홀로코스트 교육과 타 종교 관련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merican-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는 1950년 설치되어서 워싱턴 정가에서 이스라엘 관련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AIPAC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로비 단체로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무소 네트워크는 점차 규모가 커져 가고 있으며, 지역 사무소의 기능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는 것이다. 활동에는 연구, 입법 활동, 대중 홍보 등이 있다. AIPAC는 다른 유대계 미국 기관들

과는 달리 단일 문제를 다룬다. AIPAC의 활동은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제시하며 미 행정부와 의회도 AIPAC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 AIPAC는 또한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친 유대 및 친 이스라엘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다. 전문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최고의 로비단체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s)는 후보자나 관료들의 선거전에 자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정치가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친이스라엘 PAC는 1980년에 의회의 반이스라엘 관료들을 몰아내기 위해 설치되었다. 오늘날 친 이스라엘 PAC는 친이스라엘파로 간주되는 후보의 당선과 재선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전국유대인민주평의회(National Jewish Democratic Council, NJDC)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민주당에서의 유대계의 참여와 개입, 반유대/반이스라엘 행동을 민주당에서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1988년 7개의 민주당 주 전당대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자결주의를 지지하는 관계를 채택하고, 이 문제를 민주당의 전국 전당대회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공화당유대연맹(Republican Jewish Coalition, RJC)은 1985년 전미 유대연맹으로 설립되었다. 공화당에서의 유대계 참여와 개입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공화당 행정부 시절, RJC는 백악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Union of Orthodox Jewish Congregations of America (UOJCA or the "Orthodox Union", the "OU")는 1898년에 설립되어서 미국에서 약 1천 개에 달하는 교회당이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인정받고 있는 유대식 식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제품의 포장에 OU 심볼이 표시되어 있다.

미국랍비협회(Rabbinical Council of America, RCA)는 최대규모

를 자랑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유대 정교를 가장 잘 대변하는 랍비 협회이며 가장 중도파적인 정교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가장 미국적인 시오니스트 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정당들과 직접적이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관계로 연계되어 왔다. 이에는 미국 시오니스트 기구가 포함되는 데, 애초에는 중도 일반 시오니스트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여러 이스라엘의 정당 관련 기구들과 매파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미시오니스트운동(American Zionist Movement)은 16개 시오니스트 기관과 운동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당적인 대표기구로서 시오니스트 프로그래밍과 대중 홍보 활동 조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치 국가로서 미국의 유대계로부터 명령을 받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일부 문제들(특히 이스라엘에서의 종교적 다원주의)은 다소 관성적이었던 시오니스트 기구들을 잠에서 깨우게 되었다.

시오니스트 배경에서 새로 Nefesh b'Nefesh가 등장한 것이 새로운 일 중의 하나인데, 이 기관은 북미의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유대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 3년을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미혼이나 가족들에게 재정, 행정 및 전문지원을 제공한다. 북미로부터의 이주자를 늘리고 지도층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지금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기독교 원리주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유대계 교육에 있어서 3대 전국기구를 들 수 있다. 북미 유대 교육 서비스(Jewish Education Service of North America, JESNA), 유대교육의 우월성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Excellence in Jewish Education, PEJE)과 유대교육 개선을 위한 연대(Coalition for the Advancement of Jewish Education, CAJE)이다.

미국 유대계 문화 영역은 전미유대문화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Jewish Culture)에 의해 조율되고 다루어지며, 재단의 임무는 장학금과 예술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토착 유대 문화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문화보존, 예술가적 창의성과 공동체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분야에서의 재단의 활동은 유대계 정체성과 영속성과 관련되어 중요해지고 있다.

유대문화기념재단(Memorial Foundation for Jewish Culture)은 Nahum Goldmandl에 1965년 설치(Claims Conference로부터 천만 달러의 그랜트를 통하여)하였으며, 주 임무는 홀로코스트 후에 유대 문화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임무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기관의 장학금 및 연구활동을 통하여 유대문화를 재건하고 강화하며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많은 여성 기관들이 미국 유대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1893년 설립되어 약 1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미유대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of Jewish Women, NCJW)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유대계와 일반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다. 여성의 권리(특히 출산에 대한 선택)는 NCJW의 주요 어젠다이지만 위원회는 이스라엘, 민권과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와 같은 여러 문제들에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NCJW는 워싱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부분 문제들에 있어서 진보 노선에 공격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Hadassah는 시오니스트 기관으로 미국 시오니스트 사회의 쇠락 추세에서 예외적인 기관이다. 중요한 것은 하다사가 38만5천명에 달하는 유대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미국에서 최대의 회원단체가 되었다. 따라서 하다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숫자의 회원들을 동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참여자가 되었다. 최근 몇 년간 하다사는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었지만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남아있다.

미국 유대인 공동체 어젠다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활동에 대한 것이다. 유럽의 유대인 제거를 기념하는 기관이나 기구의 확산,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과 쇼아 재단(생존자의 구술 역사를 수집하기 위한), 여러 도시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홀로코스트 기념비, 여러 대학에 있는 연구시설 등이 미국 유대계의 인식 속에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홀로코스트 유대계 생존자 모임 및 미국연합(American Gathering and Federation of Jewish Holocaust Survivors)은 1980년 여러 홀로코스트 생존자 기구들을 위한 대표 단체로 설치되었으며 미국에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1981년 설립된 홀로코스트 유대 어린이 생존자 국제 네트워크도 주목할 만하다. 이 네트워크는 유대계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 전 세계의 차세대 단체를 위한 수단을 제공해 왔다.

(3)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이스라엘의 상호작용과 전망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의 상호 작용은 유대인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 간, 그리고 세계의 여러 유대인 공동체간에는 몇 가지 역동성이 존재한다.

우선, 이스라엘은 오늘날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나 유대계의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며, 문화적 원천지와 정신적 영감의 근원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디아스포라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트렌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영향을 준다. 종교적 다원주의와 페미니즘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고 많은 종교 장학금이 이스라엘로 들어온다. 이스라엘의 음악과 문화이 해외에서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의 영적인 삶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디에스포라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이스라엘 정치에 제한적인 영향을 준다. 이스라엘 정책이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길 때만 힘을 모아 이스라엘 정책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의 정치도 세계 유대인들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지원은 대체로 일방적이며 디에스포라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금전적 지원이 주요 지원이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보적 상황은 디에스포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공동 사회의 의제의 대강을 결정짓는다. 이스라엘에서 테러의 증가와 편향된 언론의 보도는 유대인들을 단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요인들이 많은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반유대주의가 특히 유럽에서 심화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단결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해외의 동포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단결력이 강화되었다. 최근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나 언론에 대한 옹호 활동, 반유대주의, 구소련과 동유럽에서의 유대인 사회 부활, 보상의 분배와 자금 조달과 같은 주요 이슈들도 세계 유대인의 공동 관심사이다.

Kol Yisrael Arevim Zeh Lazeh (모든 유대인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탈무드에서의 개념은 디에스포라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유대인의 대인관계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방법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유대인 공동체의 타지역 유대인 사회에 대한 지원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실상 주요 유대인 단체들 일부는 위기가 100년 전 러시아의 상황이든, 또는 쇼아(Shoah) 이후의 중부 유럽이든 위기에 처해 있는 동포 유대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다.

Jewish Agency, Bnei Brith, Habad와 기타 종교 단체들과 같은 세계의 주요 유대인 단체들은 유대인을 구하고 전성기를 이룬다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종교 단체들은 체계적으로 랍비, 유대 교회, 교육 기관들로 이루어진 국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

반유대주의는 전통적으로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단결시

키는 공동의 문제이다. 미국의 유대인은 크게 반유대주의의 희생자는 아니지만 최근 유럽의 반유대주의적 사태가 일어나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작은 유대인 지역 사회들이 공동체 지도에서 사라지면서 쓸모없는 유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대 교회, 무덤, 학교, 박물관과 같은 유대 민족의 실제적 전통을 지키기 위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Moshe Katsav 대통령은 15차 의회 개회 연설에서 크네셋(Knesset: 의회) 외에 제2의 의회(Second House)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소위 ‘유대민족의회(Jewish People House)’는 해외 유대인들의 아이디어, 사상, 경향, 여러 시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문 조직이고, 유대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스라엘 정책 문제,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해외의 유대인 공동체 사회, 기관, 조직, 사상가, 지도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절차규범에 따라 2005년 준비회의에 이어 일년에 두 번 소집되며, 유대 민족회의의 위원회와 직원들의 업무는 상시 체제로 일년 내내 운영될 전망이다.

이러한 실질적 이슈들은 이스라엘 국민과 확장된 국가로서의 유대인 디에스포라들을 통합할 집단적 정체성의 장기적 유지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에스포라의 경우, 의미 있는 상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다른 사회로의 동화 현상과 집단 기억의 상실과 같은 피할 수 없는 힘을 넘어서 양측의 공공정책에 매우 중요한 측면을 계속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이스라엘 민족공동체에서 주는 시사점

(1)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시사점

1948년 건국 이래 57년을 역사를 맞는 이스라엘과 확장된 국가로서의 유대인 디에스포라의 과거 역사적 형성 과정, 유대인 디에스포라의 인프라 구축 및 그 운용 실태는, 동북아의 400만 재외동포를 기

반으로 하는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전략적 사고와 이를 통한 기반 구축의 중요성, 동북아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활성화의 문제, 과거 역사의 집단적 기억과 보존의 문제, 재외동포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기본법 제정 및 정책추진기구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과거 역사적인 연원이 유사한 나라들의 재외동포 관련 입법 사례, 정책 추진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제 식민지 및 남북 분단 상황 등 역사적인 연원의 차이, 정치적 체계 차이 등도 고려함으로써 국가전략 및 정책 추진 체계에 있어서 국가간 단순비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남북의 통일시대에 대비한 7백만 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청사진을 시급히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

(가) 전략적 사고와 기반 구축의 필요성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700만 재외동포는 누구인가, 특히 동북아 한민족이 누구이고 이들에게 모국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국가의 이상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독립선언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방하듯이,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국가내의 모든 시민에게 있어서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차별을 배제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상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역사적으로 동등한 기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마저도 주어지지 않았던 유대인 디에스포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특수성을 제시하며 유대민족 내부의 문제로 명확히 간주하고 있다. 즉 독립선언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차별배제 민주주의의 상이 국가의 전술이라면 유대인 디에스포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상위의 전략적 관계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전략적 사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에스포라의 관계는 독립선언문 뿐만 아니라, 1950년 제정된 귀환법(Right of Return)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귀환법에서는 자국의 유대인, 유대인 디에스포라의 정의를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는 이스라엘내의 제시민과 동등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현재 700만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상과 국가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은 동북아한민족공동체 구축의 최대 걸림돌로 남는다. 국가전략의 부재는 법과 제도의 부실로, 정책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역사적 암흑기에 걸쳐 형성된 700만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이상과 장기적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 의무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적 민족공동체의 성원으로 당당히 우대하고 민족성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 방안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국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공적 자료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국의 제반 역사 및 법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수립하고,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공적인 국가기구의 수립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나) 타국의 재외동포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및 전제 조건

세계의 모든 유대인 디에스포라는 이스라엘로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를 유대민족의 민족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유대인 디에스포라는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 유

대인 디에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유대민족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 건국 전에 형성된 전세계 유대인 디에스포라 네트워크의 이스라엘 건국시의 핵심적인 기여 때문이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일이지만,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또한 시사하는 점이 많다.

특히 한중수교 13년, 한러수교 15년, 한일수교 40년을 맞는 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국의 출입국에 제약을 받고 있는 중국동포, 재CIS지역 동포, 조선(朝鮮)적 재일동포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체제 안정에 위협을 가져올 ‘안보, 감시대상’ 정도로 취급하던 과거의 법제도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변화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법과 제도의 정비, 전향적인 정책의 정비가 서둘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에 걸쳐 형성된 유대인 디에스포라 네트워크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위계적인 질서가 아닌, 유대민족의 생존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호혜와 신뢰의 관계이듯이, 동북아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있어서도 모국과 재외동포 네트워크간의 상호호혜와 신뢰의 관점에서 기존의 모든 질서를 평가하고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국권상실기, 그리고 분단된 형태로서의 국가 이전에 존재했던 민족공동체의 한 형태로서의 재외동포 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역사와 과거, 현재, 미래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고, 정치적, 경제적 자산으로 접근하는 현재의 방식에 국가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며, 불신을 일소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 과거 피해자로서의 집단적 기억과 역사를 보존하는 의미

유대인 디에스포라 네트워크로서 세계유대인회의(WJC), 미국유대

인공동배분위원회(JDC), Claims Conference, 헤브루이민자지원협회(HIAS) 등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평화조약, 나치 전범의 기소 및 재판, 홀로코스트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계획 채택,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의 삶의 재건 계획, 전세계 유대인 기근의 문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동구유럽 및 구소련지역의 유대인 구호 및 정착의 문제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1936년 제네바에서 전세계의 나치의 학살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WJC는 전세계 100여개국의 유대인 공동체와 기관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UN과 그 소속기관, 위원회, 부속단체에서도 외교관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을 정도로 활동이 왕성했다.

이처럼 과거 역사적 피해집단으로서, 집단적 기억과 그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디에스포라 네트워크의 힘은 자발적이고 철저하다는 점이 상징적이고, 과거 일본의 식민시기 전후를 통해 이산했고 거주국에서 정착하고 살아남아야 했던 동북아지역 재외동포 공동체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디에스포라 네트워크의 실체 및 그 활동 방식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해야만 했던 고려인의 문제 및 연해주 재정착의 문제,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15만 사할린 한인의 문제, 식민시기 강제동원된 재일조선인의 일본내에서의 차별과 박해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역사의 문제와 흔적들이 동북아지역 곳곳에 남아있고, 역사적 배상의 문제와 피해자 보상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동북아 재외동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이스라엘 디에스포라의 국제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에서 시사되듯이, 과거 역사의 피해자로서 동북아 재외동포 공동체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인 발언권 확보를 위한 재외동포 단위의 민간 국제기구의 추진,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기억과 역사 보존, 생존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구호 등의 장기적인 추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 ‘유대민족의회(Second House ; Jewish People House)’의 탄생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Moshe Katsav 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셋(Knesset) 외에 ‘제2의회(Second House)’를 설립할 것을 주창하였고, 제2의회는 해외 유대인들의 아이디어, 사상, 경향, 시각을 표현할 조직으로, 유대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스라엘 정책의 문제,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해외 유대인 공동체 사회, 기관, 조직, 사상가, 지도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2005년 준비회의에 이어 일년에 두 번 소집되고, 내부 위원회와 직원들의 업무는 상시체제로 일년내내 운영된다.

앞서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듯이, 현재 동북아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최대 걸림돌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이상과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과거 김대중 정권하의 국민의정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관계 부처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입국 등 국내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특례법을 신설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비치기도 한 바도 있으나, 사실상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이기주의 및 변화된 상황에 따른 전략 및 정책수립의 미비로 인해 이미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힘든 구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를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국가기구 신설에 대해, 외교마찰 등의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외교통상부의 전통적인 논리는, 타국의 광범위한 사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고,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기본법 등을 통해 ‘재외동포’가 누구인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국가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타국의 사례에서도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는 최근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과거 국권 상실기 등 특수한 ‘역사적 연원’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외국에 이주 정착하게 된 민족성원을 우대하는 것은 각종 국제법규에도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의 의회까지 만들어 유대인 디에스포라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려는 이스라엘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함축적이다.

따라서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과거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성찰하여, 국가가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국가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집행을 제도화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그 총괄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논의는, 과거 이스라엘의 ‘귀환법’ 제정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북아의 재외동포의 역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 내에 700만 재외동포 문제와 관련한 상설위원회가 없다는 점은, 타국의 풍부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가전략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한 문제는 국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취급하고는 있으나, 이는 통일문제, 외교문제, 통상문제의 주변부 문제로 재외동포를 사고한다는 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전략과 디에스포라 네트워크 운용, 타국의 국가전략과 정책 운용 등의 현실사례와 명백히 상치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유대민족의회’는 아니더라도 국회내에 상임위원회로서 별도의 ‘재외동포위원회’가 신설되어질 필요가 있다.

2. 화교

가. 역사적 형성과정

(1) 화교의 시원

화교의 시원은 무엇일까?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화교의 형성과 시원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형성과 팽창 그리고 그에 근거한 국경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교의 시원과 함께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은 중화의식, 혹은 대륙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국인들의 후예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 곳에서 자신들이 토착민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토착민도 그들을 이방인으로 인식하였다면, 그것이 화교의 성립과 연관된다. 그러나 화교의 개념은 중국인의 개념 확장과도 연관된다. 양자강 남부에 살던 백월족(百越族: 여러 월족의 무리를 의미)은 중원에서 이주한 원 중국인에 의해 밀려서 동남아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중국인에 의해 흡수되어 지금의 화남지방 중국인이 되었다. 아무도 이들을 중국인이 아니라고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적 기원으로 최초의 화교는 통일왕국인 진나라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고자 보낸 서복(서후, 徐福) 일행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일본에 도착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한(漢) 왕조와 이후의 왕조들은 해외무역을 수행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을 동남아와 인도, 아랍지역으로 보냈다. 이들 중 일부는 그 지역에 정착하기도 하였다. 특히 5~6세기에 들어 불교, 향료 무역 등은 말레이 군도를 포함한 동남아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세계제국 당의 성립은 전 세계적인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무역은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하여, 이미 이 시기에 동남아와 연관된 무역항으로 이름을 날렸다.

동남아의 초기화인사회의 성립은 당말부터 송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0세기 당이 멸망하면서, 5개의 지역이 왕국을 성립시켰는데(南唐, 吳越, 閩, 南漢, 南越) 이들은 동남아와 무역을 하는 위치에 있었고, 많은 수의 인원들이 왕래하였다. 남월은 후에 베트남으로 독립적으로 유지되나 다른 곳은 사실상 중국에 흡수된다. 송나라는 금의 침입 후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남송을 건설하고 이후 동남아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남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은 아랍, 고려, 일본 등과 밀접한 무역을 발전시켰다. 이 시기에 많은 외국인이 중국에 정착하게 된다. 원 역시 세계제국으로, 중국인 즉 한족을 제외한 여러 종족들이 무역에 종사하였는데, 색목인(色目人)이라고 알려진 회교도들이 주로 아랍계와 함께 종사하였고, 이들은 동남아 사회에 동화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나라에서 신유학이라 할 주자의 유학이 나오면서, 야만과 중화를 구분하고, 이에 근거해 중국인의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 화교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중원에 뿌리를 내리는 중화의 개념은 복건 지역 출신인 주희에 의해 제기되면서 지배이데올로기화 하고, 중국은 어떤 면으로는 폐쇄적인 내부 결속의 길을 걷게 된다. 송·원과는 달리 명은 1371년 강력한 해금령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무역은 주로 일본인과 중국인이 결합된 왜구들이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5세기에 이루어진 무슬림인 정화(鄭和)의 세계 원정에서 이미 화교 사회의 존재를 파악하였다. 즉, 인도네시아의 각 항구에 1,000 여호가 넘는 화인촌이 건설된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후에 중국 각지에서 남양(南洋)으로 이주한 다른 중국인과 함께 동남아 화교 사회를 형성하는데, 주로 유럽인과 토착인 사이의 중개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511년 포르투갈인의 말라카 정복 이래 그들의 역할은 현저해졌다.

(2) 역사적인 형성과정과 추이

그러나 현재적 의미의 화교 사회의 형성은 서구의 동진과 함께 시작된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명의 쇠국정책이 가장 공고한 시기였다. 16세기 전반기 유럽의 해양진출 의지는 1511년 포르투갈인이 말라카를 점령하고, 중국인의 도움으로 주요 항구를 알게 되면서 구체화된다. 이들은 일본 규슈지역까지 진출하고, 이에 자극받아 중국남부의 연해 상인들이 명나라의 무역금지령을 무시하고 무역을 시작하게 된다. 포르투갈인 이후 영국인, 네덜란드 인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복건과 광둥 지방의 중국인들은 상업을 확대하여 16세기 중엽에 이르자 명나라도 어찌할 수 없는 정도로 번성하게 된다. 명은 해금령을 완화하고 광둥 정부는 포르투갈과 비공식적으로 마카오 항의 사용권을 허가하여, 마카오가 1999년까지 450년 동안 포르투갈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기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해금령의 완화는 화남지역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중국의 상인들은 유럽 상인과 경쟁하고, 대리인이 되고, 때로는 위협이 되면서 무역을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명이 멸망하는 1644년까지 20여년 동안 중국인 특히 복건성 사람들의 활약은 눈부신 것이어서, 이들은 마닐라, 자카르타 등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 근거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대만에 복건인들을 이주시키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청조는 연해지역에서 백성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또한 봉금정책을 지정해 중국인의 이동을 억제하려 하였다. 하지만 명의 유민으로,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노동이나 무역에 종사하기 위해 수천 명씩의 중국인이 루손이나 자바 등지로 향하였다. 이미 이 시기 수천 명 이상의 중국인이 베트남, 태국, 말레이섬들, 발리 등 인도네시아 주요 섬들에 집단 거주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동남아 지역의 토착 세력이 강대하지 못하여 중국인을 막지 못하고 또한 무역마저도 서양인과 중국인이 장악하고,

서양의 필요에 의해 중국인이 토착인과의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수와 집단적 거주지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제 대규모의 이주 시기가 온 것이다.

반면 청조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세기 말까지 동남아에 이주한 화교들은 정체성 및 경제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그것이 각 나라에서 독특한 문화형식을 만들어 냈다. 특히 서구의 식민정책은 이들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가령 스페인은 중국인의 필리핀 이주를 억제하고 현지화를 장려했는데, 현지 여성과 결혼한 중국인 가정도 카톨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혼혈 중국인만을 신뢰하였다. 반면 네덜란드인들은 자바에서 토착인과 중국인을 분리하여 대응하였다. 이는 토착인과 중국인이 연합하여 대항하는 것을 막고, 중국인의 매개적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자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의 결과 현지에 동화 정도가 심한 중국인부터, 전혀 동화되지 않은 중국인 집단까지 여러 형태의 중국인 집단이 출현하였다.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 중국의 기근과 가뭄 등은 새로운 이민을 불러왔고, 이들 새로운 중국인들은 더욱 중국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써 현지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화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더욱 강력한 화교 사회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중국 노동력은 서구의 요구에 따라 동남아시아를 벗어나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대륙, 중남미, 아프리카 동해안 및 남부 등에 새로운 중국 이민자 층이 형성되어 신 화교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쿨리(Coolie, 苦力)로 알려진 이들은 주로 미국 서부에서 금광 채굴이나, 기차 길 건설 등에 동원되었다. 즉 중국 화교 사회의 역사적 형성은 이제 동남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 이후 형성되는 화교 사회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이민정책, 중국인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모하게 된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인 이민 금지법

등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역할은 후술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법령적인 제정을 통해 중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집행력의 부재로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화교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기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점차 네트워크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실태

(1) 전 세계 화교 분포와 영향력

(가) 화교의 인구와 분포

위와 같이 형성된 세계화교 사회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전 세계 화교 인구는 1998년 기준으로 3,58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²⁵

중국의 인구는 2000년 5차 센서스에서 12억 9533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전 세계에 13억 3,114만 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 세계의 인구의 23%에 해당한다고 한다. 물론, 중국 내 인구 중 소수민족이 8.41%를 차지하므로, 한족(漢族) 인구만으로 보면, 11억 5,940만 명이며, 한족의 해외거류민인 화교와 더하면 총 11억 9,521명이 세계에서 중국계로 살고 있는 셈이다.

화교의 대부분(약 80%)은 동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²⁶

²⁵ 대만 화교위원회의 통계이다. (사) 한중경제포럼, 『현대중국건설과 화교의 역할』 (서울: 재외동포재단, 2001) 서문참조. 그러나 화교의 수를 최하 5,000만에서 최고 8,000만으로 보는 이도 있다. 이덕훈, 『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1) 참조. 이는 보는 시각과 화교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 수복되지 않은 대만과 특별행정구인 홍콩 그리고 마카오의 인구는 화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후술할 화인, 화예 그리고 혼혈과의 연관에 따라 그 수는 달라진다.

²⁶ 양승윤·황규희 외, 『동남아-중국관계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pp. 41-65.

약 2,900만이 인도네시아(731만), 타이랜드(636만), 말레이시아(552만), 미얀마(300만 추산), 싱가포르(268만), 필리핀(103만), 베트남(100만 추산), 캄보디아(30만 추산), 라오스(16만) 등에 거주하고 있다.

199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화교인구는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하나, 인도네시아 국부(GDP)의 73%를 차지하였으며, 타이랜드의 경우는 인구의 10%를 차지하나 타이랜드 국부의 80%를 차지하여, 사실상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화교 인구가 많은 곳은, 미국(273만), 러시아(100만 추산), 캐나다(92만), 페루(50만 추산), 터키(40만 추산), 호주(37.2만), 사우디아라비아(27만), 영국(25만), 일본(24.3만), 프랑스(22.5만)등이다.

화교의 분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실은 화교가 단일그룹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화교는 방언과 출신지역에 따라 광둥인(廣東, Cantonese), 객가인(客家, Hakkas), 민남인(閩南, 福建, Minnans, Fukkiens, Fujians), 조주인(潮州, Techious, Chaozhous), 해남인(海南, Hainans)과 기타 산둥(山東)성²⁷ 및 호남(湖南)성출신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국가별 그리고 한 국가의 차이나타운에서도 구별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언어, 종족적 차이뿐 아니라, 각기 독립적인 집단조직인 방(幫)이나 상회(商會)를 운영하고 있다.

광둥인과 객가인의 상호 배척은 극심하여 혼인을 상호 삼갈 정도라 한다. 화교가 종족, 언어, 사회, 경제적으로 다수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화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²⁷ 한국 화교는 대부분 산둥출신이다.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1) 참조.

(나) 화교의 영향력

2000년 기준으로 추정된 전 세계 유동자산은 최소 3조 달러로 추정되고, 매년 총 생산액은 1조 달러로 추정되어, 미국, 일본에 이어 제 3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²⁸ 동남아시아의 경우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하나, 자산의 86%, 각국 실질경제성장 기여도 70%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⁹

미국의 일류과학자 12만 명중 3만이 중국계이며, 실리콘밸리에만 9,000명이 일하고 있고, 미국 우주계획에 참여하는 고급엔지니어 중에서 3분의 1이 화예(華裔)이고, 컴퓨터 센터 19개 중 12명이 화인(華人)이라 한다.³⁰

(2) 화교에 대한 정의 및 법률적, 제도적 조치

(가) 화교에 대한 정의

중국은 해외에 있는 중국계를 화교와 화인으로 구별하고 있다. 화교(華僑)란 한국의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개념으로 외국에 있으나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반면 화인(華人)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국의 외국적 동포(外國籍 同胞)를 의미한다. 그러나 편 의상 모두 화교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1989년의 전국 교민사업 회의에서의 표현에도 나타난다. “금후 교민사무부와 외국적 화인의 거래 합작은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 화교와 외국적 화인은 구별되면서 또 서로 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그리고 “화인과 외국인은 구별되므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³¹

실제적으로 화교와 연관된 개념은 다양하다. 화예(華裔)란 중국인의 후예라는 뜻으로, 화인 중에서 현지동화 정도가 많이 진행된 사람

²⁸ 장세화의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교민국 발표문 참조(2004년 2월).

²⁹ (사)한중경제포럼, 『현대 중국건설과 화교의 역할』 (서울 : 재외동포재단), p. 41.

³⁰ 장세화, 위의 글 참조.

³¹ 정신철, 『중국 조선족』, p. 9.

을 가르킨다. 가령,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와히드나 필리핀 전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 여사 등이 대표적인 화예이다. 화교를 이민화교(본국생)로 협의의 화교로 해석하고, 현지에서 태어난 토생화교(土生華僑, 남양생南洋生 즉, 동남아시아 출생)를 신객자녀(新客子女)로 범주화한 후, 혼혈화교와 구별하는 것이다. 혼혈화교 역시 토민화교, 모계혼혈, 단순혼혈아로 구분하여 화교의 성격을 강조하지만, 화교도민의 경우는 부계혼혈이나 토생화교자손 중 복 혼혈아의 경우 비화교로도 범주화하기도 한다. 즉 부계 혈통적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는 주로 화교로 취급함을 알 수 있다.³²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난 표현은 귀교, 교권 등이 있다. 귀교(歸僑)란, 화교 혹은 화인으로 해외에 있다 중국에 귀국하여 적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귀국교포를 의미하는 바, 중국 화교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권(僑眷)은 화교, 귀교들의 본국 거주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가족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가족, 부모, 자녀 및 그 가족과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 외손녀, 외손자녀 및 기타 친속을 포함한다(이상 “귀교, 교권 권익보호법 2조”). 동포(同胞)란 일반적으로 중국계를 칭하는 표현이나, 특히 마카오, 홍콩, 대만의 사람들을 가르킨다. 마카오와 홍콩은 현재 중국에 귀속되어 특별행정구이며 대만의 경우는 한 개의 성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은 특별지역에 해당한다.

교무(僑務)란 화교사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화교의 범위는 화교, 화인, 귀교, 교권을 모두 포함한다. 단지 화교에 대해서는 영사업무가, 화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외교관계가, 귀교 및 교권에 대해서는 국내적 교무업무가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무란 국내와 영사, 외교 업무가 중첩된 분야이다. 현재 한족, 귀교 및 교권 그리고 소수민족은 중국공민으로 홍콩 및 마카오 동포는 고도자치를 누리는

³² 吳主惠 著, 蔡茂豐 譯, 『漢民族的研究』(臺北: 臺灣商務印書館發行, 民國71), p. 300. 화교 분류를 참조.

특별행정구민으로 주로 중국 국내 정치의 대상이며, 대만동포는 통일과 연관된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하의 특별 대상으로 파악된다. 화교, 화인, 화예에 대한 정책은 거주국의 상황에 따른 양자 및 다자관계 측면에서 구별되는 외교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 법률적 제도적 조치

법률적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교 교권 권익보호법(2000.10.31)” 및 최근 개정 통과된 “실시방법(시행령)(2004.7.1)”이다.³³ 즉 정책의 대상이 중국에 귀국한 화교 및 그들 가족에 대한 것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것은 아니다.

총 30조로 이루어진 권익보호법은 기본법적 성격으로, 귀교 교권은 중국의 공민의 권리를 향유한다(3조)고 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국민이 공민임에 비추어, 사실상 귀국한 화교 및 화인은 국내의 공민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귀교의 권속이 화인일지라도 중국에 귀국하면 동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 귀교 및 그 권속을 하나의 집단화 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국무원(행정부) 및 국무원 주관부문에 이양한 점(3조)은 중국이 외국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중국으로 돌아온 화교(일시방문 포함)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특혜는 “실시방법”에 30개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 사무를 위한 해석집을 배포하였다. 여기에는 귀국한 화교의 출입국, 호적, 사회기관과의 연관 및 업무처리, 농장 및 토지 관련, 소유권, 교육, 송금, 사회보장, 법적 구제장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의 화교정책이 기본법에는 화교, 화인을 구별하는

³³ 丘進 外 主編,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實施辦法 釋義』(北京:光明日報出版社, 2004)을 참조.

듯 하나, 실제 국무원 연관 분야의 지침이나 지방정부의 법령 그리고 그와 연관된 법률에서는 혜택에 있어, 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특혜는 외국인 투자와 연관된 법령에서도 두드러진다. 가령 “중외합작경영기업 실시조례” 및 “실시 세칙”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주회사 등과 관련된 각 종 법령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구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및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이 합작 기업을 설립할 경우는 본 조례(실시세칙 혹은 법령)를 참조하여 처리한다고 하여, 외국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타 국내의 권익도 보장하는 것이다.

화교에 대한 우대 법령은 입양(1999), 해외유학생유치(2000), 외국적 화교 인재유치(2002), 의사자격 시험 인정, 대학입시에서 특혜로 소수민족보다 많은 점수를 부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³⁴ 이는 한국의 재외동포법 및 시행세칙이 그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외국 특히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화교 사업 관련 기구도 중앙에서 지방까지 정부는 물론 군중조직까지 중국의 통치구조에서 일관되게 정비하여 집행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는 국무원(國務院, 행정부)의 경우, 화교사무판공청이 총리를 보좌하는 기구로 화교 사업의 방침, 정책, 법규를 연구 작성하고 집행하며 감독하는 기관으로 존재한다. 특히, “외교부와 협조하여 외국주재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지시하여, 화교와 외국적 화인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는 역할로 확대하였다.³⁵ 지방에도 각 성(省)별은 물론 현(縣)급까지 기구를 설치하였다.

전인대(全人代, 국회)에 화교위원회를 설치하여 화교관련 법률초안을 제출하고, 실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특히 전인대는 지방의 지방인대(地方人代)를 중심으로 해외활동을 하는데, 이는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의 지도 하의 외교활동으로 거주국을 방문하거나, 교포의 현

³⁴ 장세화의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교민국 발표문 참조(2004년 2월).

³⁵ 정신철, 『중국 조선족』 참조.

지 권익상향을 파악하거나 하는 활동이다. 이는 중앙차원의 의원외교가 가질지 모르는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예민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있는 독특한 기구인 정치협상회의(政協)에도 화교사무가 소수민족 관련 사무와 함께 중요한 요소이다. “애국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조직이고, 공산당 지도하의 다당 합작(多黨 合作)의 정치협상 기구”인 정협은, 한국의 민주평통과 유사하나 그 기능은 확대되어 있다. 특히 정협의 사무는 화교와의 단결, 중국 화교 정책 및 집행의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협에는 사무국인 판사처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또한 통일전선과 연결하여, 화교로 이루어진 정당인 치공당(致公黨)과 중화전국귀국화교연행회라는 군중조직이 있다. 중국의 특성상 이런 군중조직 및 정협은 당의 통일전선부의 감독을 일정 부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화교에 대한 정책은 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세심하게 디자인된 제도와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 및 실제 정책에서 행정적으로 우대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도, 실제상에서 정책적 고려라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점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이며 민족주의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다) 중국의 국가전략과 화교의 중시

중국에서 화교정책은 항상 중시되어 온 주제의 하나이다. 이는 한국에서 재외동포(해외동포) 정책이 대외관계와 연결되어 사고되고 집행되지 않는 것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³⁶ 그렇다면 왜 중국은 화교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였는가?

그것은 역사적 측면, 국가전략적 측면, 양자관계적 측면, 그리고

³⁶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4호 (2002) 참조.

통일과 관련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의 화교에 대한 사고는 서구에 의한 중국의 반(半)식민지화 과정에서 성립한다. 청 정부가 설립한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1861)은 중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적(國籍)과 외교영사 사무를 처리한 기관인데, 이 기관 성립 후 청이 관심을 가진 사항의 하나는 중국노동자송출에 관한 법적인 보호였다.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와 노무송출조약인 아국침정관우초모화공조약(俄國僉正關於招募華工條約, 1866)을 최초로 맺게 되는데, 이는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영사 및 화교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둥성 중산(中山)에서 태어난 하와이 출신의 객가 화교라고 할 수 있는 손문(孫文, Sun Yatsen)이 주도한 신해혁명(1911)이 사실상 화교의 자금 지원으로 가능했던 점에서도, 세기 전환기에 화교의 영향력과 이들에 대한 정책은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신해혁명 이후, 북양정부(北洋政府, 신해혁명 이후 손문의 광둥정부에 대항하여 원세개가 북경에 성립시킨 정부)는 현재 한국의 재외동포법 및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과 같은 화교공인사무국(華僑工人事務局)시행규칙 반포(1917.9) 및 사무국 성립을 시도한다. 광둥혁명정부(廣東革命政府, 손문-장개석)에서도 동일하여, 중국 광둥혁명정부 내정부(內政部)는 교무국(僑務局) 성립 및 장정 반포(1923.12)와 교무국 판사세칙과 교민보호 장정 (1924.1), 그리고 교무위원회 성립(1926)을 통해 화교 및 국적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 통일된 중국 남경정부(南京政府, 中華民國)도 국적법(1929.2.5)을 반포하고, 공인(노동자)출국조례(1935.10) 같은 구체적 법령을 반포한다. 이런 점은 중국의 화교정책이 중국의 근대국가 성립과정과 동일한 선상에서 대외관계와의 연관 속에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³⁷

이런 역사성은 중화인민공화국설립 이후에도 지도자의 시각에 잘

³⁷ 『華僑華人百科全書：法律條例政策卷』 (北京：中國華僑出版社, 1998), pp. 608-616.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역사성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화교정책을 위치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은 각각의 최고위 지도자들의 화교사무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정책지시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개혁개방의 설계사라는 등소평(四川省 客家人)의 등소평문선(鄧小平文選)에 보면, 여러 차례 화교정책의 구체적인 점에까지 발언을 하고 직접 화교업무를 감독하였다.³⁸ 특히, “동남아 화교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주목하고”, “타일랜드에서 열린 교무예비회가” 동남아 각국의 주시를 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화교에 대한 3가지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것은 1) 화교의 주재국 국적 가입을 권유한다, 2) 중국 정부 역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3) 이중국적은 반대한다는 점이다(1978.4.30).

이런 국가전략의 고려에서 나온 정책은 동남아 각국과의 양자관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데, 타이랜드 정부 대표단과의 접견 시에, “기본적 정책은 화교가 태국의 국적에 가입하는 것이나, 중국 국적에 남고 싶다면 강요하지는 않으며, 중국 정부 역시 국제관례에 따라 화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천명하였다(1978.11.9). 이러한 사실상 방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언급은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적 협상이나 접견 시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히 양자관계에서 화교정책의 연관성은 중국의 화교정책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즉 대외관계와 연관될 때에는 국제법과 주재국의 원칙에 따라 화교의 주재국 국적을 강조하나, 대내적으로는 화교가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은 사실상 국내인보다 특혜를 주는 정책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화교정책은 대만과의 관련성에서 중시된다. 대만과의 관계는 통일전선(統一戰線)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중국에서 생각하는데, 중국은 대만문제, 소수민족문제, 화교문제와 같은 통일전선정책

³⁸ 정신철 편집, “鄧小平論僑務”(2004) 및 위의 『華僑華人百科全書: 法律條例政策卷』(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8) 참조.

부분과 대외관계 영역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원칙성과 영활성(유연성)이라는 중국 대외관계 원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³⁹ 이러한 점은 중국정부의 화교 정책이 대만을 포함하는 화교정책으로, 민족내부의 통일과 국제적으로 양자관계의 해결이라는 면에서 중시되고, 거기에 역사적인 관심이 부가되어 국가전략의 근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구적 측면에서 공산당의 통일전선부와 국무원(國務院)의 화교판사처(華僑辦事處), 대만판사처(臺灣辦事處) 등이 당-정의 핵심 기구로 위치하여, 국내적 연결고리로 화교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화교정책이 가지는 전략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중국의 화교정책

1) 개혁 개방 이전까지의 화교정책

중국의 화교 정책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었는가? 대답은 국가전략적인 인식 면에서는 그러했으나 실제적인 정책에서는 시대별로 부침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공산당은 정부적 형태를 가지지 못하여 선언적 차원에서 화교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최초의 시도는 중공 인민혁명정부 교무위원회 조직대강(1933)으로 규범화되고, 이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화교위원회 성립(1933.4.12)으로 나타나게 된다.

해방 후, 정협 화교사무조 (1949.10.18), 중국 화교사무위원회 (1949.10.22), 토지개혁 중 화교에 대한 재산처리방법(1950.6.3), 화교토지재산처리법(1950.11.6)등의 법적인 정비와, 화교사무위원회 제 1차 교무확대회의(1951.6.17), 중국 화교사무위원회 교무확대회의 (1953.11.1), 중국 국가 화교보호정책 명령 관철하는 문건(1955.2.23)

³⁹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장된다면, 구체적인 외교에서는 매우 유연하게 행동하는 중국의 대외관계 원칙이다. 중국은 기본적인 국가이익이 걸린 전략적인 문제에는 외교적 원칙에 근거하여 쉽사리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나, 구체적인 외교적 사안이나 수단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 자오찬성, 『중국의 외교정책: 미시-거시 연계 접근 분석』 (서울: 오름, 2002), 제 5장 참조.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화교업무는 정리가 된다. 이 기간 화교업무와 연관되어 중시된 대외 관계는 중국-인도네시아 이중국적금지조약(1955.4.22)이 있는데, 이는 현재도 중국정부가 이중국적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중요한 조약이다.⁴⁰

이후 중국은 반우파(反右派) 투쟁(1957~1959)과 문화혁명(1966~1976)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사실상 법은 무시되고 정치적 동원과 운동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었다.⁴¹ 이 시기, 화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화교가 적대관계로 여겨져서 화교 및 그 가족들이 탄압을 받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논점은 중국 전체의 ‘인민공사’화에 따른 ‘호구 및 단위제도’의 도입과 함께 화교 재산이 몰수되고 귀국화교의 생활이 통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해외에 있는 화교와의 연락단절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 시기 중국이 대외관계에서도 고립주의를 시도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이 극소수였다는 점에서 화교정책은 중국 대외관계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문화혁명 기간 중 소위 극좌분자들은 동남아 국가화교에게 혁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고, 특히 버마정부에 대해서는 ‘화교들이 모택동 뱃지를 달수 있도록 하고 조국(중국)에 충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랑군에서 화교폭동이 일어났으며 결과적으로 버마와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다른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도 인도네시아와는 단절되었고 긴장되었다.⁴²

그 결과 1978년 덩소핑의 개혁개방의 화교정책적 의미는 정책의 회복으로 시작되었다. 즉 대내적으로는 화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그들이 중국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들의 국내친척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교사무도 회복시키는데서 출발하여 국무원에 화교

⁴⁰ 양승윤·황규희 외, 『동남아-중국관계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Stephen, Fitzgerald *China and the Overseas Chinese: A Study of Peking's changing policy, 1949~19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pp. 107~110.

⁴¹ 왕정우, 윤필준 역, 『화교』 (서울: 다락원, 2003), p. 145.

⁴² Stephen, Fitzgerald 위의 책, 9장.

판공실이 성립(1978.1)되고, 화교에 대한 법률정비도 시작되었다. 정책의 원칙으로 16자 방침(1978.12)이 천명되는데, 이는 “일시동인, 부득기시, 근거특점, 적당조고 (一視同仁, 不得岐視, 根據特點, 適當照顧: 동일시하고, 멸시하지 말며, 특징에 근거하여, 적당히 보살핀다)”는 것이다. 화교들이 소유했던 농장을 돌려주고 교육에 있어 특혜를 베풀었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 각국 정부를 만나서 3가지 원칙(화교의 주재국 국적 가입권유, 이익을 보호, 이중국적은 반대)에 근거하여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 중국의 화교정책은 정책적, 선언적, 법적 측면에서 사회주의화를 일단 시도한 것이며, 이후 국내적인 정치적 변화에 따라 사실상 배제의 정책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은 이런 화교정책을 중국의 건국 시기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 시킨 것이며, 여기에서 새로운 화교정책이 발생한다.

2) 개혁 개방 시기의 화교정책

화교정책 변화는 다음의 네 가지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회복기(1978~1985), 지방화 시기(1985~1991), 조정기(1992~1998), 세계화 시기(1998~2004)가 그것이다.

78년 개혁 개방을 천명한 후, 화교 정책은 중국의 개혁 개방과 같이 출발하였다. 전술한대로 중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화교에 대한 시각과 권익 그리고 법적 및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중운동 차원에서 권익 회복을 시작한다(개혁, 改革). 반면, 중국이 자본주의적 국제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개방에 따른 해외자본 투자가 필요하였는데, 초기의 자본은 90% 이상이 화교로부터 연유했기 때문에 해외화교에 대한 투자우대정책이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개방, 開放). 그러나 이 시기는 개방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있던 시기이며, 국내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파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시기여서, 화교정책은 중앙차원에서 정비되지만 그 실행은 부분적

차원에 머물렀다 할 수 있다. 1978년 국무원에 교무판공실이 설치된 후, 전인대(中央)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현, 시(地方)에 화교사무원위원회가 구성되고(1983.6), 정협에도 홍콩, 마카오, 대만 교무원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정책구성을 위한 사업좌담회도 1979년부터 개최되었다. 그러나 86년까지 교무정책의 대강은 통과되지 못하였다.⁴³

1984년 경제특구 실험과 부분적 개방으로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1992년 4연(沿海, 沿江, 沿線, 沿邊)방침에 따라 전면적인 개방으로 발전한다. 개방초기(부분개방기: 1984~1992)에 중국 경제를 이끌고 고도성장을 유지하게 한 원동력은 외국자본이었고, 이 중 화교자본이 기업 수로는 86%, 투자액으로는 88.4%를 차지하였다. 즉 사실상 화교자본이 중국 경제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⁴ 그 결과 중국 지도층의 관심은 더 많은 화교자본이 자신의 고향(교향, 僑鄉)에 투자되도록 투자에 따른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⁴⁵ 이 시기는 중앙에서 수립된 각종 화교정책의 기초가 지방차원에서 구체적인 지방정부의 법령과 지침 그리고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행되는 시기이다.

화교자본이 몰린 화남지방은 급격하게 재정이 팽창하여, ‘광동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나올 정도로 홍콩 및 광둥, 객가 자본을 유치한 광동성과 조주와 대만의 민남자본을 유치한 복건성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⁴⁶ 이러한 화교자본의 유치와 지방화 경향은

⁴³ 『中華人民共和國法律匯編, 1979~1984』(北京:人民出版社, 1985); 新中國領事實踐編組, 『新中國領事實踐』(北京:世界知識出版社, 1990), pp. 96-102을 보면, 중앙차원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⁴⁴ 중국의 화교들은 이미 19세기 중엽 양무개혁 과정에서 본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양승운·황규희 외, 위의 글, p. 68.

⁴⁵ 『華僑華人百科全書: 僑鄉卷』(北京:中國華僑出版社, 1998) 참조.

⁴⁶ 한어7대 방언은 오, 상, 감, 객가, 월, 민, 복방이다. 이 중 감(강서)과 대부분의 복방인 등일부는 화교를 배출하지 않았으나 다른 지역은 대규모 동남아 등지에 화교를 배출하였다. 박병석, 『중화제국의 재건과 해체』(서울:교문사, 1999), pp. 315-321. 이들은 이 시기 대규모로 자신

각 지방에서 자신의 출신화교를 우대하는 각종 법령 및 우대조치의 남발을 가져왔고 경쟁을 가속화 시켜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또한 투자에 따라 화교가 중국에 들어와 거주하므로 귀교에 대한 정책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 중앙차원에서 “귀교 및 교권 보호법(1990)”, “대만동포투자 장려규정”, “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 장려 국무원 규정(1990)” 등이 통과된다. 즉 이 시기는 지방 차원에서 급증하는 귀국 화교 및 화교 투자에 대응하여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이것이 중앙과 연결되어 집행되지 않은 지방화시기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지방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에서 중앙으로의 재조정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성장한 중국의 불륨에 걸맞는 중앙기구의 설치와 지방으로 이양되었던 권한을 다시 중앙으로 가져왔다. 분세제(分稅制)개혁(1994)으로 대표되는 재정 및 세수 개혁과 국무원의 구조조정과 당-정 관계 조정, 당-군 관계 조정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변화는 화교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귀교 및 교권 보호법(1990)” 통과이후 시행령(1993)이 통과되며, 국무원 규정은 “대만동포투자보호법(1994)”으로 중앙 차원에서 정비된다. 또한 중화경영합작계통(1992)을 중국정부의 이니셔티브로 구성하는데, 이는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계 기업인 및 경영자 간의 네트워크로, 이제 중국정부가 홍콩, 마카오, 대만인을 외국인이나 화인으로 보지 않고 중국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차원에서도 각종 법률을 중앙의 원칙과 귀교 및 교권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재정비하기 시작한다. 즉 이 시기는 중국에서 재중앙화 시기인 동시에 법제화시기라고 할 수 있다.⁴⁷

의 출신지역에 투자하였다.

⁴⁷ 『華僑華人百科全書：法律條例政策卷』(北京：中國華僑出版社，1998) 참조.

(마) 인프라 구축 및 운용

1) 화교 네트워크 구축

이런 국내적인 화교 정책과 그것의 대외관계와의 연결이 진행되면서 화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요소는 중국 국내가 아닌 국외 화교 사회의 흐름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면서 자신의 고향 등에 투자했던 화교들이 종족-언어-지방적 차이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80년대 객가인들이 중심이 된 세계객상(客商)대회를 개최했던 싱가포르의 이광요(Lee Kwan-Yew) 수상은 전 세계 화교기업인을 모아 1991년 제 1차 세계화상대회(世界華商大會)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후 격년제로 홍콩, 방콕, 오타와, 멜버른 등에서 열린 세계화상대회는 90년대에 상호간의 네트워크화를 공고히 하게 된다.

중국정부의 화상대회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공개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화교대회 및 중국과의 연결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침묵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외국, 특히 동남아 국가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경제발전 전에 매진하는 도광양회적인 입장은 여기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세계적인 위치는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강택민의 대외관계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유소작위(有所作爲), 즉 가능한 곳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는 종래의 최소 간섭전략에서 소극적 간섭전략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0년 유엔 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 선포된 3개초점, 4항원칙(3個焦點, 4項原則)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여겨졌다. 대외관계의 행태에서도 다극화와 유엔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실천으로 전방위(全方位)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각종 다자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정치대국화를 지향하였고 외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⁴⁸

⁴⁸ 이진영, “21세기 중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아태연구』 제8권 2호 (2001) 참조.

이런 입장은 화교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귀교 교권 권익보호법(2000.10.31)”을 개정하여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2001년 제6차 화상대회를 최초로 국내로 유치하여 남경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의 화교 네트워크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였다. 강택민을 비롯한 지도층이 대거 참여하여 화교대회를 축하한 것이다. 그것은 과거 대중화경제권(大中華經濟圈)의 개념을 부정하고 사용조차 꺼리던 태도에서, ‘조국과 화교사회’의 상호 평등성과 협력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이다.

1998년 출판되고, 2000년에 재출간된 12권의 화교화인백과전서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립되었다. 또한 남경회의를 위해 중국정부는 11억 달러를 지출하였고, 강택민의 축전과 주용기의 대회참여가 이루어졌다. 즉 공식적으로 화교사회를 중국정부와의 연관 속에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고 중국을 포함한 화인경제권의 창출이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화상대회는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며, 현재 싱가포르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또한 IT기술과 접목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네트워크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화교는 중화민족 발전의 한 축이 된 것이다.

올해, 2005년 10월 제8차 세계화상대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게 된다. 화인경제권과 화교 투자를 유치하려는 한국의 의도가 만난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화교정책은 좀 더 공세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호금도 시대 대외관계의 중점이 평화적으로 대국화 한다는 화평굴기(和平崛起)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즉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제발전에 걸맞는 외교를 통해 국제문제에서 중재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 화교정책은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 중국이 중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선회함은 전 세계 화인을 네트워크화하고, 세계화 시대에서 화인 및 중국 경제가 가지는 실력으로 세계를 리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표현은 전술한 중화민족의 외연(外延) 확대이다. 소수민족의 역사도 중화민족의 역사의 일부로 해석하는 역사왜곡은 한국과는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둘러싼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형태로 분쟁화 하였다. 일부 학자들의 화교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태도가 대외관계와 화교정책에 모두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한 태도 및 강화되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어떤 방식으로 대외관계에서 융합하는가에 따라 화교정책도 변화를 겪을 것이다.

2) 화교 네트워크 운용

그렇다면 현재 화교 네트워크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화교네트워크는 수평적 관계의 구축, 비정치적 영역, 특히 중화문화와 경제활동에 관련된 네트워크의 구축,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평적 관계의 구축은 화교들 내부에서 수평적인 관계 뿐 아니라, 화교와 모국, 즉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대만은 이미 1963년 일본 동경에서 세계화상경제무역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24회 대회까지 격년제로 화상경제무역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1999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5차 화상대회를 계기로 대만에서도 참여함으로써,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동남아,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거점별 네트워크가 운용되는 계기를 열었다. 물론 이 회의에 한국의 화교들도 처음으로 참가하였고, 화상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싱가포르, 홍콩, 태국이 중심이 되어 사무국을 준비하고 그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게 된다. 즉 화교 네트워크는 수평적 입장에서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을 수용하고, 이를 해외동포의 영역에서 해소시키는 역할을 발휘한 것이다.

특히 그 중점을 ‘사회문화의 원동력’, ‘과학기술과 상업’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둠으로써, 비정치적 영역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를 실용적으로 도입시켰다.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고 경제 문화라는 공통 분모로 해결하여 사실상 정치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후 제6차 남경대회는 중국 정부 주도하에 열리게 되고 사무국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무국의 중점적 사항은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는 세계화상 비즈니스 네트워크(WCBN: World Chinese Business Network, <http://wcbn.asial.com.sg>)의 확충이다. 기타 대표적 사이트는 종합적 사이트를 비롯하여, 차이나타운, 종친회, 거주지별, 직업별, 출신지역별 사이트가 운용되고 있고 현재 확대중이다.⁴⁹ 그 결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화교 네트워크는 중첩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업종, 출신지, 종친회, 연령에 맞는 여러 단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무국은 이를 정리하여 알리는 과정에 있으며 화교 사회의 네트워크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를 자문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 시사점

(1) 동북아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시사점

중국의 화교정책은 역사적으로 연원이 깊고, 국가의 장기전략과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반면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권위주의 시절에는 공작적 성격을 가졌고, 분단에 기초 하였으며, 그 결과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변화하였다. 문민화되고 나서도 국가전략 혹은 장기적인 대외관계와 연관된 과정에서 재외동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특히 재외동포를 여전히 대상화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인식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부가 화교에 대한 일관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⁴⁹ 자세한 내용은 (사) 한중경제포럼, 『현대중국건설과 화교의 역할』, pp. 95-96 참조.

또한 이런 인식은 제도화의 과정에도 나타난다. 기능은 정치적 영향을 받더라도 중국은 완비된 재외동포 업무 체제를 가지고 있다. 행정, 입법, 통일전선, 지방 등 순수 국내업무와 국내외업무가 교차하는 곳, 영사업무, 그리고 외교 업무에서 화교업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제도적으로 지침화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각 부문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부족한 형편이고, 일관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법 파동이나 조선족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이런 점이 모두 표출되었다. 특히 업무 실행도 제도화가 정비되지 못한 관계로 초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해외동포들은 점차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21세기 이전 해외동포 사회는 반목과 질서가 존재하여 분열의 양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상황은 중국의 경우도 동일하다. 하지만 중국이 1990년대에 네트워크화를 시작하였다면, 한국의 네트워크화는 9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네트워크화가 해외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한국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 해외한국무역인협회(OKTA) 등 많은 자생적 기관들이 생겨나고, 점차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는 달리 4강대국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재외동포 네트워크는 각 나라별로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개방은 중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해외동포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국경이 열어지고 인구이동이 활발한 세계화 시대에 혈연에 기초한 중화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제관계, 사회,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향후 끼칠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여 문화적 경제적 의미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긴요한 형편이다.

한류가 문화적 원동력이라면, 한상은 경제적 원동력이다. 이는 남

북한을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힘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후 본국과 화교사회가 불균등 발전 상태에서 점차 균등해지다가 21세기 들어서는 네트워크화하면서 일체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제 불균등에서 균등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네트워크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의 전향적인 한상 우대 정책과 네트워크화는 동북아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문제는 해외에서 분출되는 네트워크화를 본국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인식적으로 담보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전히 강한 배타적 경향, 제도적 미비,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유연성의 부족은 한국과 재외동포와의 평등한 네트워크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오히려 문제는 해외동포가 아니라 한국에 있다. 장기적인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해외동포와의 협조가 긴요하고, 이는 이들을 혈연 및 문화 그리고 경제에 기초하여, 네트워크화하게 하고, 한국과 연계를 맺게될 때 가능한 일이다. 즉 세계화에 대응은 오히려 해외동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서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중화주의의 대두와 화교정책의 문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중국이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인 한국에게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고심해 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화교들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오히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였듯이, 한국의 재외동포들도 이제 남북한 간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물론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개방의 정도가 낮고, 폐쇄적인 운용으로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리고 한국보다도 북한에 접근하기 쉬운 것이 재외동포이다.

이들이 자체적인 네트워크화를 거쳐, 문화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개방과 발전을 유도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여를 한다면, 그 역할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 화교 네트워크는 중국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한국에게 시사점도 주지만, 우리

의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공존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 점에서 화교 네트워크의 형성 원리와 중국의 정책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제안요소

(가) 개념과 인식의 변화

남북을 고려한다면 한민족 공동체의 최종목표는 통일이라는 정치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외동포를 포함한다면 영토적 국민국가체제를 넘어서는 전 세계의 한민족 성원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동포의식을 토대로 정서적, 문화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개념에 따라 사실상 구성원이 변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민족연대가 비록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나, 묵시적으로 결속된 힘을 활용하여 일정한 정치적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민족 공동체의 개념은 단순하게 비정치적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조직망을 형성하고 운동의 주체를 만들며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할 때는 도구적 의미에서 명확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민족공동체는 ‘경제-문화공동체 즉 세계 한민족의 경제적 복리 증진과 문화적 유대를 통한 정체성의 강화를 위한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기적 측면에서 정치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도, 현실적 측면에서는 경제-문화 공동체의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라 해도 여전히 주권 국민국가가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명시적인 목적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정치적 성격을 어떻게 구체적 정책에서 희석시키면서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민족공동체 논의는 가장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행위이지만 전적으로 수단에 있어 비정치

적이어야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한 전제는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이 명확한 상태에서 인식의 변화는 추진하는 정책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한 한민족 공동체의 민족주의적 성격의 이해, ② 다원화 속의 일체감 형성, ③ 쌍방향의 참여정책, ④ 한국사회의 변화에 수반되는 국내에서의 정책행위가 외교쟁점화 되는 경향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다.

첫째,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 비교하여 국토의 규모, 인구, 자원, 자본, 기술에 있어 비교우위 요인이 적다. 한국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려면 우수한 인적자원에 기초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해외에 자민족의 10%가 거주하는 민족국가는 몇 안 되며 그런 측면에서 재외동포의 인력활용은 한국의 국익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둘째,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그들이 언어, 문화, 거주국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이질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질화를 동질성으로 통합하려는 노력보다는 다양한 그들의 상태를 인정하고 이런 속에서 한민족의 공통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다원화 속의 일체감 형성이 한민족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세계화 시대의 요구에 맞는 것이다. 셋째, 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인 모국 중심의 흐름에서 재외동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개발이 필요하다. 다원화는 중심성 보다는 다양성 속의 공통적 일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참여에 기초한 정책만이 생명력을 가진다. 넷째, 세계화시대에 한민족공동체를 이루려는 방향에서 재외동포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한국사회의 변화가 선행되어 다양한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의 이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정책이 단순하게 국내에 머물지 않고 외교적인 성격도 항상 포함하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나) 정책의 기조 변화

그렇다면 세계화 시대에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정책은 어떤 기초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 한 예로, 문화공동체의 창출을 위한 기초를 제시해 본다. 문화공동체의 창출은 ① 한민족 정체성의 구축사업, ② 대사관 기능과 연결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③ 문화 및 영사외교의 강화, ④ 중장기 정책과 구체적 연구조사 사업의 병행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한민족공동체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가 설정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인 “재외동포들의 혈통, 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한다”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재외동포들의 혈통, 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으나, 거주국내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그 일차적 지원을 한다. 또한 거주국내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추진방향도 변화하여야 한다. 기존의 방향은 ① 재외동포들의 자조노력을 권장 지원하고, ② 재외동포들이 거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거주 지역 사회에서 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언어, 전통문화, 예술 등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④ 자유, 민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⑤ 재외동포들의 거주국내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⑥ 재외동포들의 한국 내에서의 투자 등 경제활동의 장려와 재산권 행사 등을 보호하는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방향에서 추가할 내용은 ① 각 재외동포 사회의 특이성에 기초한 재외동포의 요구를 파악하여 거주국에 대한 외교정책과 연관하여 추진하고, ② 거주 지역사회에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 경제적 차별을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거주국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며, ③ 정체성 유지 및 재발견에 필요한 언어, 전통문화, 현재의 대중문화 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문화지원은 ④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성방송이나 컴퓨터통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국가의 국경적 틀을 넘어서고 거주국의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기술-문화 공동체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 사업기조로 연구조사사업을 중장기 정책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재외동포사회의 다원적 성격에 대한 연구 조사 사업이야말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책기조에서의 문제는 ‘추상적인 동질성의 강조’와 함께 ‘지역별 재외동포의 차이를 사실상 무시’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연구조사사업의 실시야말로 구체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추진 방향과 한민족공동체 창출의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정책의 추진체와 시스템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 추진체의 변화

한민족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 및 시스템의 변화는 ① 외교 전략과 연관된 장기사업으로의 인식 ② 외교통상부의 직제 및 업무분임의 변화, ③ 반관반민체의 사업영역과 조정, ④ 민간에 위임되는 조사 사업, ⑤ 현지에서의 구체적 정책, 한국에서의 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추진체의 변화는 정부 내의 직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장 실현 가능한 사항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국가전략에

기초한 직제개편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먼저 한민족공동체 창출은 국가의 전략과 연관된 장기적인 사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기획하고, 장기적 목표 및 중, 단기적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의체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점차 강조되는 민간의 방향을 포함하고 재외동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추진체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외교통상부가 주관이 되는 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기구는 재외교민청이나 행정적 기능을 가진 재외동포위원회의 신설, 혹은 재외국민영사국의 확대나 부처간 정책조정 및 종합적 집행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⁵⁰ 현재의 이원적 성격과 기능의 약화로써 장기적인 한민족공동체 창출을 추진할 인력이나 예산 기구로는 부족한 것이다.

이원적 성격이라 함은 재외동포정책의 재외국민영사국과 재외동포재단으로의 이원화와, 정부내의 외교통상부와 기타 부서와의 이원화를 들 수 있다.⁵¹ 문제는 한민족공동체 창출의 기초가 언어와 문화교육을 통한 정체성의 유지 및 현지에서의 영사 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원화된 조직의 양식으로는 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외교통상부가 외교와 재외동포정책의 주관 부서인 현실에서 최소한 정부내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반관반민 협조체제의 구축이다. 전술한대로

⁵⁰ 외교통상부는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영사 대사직을 2004년 신설하였다. 현재 대사는 재외동포재단에서 기획이사를 역임했던 진 캄보디아(크메르) 주재대사 장철균대사이다. 또한 재외국민영사국의 기능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⁵¹ 2003년도 기준 재외동포재단을 제외한 재외동포 관련 업무와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교통상부: 재외동포단체지원(12억원), 재일민단지원(40억원) ②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교육(299억원), 교과서보급(11억원), 각종 연수지원(317억원), ③ 문화관광부: 세계한민족축전(7억원), 한국어해외보급지원(6억원), 한글우수성 선양(9억원) ④ 통일부: 홍보(3억원), ⑤ 법무부: 법률상담 및 책자(2천2백만원),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초청(4천만원) 등

정부의 사업에서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가 심한 형편이다. 이것은 한민족공동체 사업의 특장상 현재 초기단계인 관계로, 사업의 성과를 종합하여 추후 사업에 반영되는 구조가 아닌 관계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사업예산에 있어 일정부분 정부의 지원에 따른 민간사업부문만이라도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특히 지원된 사업을 기초로 추후 사업을 심화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언어, 문화적 정체성 유지나 거주국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민간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조정능력이 정부에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정능력을 위해서는 상위의 기획, 조정 부서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지의 대사관에는 교육, 문화원의 설립이나 혹은 영사부의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지기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만이 현지의 구체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추진체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전술한 인식변화에 따른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업무영역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비록 단계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점은 당위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 재외공관의 변화를 제기할 수 있다. 현지 공관내의 조직 및 업무분장의 변화에 따른 문화원, 교육원 및 영사관의 기능 강화가 그것이다. 현재 공관내의 재외동포 교육 및 문화 업무는 공관의 급수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교육부나 문광부 파견공무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들의 역할은 주로 거주국 정부와 관련된 업무나 재외국민 영역의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그

러나 이들 부처 공무원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거주국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대체적으로 그 이해의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서술하듯, 순화보직제와 영사업무 기피현상 때문이다. 또한 대사관 내에서의 유기적 협조체제도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한민족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현지 공관에서 이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 및 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직상에 있어 외교관의 직제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다양한 형태의 외교직 공무원의 채용이 필요한 형편인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외교환경은 변화하는 직제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외무고시에 의한 인력충원은 일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모든 변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위하여 ① 문화 및 교육관련 외교관을 별도 채용하는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현재의 부처파견으로는 재외동포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재외동포 및 지역을 연구하고, 문화 및 교육 사업에 애정이 있는 적격자를 선발(현지건 한국이건)하여, 소정의 교육을 거쳐 현지에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현지에서 채용이 증가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건 외국적 동포이건 현지 사정에 밝고 적합한 자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 현재 문화원의 경우 계약직 형태로 일부 채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업무영역에서 구분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지국민의 경우 업무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본국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다. ③ 민간에게 개방되는 외교직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 및 문화 등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제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⁵² 예를 들어 주일 프랑스대사관의 문화관은 일본역사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채용되

⁵² 외교통상부는 현재 민간인에게 개방된 직제를 여럿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것이 비판적 시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인에게 적합한 직제의 제공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비의 감소 등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④ 직위보다는 업무영역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직제가 바뀌어야 한다.⁵³ 현재 본부의 인사시스템과도 연결되는 순환형 보직의 경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외교는 단순한 정무 및 경제문제의 아닌 지역사회의 이해에 기반을 둔 문화 및 교육외교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직상에 있어 다른 조치는 문화원, 교육원, 영사관의 기능을 한민족공동체의 추진을 위한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다. 중앙에서 외교통상부가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조정 및 집행기능이 가능하다면, 외국 현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상응하여, 이를 수행할 조직 및 기구의 개편은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문화관광부 및 교육부 체제에서 일관적인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만약 이것이 어렵고 각기 독립적인 부서들이 외교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최소한 업무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제시할 중앙의 상위기구가 필요하다.

영사관의 기능도 변화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영사관의 기능은 재외국민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적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거주국의 법적 테두리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⁵⁴

⁵³ 현재 정부의 직제가 변화하고 있다.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부처를 떠나 정부의 고급공무원 풀에 속하게 된다. 부처간 교류는 물론 다른 부처 근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행사부를 필두로 팀제가 운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팀제는 과장급(서기관)이하의 공무원을 민간처럼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다. 팀장이 꼭 과장이 아니라 5급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혁신적인 직제개편이 현재 시험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간신문 참조(매일경제, 2005년 8월 21일).

⁵⁴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영국적 한국인 부인 토막살인사건의 가해자(남편)에게 매우 가벼운 5년형이 선고되었다. 주영 대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한국계이나 영국국민이고, 영국법원의 판결이므로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지 교민들의 반응은 매우 다르다(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2005년 8월 21일 방영분 참조, *Korean Weekly* (재영교민신문) 참조.

가령 거주국의 한인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의 실행을 들 수 있다. 현재도 실행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거주국의 외국적 동포단체의 연락관을 사실상 상주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도 있다. 계약직으로 예산에서는 거주국의 동포들의 경제적 자립도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으며, 모국과 재외동포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분란과 시비가 있고, 심지어는 모국정부가 그 분란을 조장한다는 말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직접적 창구를 개설하고 업무에 있어 표준화된 가운데 공개적인 접촉을 한다면 쌍방향의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재외동포단체의 독립적인 성격도 필요하다.

3. 헝가리 민족

가. 역사적 배경

(1) 헝가리 민족의 형성

헝가리 민족이 독자적 민족으로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우랄산맥 동쪽이지만, B.C. 500년부터 700년 사이 확인되지 않은 시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랄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⁵ 이들의 이주는 서로마 멸망시 중앙아시아에서 몰려오는 훈족과 아바르족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우랄산맥의 서쪽 불가강과 카마강 사이의 바시키리아 지방에 정착하게 된 헝가리 민족은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주변의 종족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자르(Magyar)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바시키리아 지역에 살던 초기 시기를 헝가리인들은 The Great Hungary라

⁵⁵ 이상협, 『헝가리 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p. 21.

부른다.

750년 바시키리아를 떠나 대부분의 헝가리인들은 서쪽으로 향하여 돈 강과 아조프 호수 사이로 이주하는 데, 이 시기를 레베디어(Levedia)라고 부른다. 한편 The Great Hungary에 남아있던 헝가리인들은 후에 몽고인의 침입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

유목생활을 하던 레베디어의 헝가리인들은 동쪽에서 밀려드는 민족이동과 풍부한 초원을 찾아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895년 오늘날 헝가리 국토인 카르파티아 분지(Carpathian Basin)에 정착한다. 카르파티아 분지는 서북쪽으로 모라비아, 서쪽으로 프랑크, 남쪽으로는 불가리아와 접하고 있었으며 스키타이인, 사르마티아인, 훈족, 아바르족, 테체네그족, 몽골 족 등 다양한 민족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헝가리 민족은 이 지역의 지배세력이 되었다.

(2) 헝가리 국가의 흥망성쇠

(가) 헝가리 왕국의 성립과 부침(1000~1526)

헝가리는 10세기 중반 유목사회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신성로마제국과 동로마제국 사이에서 민족존립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헝가리는 우랄산맥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의 민족이동 중에 습득한 유목민의 세계관과 의식구조를 버리고 서유럽 기독교 문화와 발전모델을 택하였다. 헝가리는 로마 카톨릭을 수용하여 교회 조직을 확립하고 서유럽 개념에 따른 헝가리 왕국을 1,000년 간 건설한다.⁵⁶ 이후 헝가리는 아시아적 문화 유산과 고대 튀르크 문자들이 점차 퇴조하고 이를 대신하여 라틴·서유럽문화와 문자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헝가리는 중앙집권화한 군주의 세력을 넓히는 노력을 통해 동쪽의 트랜실바니아 지역 등 주변의 소군주들을 자신의 세력권에 포함시켰다. 또한 카르파티아 분지내에 거주하던 여러 슬라브계 종족들은 11세기 말에, 헝가리인들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헝가리인들이 정

⁵⁶ 이슈트반 1세가 헝가리 왕위에 오르며, 교황 실베스타가 왕관을 선사하였다.

착하고 헝가리 왕국이 공고화되면서 더 이상 카르파티아 분지내에 민족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13세기 몽고의 침입으로 헝가리는 민족과 국가의 소멸위기를 맞는다. 헝가리는 서유럽 기독교 국가의 최전선에서 몽고의 공격을 받아 당시 인구 2백만명 중 반 이상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다.⁵⁷ 특히, 다뉴브강의 동쪽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다. 몽고군이 물러간 후, 13세기 중반부터 헝가리는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헝가리는 국경을 개방하여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유입되고 국토가 개발되며 경제가 안정되었다. 국왕은 국토 방위를 위하여 봉건 귀족들에게 성과 요새를 건설하고 사병 조직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4세기 초, 헝가리 동쪽으로부터 여러 민족이 대규모로 이주해 왔고, 14세기 중반 헝가리는 남쪽의 크로아티아, 달마티아를 재회복하고, 발칸으로 진출하여 불가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루마니아를 예속시켰다. 이후 1485년에는 빈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헝가리 왕국은 오스만-터키의 침입을 받아 1526년 종말을 고하였다. 150여년간 오스만-터키의 서유럽 진출을 막아내던 헝가리는 1526년 모하치 패전으로 국왕 러요시 2세와 고위관리, 성직자가 죽고 10여만명의 헝가리인들이 인질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다.

(나) 분단 시기 (1526~1686)

1526년 헝가리 왕국이 무너진 후, 헝가리는 3등분되었다. 처음에는 트랜실바니아 지방의 제후인 서포여이 야노시가 차지한 헝가리 동부와 합스부르크 황제 칼 5세의 동생이며 보헤미아 왕국의 왕인 페르디난트 1세가 차지한 헝가리 서부로 양분되었다. 동부의 야노시가 죽은

⁵⁷ 13세기 서쪽으로 향한 몽고군은 먼저 이슬람 제국을 희생시키고, 러시아를 정복한 후, 흑해 북쪽을 통해 서유럽을 침입하였다. 1251년부터 1252년 사이 북쪽의 독일·폴란드 군을 궤멸시키고 남쪽의 헝가리를 공격하였다. The Times, *Concisis Atlas of World History* (Maplewood, New Jersey: Hammond, 1982), p. 46.

후, 그의 아들 야노시 2세는 국왕이 아닌 트랜실바니아 공국의 군주로서 재위하였으나, 페르디난트 1세가 동부를 공격하자 오스만-터키가 개입하여 중부 헝가리를 차지함으로써 헝가리는 3등분이 되었다. 이후 오스만 터키는 부다를 중심으로 중부 헝가리를 차지하였고, 동부의 트랜실바니아는 공국의 지위로서 오스만-터키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하였으며, 페르디난트 1세는 헝가리의 북부와 서부를 차지하고 헝가리 왕국을 계승하였다. 페르디난트 1세는 오스만-터키를 몰아내고 헝가리를 재통일시키려는 노력보다는 헝가리를 오스만-터키의 침입에 대한 방어기지로 삼아 자신들의 본거지인 빈과 보헤미아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⁵⁸ 헝가리 왕국은 포조니를 수도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의해 통치되었다.

헝가리의 재통일은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686년 합스부르크는 독일, 폴란드, 베니스 등과 연합하여 오스만-터키를 물리치고 부다를 탈환함으로써 중부 헝가리를 오스만-터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합스부르크 중심의 연합국은 베오그라드 등을 함락하고 오스만-터키와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헝가리의 분열과 오스만-터키의 지배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헝가리 왕국의 왕위는 합스부르크에서 세습하였으며, 헝가리 왕국과 트랜실바니아 공국은 세력이 확대된 합스부르크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다) 헝가리 재통일과 독립운동 (1686~1815)

헝가리는 150년간이나 분단을 겪었고 그 기간중 중부 헝가리는 오스만-터키의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선 중부 헝가리에서 오스만-터키는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었고, 중부와 동부의 헝가리가 정서적으로 헝가리 왕국으로부터 완전히 포기되지 않았으며, 500년

⁵⁸ 이상협, 『헝가리 사』, p. 97.

의 헝가리 역사가 분단 이후에도 동질감을 갖도록 하였다.⁵⁹

헝가리는 통일되었으나 합스부르크 제국은 헝가리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국의 지방으로 간주하였다. 합스부르크의 정책은 자연히 헝가리인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독립전쟁이 라코치 2세의 지도하에 전개되었다. 1707년 헝가리 의회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헝가리 왕 위계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헝가리 독립전쟁은 합스부르크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1711년 전쟁이 종식되었다. 그러나 독립전쟁은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헝가리의 헌법을 인정받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으며 귀족들은 신분을 유지하였다. 또한 독립전쟁 이후, 합스부르크는 헝가리를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버리고 합스부르크 제국의 틀 속에서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였다.⁶⁰ 다만 트랜실바니아는 헝가리 왕국에 귀속시키지 않고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방으로 관리하였다. 헝가리 왕국은 합스부르크의 조치를 대체적으로 환영하였으며, 1723년 헝가리 의회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제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왕국의 국왕을 반드시 겸한다는 규정을 수용하였다.

1526년 헝가리 왕국이 분단된 지 200여년 만에 헝가리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 기간은 헝가리에게는 시련의 시기였다. 분단되기 전 4백만이던 인구가 18세기 초, 오히려 35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외부로부터 대규모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헝가리의 민족적 색채를 약화시키려는 합스부르크의 의도에 의해 1백만명의 독일인이 이주하였고 루마니아인도 대규모로 유입되어 트랜실바니아에서는 루마니아인 수가 헝가리인을 넘어섰다. 18세기말까지 헝가리 전체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여 9백만에 달하였다. 그러나 헝가리 왕국은 타 민족의 대량 유입으로 다민족 국가로 변모하였으며 헝가리 민족은 전체인구의 35~40%에 그쳤다.

⁵⁹ 위의 책, pp. 104-105.

⁶⁰ 위의 책, p. 147.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1740~1748)⁶¹ 시기 프로이센, 스페인, 베니스 왕국과 싸우는 합스부르크 제국을 도울 정도로 친합스부르크화되었던 헝가리 왕국은 1780년 합스부르크의 새 황제 요제프 2세의 즉위후 합스부르크 제국과 갈등을 빚게된다. 요제프 2세는 헝가리 의회에서 헝가리 귀족들이 왕관을 씌어주는 대관식 관행을 거부하고 왕관을 빈으로 가져오게 하였다. 요제프 2세는 헝가리 지방의 자치행정을 폐지하고 합스부르크 제국의 직할 통치를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1784년 헝가리 왕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던 라틴어를 대신하여 독일어를 새로운 공용어로 공표하자,⁶² 이미 민족의식이 싹튼 헝가리인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이를 계기로 헝가리 민족의식이 크게 고취되어 1790년 초등학교에서 헝가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1830년 대학교에 헝가리 어문학과가 개설되고, 1844년 학술논문으로 헝가리어가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헝가리어로 된 연극, 시, 음악 등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라) 개혁 시대와 독립운동 실패 (1815~1867)

나폴레옹 전쟁 (1796~1815)이 러시아, 프로이센, 합스부르크의 승리로 끝나자 위상이 한층 강화된 합스부르크는 헝가리에 대한 개입을 강화시켰다. 합스부르크는 헝가리 의회가 소집되지 않은 채 헝가리에 불리한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사상이 파급된 헝가리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1840년 헝가리 왕국은 봉건적 농노제를 폐지하고 민족적인 자결권 및 트랜실바니아를 헝가리 왕국으로 귀속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1848년 3월 15일 헝가리 혁명이 발발하여 대의민주주의, 실질적인

⁶¹ 1740년 합스부르크의 칼4세가 아들이 없이 사망하고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황제와 헝가리 왕국의 왕위에 오르자, 이에 반발하여 프로이센, 스페인, 베니스 왕국이 연합해 합스부르크를 공격함으로써 왕위 계승전쟁이 발발하였다.

⁶² 당시 라틴어는 이미 죽은 언어이고 17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혼란한 상태였다.

권한을 가진 독자적인 헝가리 정부, 국민의 평등권, 트랜실바니아를 포함하는 민족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헝가리 민족들은 3월 혁명을 크게 환영하였으나,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소수민족들은 헝가리 왕국의 독립에 거부감을 보이며 무력 반혁명을 일으켰다. 1842년 헝가리 왕국내 인구는 1천 4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헝가리 민족이 557만 명이었고, 비 헝가리 민족은 856만 명에 달하였다. 비 헝가리 민족 중 2백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들은 헝가리에 동화되어 민족의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으나 크로아티아인이나 루마니아인들의 경우는 강한 민족의식을 갖고 헝가리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 갈등에 힘입어 합스부르크 제국은 헝가리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1849년 3월 합스부르크 제국은 헝가리, 트랜실바니아, 크로아티아를 제국의 직할지로 삼아 통일 오스트리아 제국을 건설하는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헝가리는 합스부르크 황실의 헝가리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고, 국체를 공화국으로 하는 「독립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합스부르크가 1849년 6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3월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헝가리 독립운동은 실패하였다.

(마)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1867~1919)

헝가리 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합스부르크 제국은 혁명정부의 수상과 혁명군 지휘관들을 처형하는 등 철저한 보복을 하고 헝가리 왕국을 정복지로 통치하였다. 헝가리 왕국내 크로아티아인, 슬로베키아인 등의 거주지 뿐만 아니라 트랜실바니아를 헝가리 왕국과 분리하여 제국의 통치 하에 귀속시켰고, 헝가리 왕국내 지방자치를 전면 폐지하고 헝가리를 5개의 통치지역으로 분할하여 합스부르크 제국의 내무성에서 파견된 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합스부르크 제국의 통치에 대한 헝가리인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1860년 이탈리아의 가리발디와 연합해 합스부르크와 전쟁을

할 태세를 보였다.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해 위상이 훼손된 합스부르크 제국은 헝가리와의 타협을 꾀하였다. 1867년 6월 1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왕국이 탄생하고, 6월 8일 합스부르크 황제 페렌츠 요제프 1세가 헝가리 왕국의 국왕에 즉위하였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왕국은 1군주, 1국가, 2정부의 이중 왕국으로서, 외무와 국방, 재무는 양국의 공동업무로서 각자 부처를 두지 않고, 나머지 업무는 각자 관리하는 체제를 취하였다. 이중 왕국은 유럽에서 숫적으로는 3위가 되었으나, 11개의 큰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사회였다.⁶³

이중 왕국 출범 후, 헝가리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부흥하였지만 정치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이익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하였다. 헝가리인들이 카르파티아 분지에 정착한 지 1,000년이 되는 1,896년을 기념하여 헝가리는 거창한 축제를 거행하며 민족적 자부심을 높였다. 그러나 1890년대부터 본격화된 동화정책으로 소수민족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1905년부터 농민과 노동자의 파업과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였다.

1890년대부터 헝가리는 민족주의의 고양으로 헝가리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1912년 발칸반도에서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 등이 발칸전쟁을 통해 오스만-터키를 패배시킴으로써 민족적 자신감이 고조되었다. 특히, 세르비아인들과 크로아티아 인들은 발칸 지역의 모든 슬라브 인들이 하나로 합친 연합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⁶³ 헝가리 왕국내에서 헝가리 민족의 수는 점차 증가되어 19세기 말에는 과반수에 도달하였다.

나. 실패

(1) 헝가리인 디아스포라의 기원

제1차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 독일에 가담하였다가 패전한 헝가리는 베르사이유 조약의 부속 조약인 1920년 트리아농 조약(Trianon Treaty)에 의해 국토의 70%와 국민의 반 이상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였다.⁶⁴

종전 당시, 1,820만명이었던 헝가리 국민이 76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총 889만 2천명의 헝가리 국민이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4개국으로 편입되었으며, 이 중 헝가리 민족의 수도는 322만 3천명에 이르렀다. 전체 헝가리인의 1/3이 타민족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헝가리 디아스포라는 이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경이 움직임으로써 발생한 특이한 경우이다. 즉 자기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1920년 조약을 통해 하루밤 사이에 소수민족이 된 것이다.

〈표 Ⅲ-6〉 1920년 트리아농 조약에 의해 주변 4국으로 편입된 헝가리 국민과 헝가리 민족 수

	편입 전체 헝가리 국민수	헝가리 민족 수
오스트리아	29만 2천 명	2만 6천 명
체코슬로바키아	350만 명	107만 2천 명
루마니아	350만 명	166만 4천 명
유고슬라비아	160만 명	46만 1천 명
합 계	889만 2천 명	322만 3천 명

출처: 이상협 저, 『헝가리 사』 (서울: 대한 교과서주식회사, 1996), p. 243. 트리아농 조약의 결과, 헝가리는 국민의 89.5%가 헝가리 민족이고 최대 소수민족은 독일계는 6.9%에 불과한 단일민족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주변의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은 여전히 다민족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여기 거주하는 헝가리인들은 소수민족으로서의 동화를 강요받고 민족적 탄압을 받았다.

⁶⁴ 베르사이유의 트리아농 궁에서 1920년 6월 4일 체결되었다.

제1차세계대전 후, 헝가리는 조금씩 경제회복을 이루었으나 실지회복의 목표에 사로잡혀 독일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1939년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고 슬로바키아의 헝가리인 거주지역을 헝가리에 돌려주자 헝가리는 주축국에 적극 협조한다. 1940년 헝가리는 북부 트랜실바니아 지방을 회복한 데 이어서 1941년 4월 독일이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할 때, 역시 다민족 지역인 보이보디나를 합병하고 공식적으로 주축국과 동맹을 맺는다. 1941년 히틀러가 소련에 선전포고를 한 지 4일만에 헝가리도 대소 선전 포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에 빠져든다.

그러나 독일의 패전 가능성이 높아지자 헝가리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주축국의 일원으로서 제2차세계대전 직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944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루마니아에게 트랜실바니아를 빼앗기고, 종전 후 헝가리는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에 의해 다시 국토가 잘려나간다. 히틀러가 선물한 영토를 다시 빼앗겨, 헝가리 영토는 트리아농 조약의 상태로 돌아갔고, 여전히 헝가리인의 1/3은 헝가리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비극이 계속되었다.

(2) 국가별 실태

2005년 현재 유럽에 거주하는 재외 헝가리인은 275만 명으로, 주로 헝가리를 둘러싼 7개국(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에 흩어져 있다. 여기서는 헝가리인이 많이 거주하는 루마니아(150만명), 슬로바키아 (52만명), 세르비아 (30만명)를 중심으로 헝가리 디아스포라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 루마니아

2002년 루마니아 센서스에 의하면 루마니아에는 1,431,807 명의 헝가리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루마니아 인구의 6.6%에

달한다.⁶⁵ 이들은 대부분 트랜실바니아에 있다. 트랜실바니아는 16~17세기 헝가리 분단시기 헝가리 군주가 통치하는 독립국의 위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20년 트리아농 조약에 의해 헝가리에서 분리되었다. 트랜실바니아의 헝가리인들 중 28%가량이 헝가리-루마니아 국경을 따라 거주하나, 반 정도는 헝가리 국경에서 동쪽으로 350km 떨어진 분리된 지역에 거주한다. 이 곳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을 세클러(Szekler) 헝가리인이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헝가리인의 비율은 군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고 85%에 이르며, 루마니아인들은 15%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중부 트랜실바니아와 인종적으로 혼합된 지역에서 거주한다.⁶⁶

트랜실바니아의 헝가리인들은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에서 루마니아인들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규범을 따른다는 것이 어려웠다.

제2차세계대전 후, 헝가리 소수민족 문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52년 헝가리자치지역(Hungarian Autonomous Region)이 설치되면서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루마니아와 헝가리소수민족 간의 문제를 정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 공헌한 정치 제스처에 불과하였다. 이 지역은 헝가리인의 1/4이상에게는 고향도 아니었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 특별한 자치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1956년 헝가리 혁명 이후에는 그나마 주어진 자치권마저도 삭감되었다. 1960년 루마니아 정부는 헝가리 색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이름을 변경하고 조직을 변화시켰다. 순수 루마니아인 거주지역을 추가하고 헝가리인 거주지역을 제외시킴으로써 전체 지역의 루마니아인 비율이 20%에서 35%로 증대된 반면, 헝가리인 비율은 77%에서 62%로 감소하였다. 지역의 명칭도 Mures Autonomous Hungarian Region으로 바뀌어, Mures Region으로 불리게 하였다.⁶⁷

⁶⁵ 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The Situation of the ethnic Hungarians in Romania*, 2005. 4. 25

⁶⁶ *Ibid.*

1965년 차우세스크 집권 이후, 루마니아는 ‘인종적 단일 국가’ 건설을 목표로 루마니아 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헝가리계, 독일계 등 소수민족은 루마니아 민족주의 물결에 쓸려갔다. 차우세스크는 Autonomous Hungarian Region을 철폐하고 트랜실바니아의 헝가리 문화와 유적들을 조직적으로 파괴하였으며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을 폈다. 헝가리 문화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지명도 변경되었다. 1973년 교육법의 제정으로 동화정책이 가속화되었다. 루마니아 학교와 소수민족 학교의 합병이 가속되었고 헝가리어 신문 간행과 헝가리어 책 출간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1985년부터는 헝가리어 TV 방송이 중단되었다.

루마니아는 학교 통폐합과 교육개혁 등은 동화정책이 아니라 행정적·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조화로운 전체(harmonious whole)’로 소수민족을 동화시키려는 차별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소수민족의 헌법적, 정치적, 언어적, 교육적 권한이 축소되었다.

갓가지 규정을 통해 헝가리인들은 트랜실바니아의 옛 도시를 떠나게 되고 루마니아인들의 유입이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루마니아의 경제가 악화되자 헝가리인들의 탈 루마니아 러시가 시작되었다.

차우세스크 정권의 목표가 민족적 동질성과 인종적으로 순수한 루마니아 건설이었지만 소수민족의 탈 루마니아에 대하여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루마니아를 떠나는 허가를 받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절차가 요구되었다. 이민 예정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강등을 감수하여야 했다. 또한 의료보호와 기타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집에서 퇴거당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⁶⁷

⁶⁷ National Minorities under Communist Rule, <<http://www.countrystudies.us/romania/41.htm>> (2005. 4. 24 검색일), p. 1.

⁶⁸ *National Minorities under Communist Rule*, p. 5.

이민은 서방세계에서 부추기는 것이고 ‘두뇌 유출’이라고 비난하면서, 1972년 루마니아는 이민자들에게 루마니아에서 받은 교육비를 국가에 반납할 것을 명분으로 중과세를 하였다. 루마니아에서는 외화 소지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민자에게 미화 2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최혜국 대우의 박탈을 위협하는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등의 압력에 의해 루마니아는 공식적인 세금으로 2만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포기 하였지만 비공식적 뇌물의 형태로 수천달러가 요구되었다.⁶⁹ 불법적으로 이민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차우세스쿠 정권의 이민 방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민 희망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독일계와 유대인들의 이민은 독일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1988년까지 독일계는 약2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유대인 수는 2만 5천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⁷⁰

반면, 트랜실바니아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해온 대다수 헝가리 소수민족은 고향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으며, 헝가리 정부나 루마니아 정부 역시 트랜실바니아 헝가리 소수민족의 감소를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들어서, 특히 1986년 이후 일부 헝가리계 소수민족이 국경을 넘어 헝가리로 도주하는 경우가 증대하였다. 1987년 한해 동안 4만명의 헝가리인들이 국경을 넘어 헝가리로 탈출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백명이 루마니아 국경수비대의 총격에 숨졌다. 마침내 헝가리 정부가 나서서 루마니아의 차별정책에 항의하였다.

⁶⁹ *Ibid.*

⁷⁰ 1967년 서독과 루마니아가 수교할 당시, 약 6만명의 독일계가 이민을 요청하였다. 1978년까지 8만명의 독일계가 서독으로 이주하였고, 나머지 독일계에 대하여 루마니아 정부는 일인당 5천 마르크의 ‘교육비’를 환불하는 조건으로 일년에 11,000~13,000명의 이민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였다. 1982년 환불 교육비가 7,000~8,000 마르크로 증액되었다. 유대인은 1948년부터 1951년까지 117,900명이 이주하였고, 1958년부터 1964년까지 9만명이 추가로 이주하였다. 1966년까지 루마니아에 잔류한 유대인의 수는 43,000명에 불과하였다. National Minorities under Communist Rule, p. 6.

(나) 슬로바키아

2001년 현재 슬로바키아에는 전체인구의 9.7%에 해당하는 520,528명의 헝가리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헝가리와의 좁은 접경지역에 밀집해 살고 있으며 거주 지역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헝가리인 수는 10년전에 비해 6만명 이상 감소한 수이다. 10년 전인 1991년에는 567,296명으로 전체 슬로바키아 인구의 10.7%를 차지하였다. 헝가리인의 감소는 출생을 감소나 이민에 의한 것이 아니다.⁷¹ 헝가리인 감소의 첫째 이유는 동화에 의한 것이다. 70~80년대 슬로바키아어 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문화적 유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거나, 도시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면서 뿌리를 잃어버리고 자신들과 자식들을 슬로바키아인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때문이다. 이들은 헝가리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적개심과 정부의 선전에 의해 정체성을 숨기는 경우이다.

슬로바키아는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건국때 일원으로 포함되었다가,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독립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시, 전체 인구 1300만 명 중 체코 680만 명, 슬로바키아 190만 명으로 65.5%를 차지하였으며 독일 310만 명, 헝가리 74만 명 등 많은 소수 민족이 포함하였다. 1929년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은 중부유럽에서 소수민족에게 가장 많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⁷² 헝가리 소수민족은 고유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평등권과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민족문제가 계급문제에 덮이게 되었고, 공산정권 시절 중앙 권력의 통제 하에서 잠복해 있던 슬로바키아 민족주의와 반 헝가리 정서가 슬로바키아 독립 이후 확산되었다.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동화정책에 따라, 교육의 슬

⁷¹ The Situation of Hungarians in Slovakia, <<http://www.gov.hu/reports/2004/slovakia,2004.htm>> (2005.5.2 검색), p. 5.

⁷² 권재일, 『체코슬로바키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p. 248.

로바키아화가 추진되었고, 헝가리식 명칭의 간판이 모두 제거되었고, 헝가리 소수 민족의 정치·경제적 기회가 제한되었다. 무엇보다, 헝가리 이름을 쓸 수 없으며 헝가리어를 공식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⁷³ 헝가리어로 교육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헝가리 대학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1995년 헝가리와 루마니아간 ‘선린관계와 우호협력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이후, 모국어 사용 문제는 슬로바키아내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1년 양국을 연결하는 다뉴브강의 다리(Maria Valeria 교)는 관계개선의 상징이었다. 2000년 이후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헝가리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동화의 위험성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1년 헝가리의 「인접국 헝가리인에 대한 2001년 법령」(소위 ‘특혜법령’)이 양국간 긴장을 가져왔다. 2002년 슬로바키아의회는 헝가리의 ‘특혜법령’이 유럽의 규범과 일치하지 않고 슬로바키아의 법제정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였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의회에 헝가리 법령을 조사해줄 것과 이를 비난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슬로바키아의 헝가리 소수민족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1995년 조약이 불완전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슬로바키아의 정치체제가 비민주적인 데 기인한다.⁷⁴ Meciar수상이 권력을 집중화시키고, 반대파를 위협하였으며, 권력을 연장하고자, 헌법을 폐지하고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관리되도록 행정구역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1995년 조약은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극단주의에 대한 제어 역할을 하였다. EU와 NATO 통합에 있어

⁷³ 1996년 언어제한법령에 따라 슬로바키아어가 우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http://www.eumap.org/journal/features/2003/october/minmediaslovakia/>> (2005.2.254 검색).

⁷⁴ Hungary's Near Abroad, <<http://www.ndu.edu/inss/strforum/SF-93/forum93.html>>(2005.4.22 검색), p. 3.

서 6조는 “공통의 이익을 확인하고, 관련 문제에 있어서 상호 협조할 것을 동의하였다.” 즉 헝가리가 먼저 NATO에 가입하면 헝가리는 슬로바키아의 가입을 지원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이다. 헝가리 소수민족이 통합에 반대되기 보다는 통합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다) 보이보디나(세르비아)

2002년 센서스에 의하면 세르비아의 헝가리 소수민족 295,375 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세르비아 북부 Vojvodina에 거주하고 있다. Vojvodina 는 세르비아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밀, 보리, 옥수수가 풍부한 넓은 평원으로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의 유입이 있었다. 1953년부터 1971년까지 50만 명이 이주해 왔으며, 지금도 코소보 등지에서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한때, 전체인구의 1/3이었던 헝가리인의 비율이 1/6로 줄어들었다. 헝가리인의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낮은 출산율, 강요된 동화 정책의 지속, 대량 이주, 높은 자살율, 알콜중독, 전염병의 창궐, 높은 이혼율과 낙태율, 타 종족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유고슬라브 센서스 방식 등에 기인한다.⁷⁵

1974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헌법은 보이보디나에게 자치주의 지위를 부여하고⁷⁶ 보이보디나의 헝가리인을 소수민족으로서 인정하였으며, 집단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 1974년 헌법에 근거하여 헝가리인들은 연방정부와 자치의회와 지역에서 각각 인구에 비례한 대표권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25만명의 세르비아 난민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로부터 보이보디나에 도착하면서부터 인종문제가 발생하였다. 무장한 세르비아 난민들은 지역 공동체간의 평화로운 해결을 믿지 않았다. 이들은 헝가리 공동묘지를 훼손하고, 헝가리 학교나 교회

⁷⁵ The Situation of Hungarians in Voivodina, <http://www.gov.hu/reports/2004/voivodina_2004.htm>(2005.5.2 검색), p. 8.

⁷⁶ 보이보디나는 이미 15년간 공화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의 벽에 낙서를 하고, 개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하고, 헝가리인들이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헝가리인이 다수를 이루는 지역에서 난민들에게 땅이 무료로 제공됨으로써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의 영구 거주를 고무시켰다. 세르비아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코소보로부터 1만~1만 5천명의 새로운 난민이 보이보디나에 유입되었다.

1990년 세르비아 공화국 헌법은 소수민족을 별개의 공동체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1991년 보이보디나 자치구의 헌법은 소수민족의 권리를 개별적 인권과 시민적 권리로서 다루기로 하였다. 1992년 신유고연방의 헌법 역시 소수민족의 권리를 개별적 권리로 다루었다. 요컨대, 헝가리인들은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자치권과 집회의 자유를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의 일부로서 부여받았지만, 공식적인 집단권리는 상실하였다. 보이보디나는 독립적인 재정권과 입법권을 상실함으로써 명목적으로는 독립구였지만 실제로는 지리적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고도의 중앙집권화된 공화국 정부가 모든 주요 정책결정권을 보유하고, 집행권을 지사(governors)가 책임지는 새로운 행정구역에 부여하였다. 실제로 모든 권력은 공화국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

1990년에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실행되던 ‘소수민족 쿼타’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되었다. 이 밖에 헝가리인에게 불리한 규정들이 채택되었다. 예컨대 헝가리인 거주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분리하여 인위적으로 세르비아인이 우위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헝가리 문화중심을 파괴시키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에서 헝가리어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각급 학교에서 헝가리어 교육도 위축시켰다. 학교 교장도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임명하였다.⁷⁷

유고슬라비아는 보이보디나 헝가리인들이 민족에 근거한 수직적 조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고 헝가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⁷⁷ The Situation of Hungarians in Voivodina, p. 13.

이 밖에 교회에 압력을 가하고 종교 교육을 철저히 금하였다.

유고 당국은 헝가리 민족주의를 철저히 방해하였다. 유고는 보이보디나에 헝가리로부터 독립적인 헝가리 민족 정체성을 만들어 부다페스트에 저항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보이보디나 대학교에서 이질적인 정신을 갖춘 지식인과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하였다.

2003년 후반부부터 반 소수민족, 반 헝가리 행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지만 헝가리인들은 보이보디나를 떠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세르비아의 헝가리 소수민족은 그동안 헝가리 입국 비자면제를 받아, 헝가리에서 일을 하거나 무역을 하는 혜택을 누리왔으나, 헝가리의 EU가입으로 Schengen 체제의 일부로서 비자가 요구되게 되었다.⁷⁸ DAVH 지도부는 자신들이 헝가리로부터 유리될 것을 걱정하였다.

따라서 2004년 헝가리가 EU 회원국이 되기 전 이중 국적을 허용받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EU 시민으로서 헝가리 이외 어느 곳에서든 이주하고 일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세르비아 당국은 북부 보이보디나가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를 지지하였으나, 헝가리 당국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30만 명에 대한 국적 부여는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인프라 구축 및 운용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헝가리는 소련의 점령하에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고 루미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 하에서 트랜실바니아의 헝가리 소수민족 박해 등 인접국 내 헝가리 소수 민족문제가 헝가리 외교 현안으로 대두되었지만, 사회주의 하에서 계급문제에 가려 민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민족 정체성은 계급정체성에 종속되는 것이고, 계급의식이 생기면 민족주

⁷⁸ Serbia's Hungarian Minority Peeks through Europe's Back Door, <<http://www.eubusiness.com/afp/030907035258.b68583zj/>> (2005.4.22 검색), p. 1.

의는 사라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1989년 헝가리의 공산정권의 붕괴는 재외동포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인접국 거주 헝가리 혈통자의 권익보호’가 헝가리 정부의 대외정책의 3대 기조 중 하나일 만큼 이들에 대하여 관심이 높다.⁷⁹ 헝가리의 해외민족정책은 재외동포들이 헝가리의 문화유산과 전통에 크게 기여하고 헝가리의 지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풍요롭게 하며, 헝가리와의 관계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⁰

헝가리 동포정책 기조는 헌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헌법 6조는 “헝가리는 외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운명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헝가리와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헝가리의 민족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자로서 헝가리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인접국(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이다.

(가) 인접국과의 양자 조약

헝가리는 인접국내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국들과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가장 성공적인 조약이 루마니아와 1996년 체결한 ‘기본조약’이다.

1991년부터 루마니아와 헝가리는 루마니아내 헝가리 소수민족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1996년 9월 16일 헝가리는 루마니아와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동 조약에서 헝가리는 루마니아 영토내 헝가리인의 자치권 주장을 포기하고, 루마니아는 자국내의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를 인종적 기준에 근거한 ‘집단적’ 권리가 아닌 개인적 권리 차원에서 존중하도록 하였다.⁸¹ 상호 양보가 가능한 것은 양국이 NATO 가

⁷⁹ 1990년대 국민여론에 바탕을 두고 정립된 헝가리 대외외정책의 3대기준은 이밖에 ‘유럽통합’과 ‘인접국과의 선린관계’이다.

⁸⁰ 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Hungary's Policy regarding Hungarians Aboard* (2005.4.25), p. 1.

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책임은 인권과 소수민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제적이며 유럽적인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강화되었다. 헝가리는 가능한 많은 인접국들이 유럽연합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였다.⁸²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 소수민족은 유럽통합을 도모하고 민주적 가치와 지역의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해외 헝가리인들의 운명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두가지 목표로 전환되었다. 첫째 목표는 인접국의 헝가리민족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둘째 목표는 거주국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이들의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02년 「이해, 협력과 선린우호에 관한 헝가리-루마니아 조약(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Hungary and Romania on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Good Neighborhood)」과 「헝가리-루마니아 전략적 파트너십과 21세 유럽을 위한 협력(Hungarian-Romanian Strategic Partnership and Cooperation for Europe in the XXI Century)」 들도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다.

EU와 NATO의 압력으로 1995년 3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선린관계와 우호협력’에 관한 양자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과 소수민족 권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1996년 3월 슬로바키아는 동조약을 인준하면서, 헝가리 소수민족에게 ‘집단적(collective)’ 자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⁸³ 헝가리 정부는 슬로바키아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6년 헝가리 당국이 슬로바키아의 헝가리 소수민족 지도자와 ‘유

⁸¹ Hungary's 'Near Abroad,' p. 3.

⁸² Hungary's Policy regarding Hungarians Abroad, p. 1.

⁸³ Hungary's 'Near Abroad,' p. 3.

립적 실제와 일치하는' 자치를 요구하는 코뮌িকে를 발표하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슬로바키아 당국은 코뮌িকে가 1995년 양국간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며, 슬로바키아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나) 국내에서의 법적 정비(Statuslaw)

2003년 6월 23일 개정된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에 대한 2001년 법안 LXII(Act on Hungarians Living in Neighboring Counties)」은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한 헌법상의 추상적인 의무를 구체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헝가리 행정부처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atuslaw라 불리는 동 법안은 인접국 헝가리인이 헝가리 혹은 거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 법안 1장 2절 1항에 따르면, “헝가리 공화국은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고 헝가리인들이나 단체에 혜택이나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인접국 헝가리인은 문화, 과학, 교육, 고용 등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혜택과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인접국 헝가리인들이 헝가리의 공공 문화기관과 서비스, 문화재와 역사적 기념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가 보장한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헝가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인접국 헝가리인들이 헝가리내에서 여행하는 데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2등급 기차가 무료로 제공되고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제한 무료 여행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년에 4회까지 90퍼센트의 할인요금 혜택이 주어진다.

헝가리내의 대학교육, 박사학위과정 등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헝가리내의 교육을 위하여 온 인접국 헝가리인들에게는

체류비, 교통비 등을 정산해준다.

인접국 거주 헝가리인들이 거주국에서 헝가리어로 교육을 받거나 헝가리 문화를 주제로 한 과목을 공부할 경우 책과 교재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헝가리의 정체성과 모국어, 헝가리 문화를 보존한 데 기여하는 인접국 내의 기관에게는 보조금이 제공된다.

인접국 헝가리인들은 각종 혜택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헝가리민족카드(Ethnic Hungarian Card)」나 『헝가리민족의 가족카드(Family of ethnic Hungarian card)』와 같은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헝가리민족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헝가리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거주국에서 헝가리민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카드는 18세에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18세부터 60세까지 5년간 유효하며, 60세 이상이면 무한정 유효하다.

동 법안은 인접국 헝가리인들의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이 거주국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접국 헝가리인들이 헝가리로 이주할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실제로 동 법안은 인접국의 헝가리인이 헝가리로 이주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았으며, 「헝가리민족카드」도 비자나 여권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못하였다. 2005년 4월까지 루마니아에서 「헝가리민족카드」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루마니아 거주 헝가리인의 1/3인 50만을 넘어섰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 법안의 통과 이전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25%가 헝가리에 재이주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동 법안이 거주국내의 헝가리 정체성을 보존하고 증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헝가리로 재이주를 고려하는 수는 반으로 줄었다.⁸⁴

(다) 거주국에서 헝가리소수민족의 정치 및 정부참여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의 헝가리 소수민족 정당들은 연립정부에

⁸⁴ Hungary's Policy regarding Hungarians Aboard, p. 3.

참여함으로써 정국안정에 기여하였다. 1989년 차우세스크정권 붕괴 후,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루마니아 헝가리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for Hungarians in Romania, DAHR)이 결성되었다.

DAHR의 기본 정신은 보편적 인권, 개인적·집단적 소수민족의 권리 등에 대한 가치, 의회민주주의와 기회균등에 입각한 법치주의의 가치이다. DAHR은 지방 정부, 문화적·영토적 자치, 자결권 등의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DAHR은 1990년부터 루마니아 선거에 참여하여, 지방정부, 의회, 중앙정부에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1996년 루마니아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 결과 DAHR 출신 두 명이 각료직을 맡게 되었다.⁸⁵ 2004년 대통령선거(5.1%)와 의회선거(하원 6.23%, 상원 6.17%)에서 DAHR은 모두 4위에 드는 결과를 이루었다. DAHR은 집권 사회민주당과 연정에 참여하여, 교육, 문화, 유럽 통합 담당 부총리를 비롯해, 통신 및 정보 담당 장관 등의 각료직과 몇 개의 중앙기관장직을 차지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 헝가리인들은 정치적 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 몇 개의 작은 정당들이 모여 1998년 헝가리연합정당 Hungarian Coalition Party(MKP)로 발전하였다. 헝가리 정당들 중 MKP만이 2002년 의회선거에 참여하였다.

1994년 슬로바키아 의회 선거에서 150석 중 헝가리 소수민족이 15석을 차지하였다.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지만, 헝가리 소수민족이 1998년 선거에서 영향력을 과시한 이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헝가리 소수민족은 이념이나 정책 보다는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투표에 임하는 강한 응집력을 보여 준 결과, 슬로바키아 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SMK가 인권, 소수민족,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부총리직을 맡았다.

⁸⁵ Hungarian Minority in Romania, <<http://www.unpo.org/news-detail.php?arg=24&par=47>> (2005.4.22 검색), p. 3.

보이보디나의 헝가리 소수민족도 1989년 12월 18일 「보이보디나 헝가리 민주동맹 (VMDK, Deomocratic Community of Vojvodina Hungarians)」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다. VMDK는 이후 여러 개의 정당으로 발전하였고, 연방의회, 공화국의회 및 자치의회에 대표를 선출시켰다.

(라) 인접국 헝가리소수민족에 대한 경제·교육·문화 지원

헝가리 정체성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헝가리어로 교육을 받는 것이었으며, 헝가리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였다. 1990년 헝가리어로 교육하는 독립적인 증등교육기관이 전무하였으나 2004년에는 58개 학교가 헝가리어로만 교육하였으며, 헝가리어과가 있는 교육기관도 78개에 달하였다. 2003년 186,218명의 학생들이 헝가리어 유치원과 공립학교에 등록하였다.⁸⁶ 루마니아어 학교에 다니는 7천여명의 헝가리 학생들도 원하면 헝가리어와 헝가리 문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2만 5천명 이상의 헝가리 학생들이 대학교육 이상의 과정에 등록했다.

2001년 Sapientia-Hungarian Uninversily of Transylvania가 Csikszereda 캠퍼스에 설립되어, 사회학(농촌개발), 농업과 식량 경제, 회계와 IT, 루마니아어와 문학 등 4분야로 시작하였다. 2004년 Csikszereda에 1,036명, Marosvasarhely에 784명, Kolozsvar 87명이 등록하였다. 대학생들이 헝가리어로 대학교육을 받기위하여 헝가리에 유학을 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들은 돌아가지 않고 헝가리에 정착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슬로바키아에서는 1992년 코마롬(Komarom)이라는 자치정부가 헝가리의 많은 대학의 분교 역할을 하는 시립대학을 개설하였다.

보이보디나에 헝가리정부는 5억 헝가리화폐 기금을 조성하여, 헝

⁸⁶ The Situation of Hungarians in Romania, <<http://www.htm.hgov.hu/reports2004/romania2004.htm>>(2005.5.2 검색), p. 21.

가리 소수민족의 생활여건 향상을 기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호텔, 문화시설, 교회 등에 투자되었고, 헝가리와 세르비아간 사업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마) 재외헝가리동포처

재외헝가리동포처(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GOHMA)는 1992년 조직되었다.⁸⁷ 처장은 외교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총리가 임명한다. 재외헝가리동포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해외동포에 관계되는 정부부처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헝가리 소수민족과 관련된 정부의 결정을 준비하고, 헝가리 소수민족 정책을 구성하고, 이 개념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일상적인 업무가 해외 헝가리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부처들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두고 있으며, 해외헝가리동포처가 이들 부처의 업무와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 밖에 해외 헝가리 소수민족의 각종 조직, 교회 등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해외 헝가리 소수민족과 관계있는 헝가리내의 NGO들과의 유대를 도모한다. 해외 헝가리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한다.

재외헝가리동포처는 외교부장관의 감독하에 있으며, 85명의 직원이 5개의 지역과(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와 5개의 기능과(전략과 평가, 언론과 기록, 법·행정·인도적 정책, 전문적 협력과 지원 조직, 재무)에 나누어져 근무한다. 세 명의 비서는 각각 처장, 부처장, 헝가리상설회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⁸⁷ 「재외헝가리동포처」는 「소수민족처 (Office for the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와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는 헝가리에 거주하는 13개의 공식적인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 헝가리 민족공동체에서 주는 시사점

헝가리 소수민족은 1919년 트리아농 조약에 의해서 국경이 이동함으로써 하루 아침에 타국민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의든 타의든 사람이 이동한 한민족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헝가리 소수민족은 자신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리기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소수민족과 한민족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양국은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었다.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쌓여 있듯이, 헝가리는 중세 합스부르크와 비잔틴 제국에 둘러쌓여 있었으며, 이후 오스만터키의 위협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헝가리 역사는 주변에 많은 민족이 얽혀 살고 많은 외침을 겪으면서 민족의 존립을 보존하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이 지역에서는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간의 마찰이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소수민족들의 자치권 및 독자적 권한이 무시되었으며, 냉전기 소련의 통제와 동질적 이념 하에서 소수민족의 권리는 종종 무시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각국에서 민족분규가 발생하면서 헝가리 소수민족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동북아 한민족 역시 냉전기 일본과는 민족갈등을 봉합하였으며, 중국과는 철저한 단절로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과 같이 냉전질서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냉전이 해체되면서, 한민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헝가리와 한국의 해외소수민족 역사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민족문화공동체의 형성 노력에 있어서 헝가리로부터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본국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헝가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정부는 한민족 정책을 주요한 외교정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분명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헝가리는 인접국의 헝가리민족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들이 거주국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수민족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둘째, 동북아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는 문화, 교육을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헝가리정부는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의 문화프로그램과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헝가리소수민족은 거주국내에서 헝가리어로 교육을 받거나 헝가리문화를 주제로 한 과목을 공부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어 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의 수가 급증하였다. 실례로, 2004년 중등학교가 58개에 달하고 20십만 명의 학생이 인접국에서 헝가리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1년에는 루마니아의 트랜실바니아 지역에 헝가리 민족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슬로바키아에는 2004년 역시 헝가리 민족대학이 설립되었다. 또한 헝가리 소수민족이 헝가리내에서 교육을 받거나 헝가리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적극 장려되고 있다. 이들은 헝가리 여행시 2등급 기차 무료의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을 경우 체류비,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접국에서 헝가리 소수민족의 문화보존이 본국에서보다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접국의 헝가리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은 인접국 뿐만 아니라 헝가리 문화 자체의 보존을 위해서도 대단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한민족의 경우에도 음식, 의상, 전통혼례 등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한민족문화가 국내보다 더 잘 보존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 현지화가 강화되고 현지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등 한민족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정부의 동화정책으로 러시아 한인들은 정체성이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도 정체성이 약화되면서 민족학교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는 중국에서

도 한민족 사회가 탈농촌화와 도시로의 이동으로 최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셋째,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법적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소수민족에 대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법(statuslaw)을 제정하여 각종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 법안은 헝가리 소수민족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인종적 기준이 아니라 헝가리어와 헝가리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주국내에서 헝가리민족의 경제, 문화,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헝가리로 이주하고자 하는 헝가리 소수민족의 수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헝가리 정부가 인접국 헝가리소수민족에게 제공하는 「헝가리민족카드」나 「헝가리민족의 가족카드」는 헝가리소수민족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으나, 비자나 여권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헝가리로의 이주권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동북아 한민족의 경우, 러시아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동포의 경우 취업을 위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거주 한민족에게는 한국에 오지 않고 중국에서 머물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변국의 한민족문화훼손과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냉전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부는 ‘인종적 단일국가’를 표방하며, 자국내 헝가리문화를 말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적 효율성을 명분으로 헝가리 민족학교를 통폐합하고, 소수민족의 각종 권한을 축소시켰으며 헝가리민족이 떠난 집단민족 거주지에 루마니아인들을 이주시켜 정체성을 약화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냉전하에서 헝가리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헝가리문화가 상당히 破壞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북아 국가 중 다행히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은 국가간 관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거주국에서의 정체성 확보는 국가간 외교적 노력 못지 않게 거주국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헝가리 소수민족이 인접국에서 권리가 향상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거주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신장이 크게 기여하였다.

루마니아에서는 1989년 차우세스크정권 붕괴 후,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루마니아 헝가리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for Hungarians in Romania, DAHR)이 결성되었다. DAHR은 지방 정부, 문화적·영토적 자치, 자결권 등의 성취를 목표로 1990년부터 루마니아 선거에 참여하여, 지방정부, 의회, 중앙정부에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DAHR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 2004년 대통령선거(5.1%)와 의회선거(하원 6.23%, 상원 6.17%)에서 모두 4위에 드는 결과를 이루었다. DAHR은 집권 사회민주당과 연정에 참여하여, 교육, 문화, 유럽통합 담당 부총리를 비롯해, 통신 및 정보 담당 장관 등의 각료직과 몇 개의 중앙기관장직을 차지하였다. DAHR은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소수민족이 20%가 넘는 곳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데, 이는 320개 도시 혹은 행정구역에서 110만명의 헝가리인들이 헝가리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그 밖에 1,077개의 지방이름이 헝가리어로도 표기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 헝가리인들은 정치적 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된 후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었지만, 헝가리 소수민족이 1998년 선거에서 영향력을 과시한 이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헝가리 소수민족은 이념이나 정책 보다는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투표에 임하는 강한 응집력을 보여 준 결과, 슬로바키아 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선거에서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치조직인 SMK가 연립정부에 참가하여 인권, 소수민족,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부총리직을 비롯하여, 농업, 환경, 건설, 보건 등 4개부처의 장관을 맡는 정치적 성과를 이루었다. SMK의 정치적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헝가리소수민족의 권익신장으로 이어졌다.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가 향상되고 민족대학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한민족은 헝가리 소수민족과 달리 거주국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지 않으나, 중앙정치가 아니더라도 각급 정치단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동북아 각국에서 한민족의 권익확보와 정체성 신장은 거주국과 한국간 사회경제적 발전과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의 헝가리 소수민족은 루마니아·헝가리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유럽통합을 위한 정치적 힘의 역할을 하였다. 헝가리와 인접국간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 헝가리 소수민족은 유럽통합에 방해가 아니라 가교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슬로바키아 보다는 민주적인 루마니아에서 양자 조약은 효과를 보았다.

헝가리와 인접국들이 유럽연합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인접국 헝가리인들이었다. EU가입을 앞둔 슬로바키아 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를 확대함으로써, NATO와 EU의 확대가 국경분쟁과 소수민족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유럽의 통합은 여러 국가에 흩어져있는 헝가리 소수민족에게 장벽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냉전 종식 후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DHAR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2003년 루마니아의 개정헌법에 지역공동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은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곱째, 동북아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해외 헝가리 소수민족은 각국의 헝가리인들의 협의체로서 「헝가리위원회(Hungarian

Standing Committee)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헝가리민족의 발전을 목표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동 단체는 헝가리 정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1996년 부다페스트 첫 회의에서 총리가 참석한 이래 헝가리 고위관리가 참여하고 있다.

IV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 현황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2004)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의 한민족 즉, 재일한인사회, 조선족 사회, 고려인사회 등의 민족문화생활 및 인프라 현황에 관해 언어능력 및 민족정체성, 전통문화의 계승, 한국문화 접촉 및 교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예컨대, 한민족 일상적 생활에 어느 정도 전통 한민족문화가 스며들어 있고, 어느 정도 한국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어 교육 상태 및 인프라 현황, 한국방송·TV 등의 청취 현황, 국제전화·인터넷 등 한국과의 문화교류 현황 등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다.

1. 재일한인사회

재일한인사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산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몰락한 농민들의 일본사회로의 유입과 더불어 재일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대체로 재일 한인들은 하층 노동계층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였으며, 대도시 주변의 집단부락을 형성하면서 생활하였다.

1945년 종전시 재일한인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대체로 200~24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고, 약 60만 정도의 한인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재일한인들은 회복된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좌우 세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연맹」이 좌파세력들의 세력 확산을 위한 공작으로 인하여 좌경화로 기울게 되자, 이에 반발한 우파 민족주의 재일한인들은 「조선건국축진청년연맹」을 설립하였다. 「재일조선인연맹」과 「조선건국축진청년연맹」은 연합군 점령사령부의 지원아래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전개하면서, 체제이념, 신탁통치안에 대한 입장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즉 한반도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적 영향

으로 재일한인사회는 분열되고 대립하였다.

전후 재일한인사회를 살펴보면,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 한인들은 「조선건국축진청년연맹」(건청) 「신조선건설동맹」(건동) → 「재일본대 한민국거류민단」(민단)을 중심으로 결집·발전하였고, 북한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재일조선인연맹」(조련) →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중심으로 결집·발전하였다.

현재 재일 한인사회는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생활보수화 성향,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본 국내정치공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의 붕괴, 재일한인사회의 세대교체에 따른 3·4세대의 민족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민단과 조총련의 조직 침화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민단과 조총련의 쇠퇴와 더불어 재일한인 3·4세대의 민족의식 약화는 한인공동체의 장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일본사회에서 불고 있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3·4세대의 한국 및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 언어능력 및 민족정체성

재일한인 1세대들은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늘 품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강한 민족의식을 지녔지만, 2·3·4세 한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또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들은 이제 겨우 7%정도에 불과하고, 2세에 이어 3·4세가 재일한인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민단계 3·4세 한인들은 조총련계 3·4세 한인들보다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일본사회에 대체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민단계 청장년 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일상적 생활에서도 본명이 아닌 통명인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족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 조총련계 한인들도 조총련계 유치원·초·중·고 과정 및 대학과정에서 한국어와 민족문화에 관한 교육을 받으므로, 민단계 한인들에 비해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족의식이 훨씬 강하며 따라서 일본사회에 동화되는 것에 저항하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북한과 일본의 격심한 삶의 수준 격차, 일본인 납치 등과 관련 일본 국내여론의 악화 등으로 민족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재일 한인 청년세대는 적지 않은 숫자가 민족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재일한인 3·4세대의 민족의식 약화는 1990년대 중반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는 1993년 재일 한국인 청년들의 의식 및 가치의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994년 「제3차 재일 한국인 청년의식조사 중간보고서」⁸⁸를 발표한 뒤, 최종보고서를 1997년 「재일한국인 청년의 생활과 의식」⁸⁹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는데, ‘부정적 자기이미지 vs. 민족적 긍지’, ‘귀화 희망 vs. 국적 보유’, ‘통명 vs. 본명’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재일 청년들의 민족의식 상태를 분석하였다. ‘부정적 자기이미지 vs. 민족적 긍지’의 조사에서는 조사자의 약 63.7%가 일본인에 의한 차별과 그에 따른 민족적 열등감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 희망 vs. 국적 보유’의 조사에서는 ‘꼭 귀화하고 싶다’(12.0%)와 ‘가능한 한 귀화하고자 한다’(15.0%)를 합쳐서 귀화 희망자는 27.0%이고, 한국적 보유에 민족적 의미를 느끼는 자가 ‘그다지 귀화하고 싶지 않다’(15.9%)와 ‘절대로 귀화하고 싶지 않다’(27.7%)를 합쳐서 43.6%이며, 국적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느 쪽이든 좋다’는 자가 29.4%이다. ‘통명 vs. 본명’의 조사에서는 한국식 성명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통명을 사용하는 자가 약 80%정

⁸⁸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 『第3次 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查中間報告書』, (東京: 在日韓國人青年會 中央本部, 1994) 참조.

⁸⁹ 福岡安則·金明秀,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참조.

도이고, 본명을 사용하는 자는 불과 12%정도에 지나지 않았다.⁹⁰

이처럼, 재일한인 젊은 세대는 ‘조국과의 정신적 거리의 확대’, ‘민족적 열등감’, ‘민족일원으로서의 자기부정’ 등으로 인하여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사회에서 선풍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3·4세들의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을 주도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TV 드라마 ‘겨울연가’는 몇 번씩 방영되며 일본인들의 한국어 공부 붐을 일으키며 마침내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한국어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재일한인들도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긍지와 함께 한국어 공부에 열의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정착한 교민들 소위 ‘뉴 콤머(New Commer)들도 한국에서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도일하였으므로, 한국과의 경제적·문화적 연계아래 재일한인사회의 민족정체성 확립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전통 민족문화의 계승

재일한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3·4세들이 일본사회에 동화된 상태에서 일상적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2~3시간이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재일한인들은 그다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 한국문화의 일본내 정착, 한국전통문화단체 및 인기 전통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일본 공연 등 한일 문화 교류의 활성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전통 민족문화를 늘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⁹⁰ 재일한인들은 일상적으로 본명(한국명)이 아닌 통명(일본명)을 사용하고 있다. 어릴 때는 일본인들 앞에서 본명을 사용하더라도, 중학·고교단계에 들어가면 일본인들 앞에서 거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음식은 불고기, 김치 등으로 시작하여 이제 일본 국내에서 인기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재일한인들과 뉴 콤머들은 한국식당 타운의 형성과 함께 비빔밥·냉면·곰탕 등 다양한 종류의 ‘한국 먹거리 문화’를 일본사회에 정착시키고 있다. 한국식당·반찬가게 밀집지역은 ‘먹거리’를 매개로 한국인들뿐 아니라 일본 들까지 모이도록 하면서 치마·저고리 등 한복가게·민예품 가게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가게들이 자리 잡도록 하여 소위 ‘장터’를 형성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느끼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문화와 더불어 고전무용, 사물놀이, 창·판소리 등 전통예술관련 명인이나 단체들이 일본 공연을 통하여 한인들이 전통민족문화의 가치에 대해 새삼 인식케 하는데 기여하였고, 따라서 재일한인사회에서도 고전무용단, 사물놀이패 등을 조직하여 민족행사 때마다 공연하고 있다.

또, 재일한인들은 추석이나 설 등 명절 때 한국을 방문하여 고향을 찾아 성묘를 하는 등 조상일 모시는 제례문화에서도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문화원, 민단 중앙본부를 비롯한 각 지역본부, 민단체 민족학교 등은 재일한인사회의 전통 민족문화 계승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조총련은 조총련계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전통 민족문화 중시 교육을 통하여 한인들의 전통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⁹¹ 요컨대, 재일한인 3·4세대들은 현대 일본사회에 동화된 일상생활을 보내면서도, 전통 식문화의 일본내 정착, 한일간의 활발한 문화교류, 2~3시간이내의 한·일 지리적 관계 및 잦은 모국 방문에 따른 한국의 문화적 영향 등으로 인하여 그다지 거부감 없이 전통 민족문화를 지켜가고 있다.

⁹¹ 조총련계 학교의 여학생들은 개량 치마·저고리를 교복으로 착용하고 있다.

다. 한국문화 접촉 및 교류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경제교류의 양과 질을 확대시키면서 상호의존도를 높여 왔는데, 이와 더불어 한일 양국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전개되었고,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의 창·판소리, 사물놀이 등 전통 문화 명인 및 단체, 인기 대중 가수 등 연예인들의 공연이 이루어져 왔고, 나아가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한국의 영화·TV드라마 등 대중문화가 일본으로 급속하게 들어갔다.

중국·동남아에서 일어났던 한류가 마침내 일본에도 들어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겨울연가’, ‘가을동화’, ‘아름다운 날들’ 등 TV드라마 등은 일본인들의 메말라가던 정서를 순화시키면서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 드라마의 주연 연기자들은 중장년 일본 여성들의 우상이 되어 한류 스타의 일본행 러시를 이루게 하였고, 일본 주요 도시의 한국계 가게 밀집지역의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호경기를 누리게 하였다. 즉, 한국음식, 한국노래, 한국 드라마·영화 비디오 및 DVD, 한국의 드라마·영화 촬영지 관광 등은 상호 복합적인 문화상품이 되어 ‘한국 붐’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붐’의 영향으로 일본 각 TV에서는 다양한 한국드라마를 방영하고 있고, ‘대여 비디오’ 가게에는 ‘한국 영화 및 드라마’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일본 대도시에는 한국관련 케이블 TV방송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즉, 재일한인들은 일본내에서 한국문화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한류 스타 우상화 및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호감도는 한·일문화교류를 한층 활성화시키면서 재일한인들의 문화적 긍지를 높이고 있다.

2. 조선족 사회

조선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56개 민족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다민족 통일국가”론에 입각하여 56개의 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특히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 수교한 이후이다.⁹² 중국 조선족은 역사, 민족, 문화 등의 제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⁹³

첫째, 조선족은 조선민족(한민족)의 고유한 민족전통과 기본특성을 소유하면서 중화민족의 민족전통과 특성과 융합되어 있는 중국색채를 띤 특수한 조선민족 집단이다. 둘째, 조선족은 중국국적을 소유한 조선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헌법의 인정을 받는 중국 소수민족의 한 구성원이다. 셋째, 조선족은 중국에 생활터전을 두고 오랜 기간동안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중국의 혁명과 건설에 기여했으며 중국에 그 발전기반을 두고 있다. 넷째, 조선족은 사회의 발전과 세대교체에 따라 점차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민족문화와 심리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 언어능력 및 민족정체성

중국 조선족은 이중 민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민족으로서의 속성과 중화민족으로서의 속성이다. 이 두 가지 속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 내에 있으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⁹² 최우길, “중국 조선족, 그리고 우리의 정책,” 『정세와 정책』 (2000).

⁹³ 김 철, “새 세대 조선족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평화문제연구소·한스 자이델재단 주최 2004 재외동포 초청 통일문제 세미나 발표논문, 2004. 5. 24-25), p. 2.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교육체제의 역할이다. 중국의 조선족 동포사회는 모국어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일찍이 갖추었다. 중국에 사회주의체제가 들어선 이후 연변의 조선족 교육은 소학교 의무교육 도입(1952), 초·중 교육을 기본교육으로 보급(1958), 청장년들의 문맹 퇴치(1958), 민족대학 건립(1959), 농민대학 건립(1958) 등으로 소수 민족 중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었다.⁹⁴

문화혁명 시기 다른 소수민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족학교가 폐쇄되고 한글교육이 폐기되기도 하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1978년 중공당 11기 3중 전원회의 이후 소수민족 우대정책이 회복되고, 1994년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조선족 교육조례를 반포함으로써 비교적 수준 높은 민족교육체제를 갖추었다.⁹⁵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가 중국 내 타 민족에 비하여 그 우수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조선족은 과거처럼 문화정도가 높다거나 민족자질이 높다고 자부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과거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국 30개 자치주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순위가 점차 하강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선족 사회 내에서는 교육의 피폐화로 문맹자가 발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⁹⁶

조선족 사회의 교육의 쇠퇴 현상은 도시 이동과 집거지 붕괴 현상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특히 농촌 인구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동포들이 산업화, 근대화의 혜택을 찾기 위해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서 농촌의 조선족 학교 운영의 문제를 심화시켰다. 왜냐하면 농촌 학생 지원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로 진출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고향 친척들에게 의탁하여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습과 생활 단속이 결핍되고, 도시

⁹⁴ 설용수, 『재중동포 조선족 이야기』 (서울: 미래문화사, 2004), p. 189.

⁹⁵ 위의 책, p. 190.

⁹⁶ 연변대학 민족연구소 박창욱 교수 현지인터뷰, 2004. 6. 14.

거주지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되고 민족 언어와 민족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조선족은 해외로 진출하거나 중국 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내 타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족들은 청도, 선양 등지에서 새로운 집거지(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족의 집단적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자치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예컨대 내몽고 자치주의 몽고인들의 비율은 25% 정도뿐인 반면, 현재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비율은 38% 정도라는 것이다.⁹⁷

이에 농촌지역의 학령기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역사 및 문화보다는 중국어와 중국역사를 공부해야 대학입시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한민족들이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취학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의 경우 흑룡강성 소재 조선족 중학교와 소학교 학생 81,072명 중 한족학교 취학자가 29,925명으로 36.91%에 달하였다.⁹⁸

또한 민족교육이란 교육체계의 문제는 교사의 질적 저하, 경제적 문제로 선생들이 한국으로 이탈하거나 대도시로 진출하는 등 교육현장을 떠남으로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식교육을 받은 교사가 부족하게 되자 농촌에서는 고졸출신, 중졸출신을 대리교사로 활용하게 되며, 따라서 학교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중점학교는 입시교육을 위주로 하다보니 인성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한다.⁹⁹

이러한 민족교육의 침체 현상은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 동포신문인 흑룡강신문이 2005년 1월 25일 발표한 중국 조선족 과학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¹⁰⁰ 조선족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⁹⁷ 김영만 전 연변자치주 상무위부주석 현지 인터뷰, 2004. 6. 15.

⁹⁸ 정신철, 『중국조선족』, p. 110.

⁹⁹ 박민자 연변가정문제연구소장 현지인터뷰, 2004. 6. 15.

¹⁰⁰ 조사 대상은 2005년 1월 15-16일 하얼빈(哈爾濱)공업대학에서 열린 중국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제5기 2차 상무이사회에 참가한 30여 명의 유명 과학자들이다. 그들은 베이징(北京), 선양(瀋陽), 창춘(長春), 연지(延吉),

민족교육(55%)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제발전 미비, 농촌총각 결혼난, 고령화, 황폐화 등 조선족 농촌문제와 민족 전통예절교육, 민족문화와 언어소실 문제 등을 지적했다.¹⁰¹ 그리고 조선족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인재양성(43%), 민족공동체 양성(26%), 경제발전(20%), 민족정신(11%)의 순으로 응답했다. 결국 조선족 3~4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 대한 우리말 교육의 침체는 언어적 능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나. 전통 민족문화의 계승

중국 조선족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중국으로의 동화 현상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고유의 전통을 비교적 잘 보존해왔다. 한민족의 문화는 중국문화와 상호 영향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를 중국의 대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한다.¹⁰²

중국 조선족의 한민족 문화는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한반도에서 전해져온 문화의 토대 위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1920년대부터 1949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성장한 첫 세대 사이에는 새로운 정착지에 대해 친화성을 갖는 문화 싹트기가 시작되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7월 1일 연변방송국이 소수 민족언어 방송국으로서 처음 방송을 시작하였고, 1948년 4월 1일 한글로 편집된 ‘연변일보’가 연결에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한글을 유지함으로써 한민족의 전통문화가 보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중국문화의 큰 틀 아래서도 소수민족문화로서 한민족의 문화를 보

하얼빈 등 조선족이 집중된 지역에서 활약하는 과학자들을 대표한다.

¹⁰¹ <<http://www.hljshinmun.com>>.

¹⁰² 김창호, “중국특색의 조선족문화의 형성과 발전.” 김종국·김원석·주재현 편, 『중국특색의 조선족문화 연구』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0), p. 64.

전, 발전시킬 수 있는 각종 문화단체와 기관도 설립되었다. 연변가무단(1948), 연변연극단(1955), 연변군중예술관(1960), 연변예술학교(1957), 연변예술극장(1974) 등이 세워졌고, 연변작가협회, 연변문련 등 문화사업기구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관과 사업기구들을 통해서 한민족의 문화가 보존될 수 있었다.¹⁰³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한민족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들이 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중국 조선족의 한민족문화는 그 뿌리로부터 이어져 전체 한민족문화의 한 지류이며, 조선족이 중국에 이주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집거사회를 형성한 이후에도 그 문화적 원류는 여전히 한반도에서 섭취한 전통문화와의 구별을 형성하지 않았다.¹⁰⁴ 다만, 한국과의 교류와 접촉이 단절되어 있던 시기에 한반도로부터의 문화적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전통문화에 중국 사회의 문화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자체의 고유문화를 지키려는 나름대로의 문화적 생존은 꾸준히 모색되었다.¹⁰⁵

그러나 모국을 떠나서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중국에서 정치사회화를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한민족문화를 중국의 정치·경제와 일치한 발전을 실현한 중국특색의 ‘조선족문화’로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즉 ‘조선족문화’는 중국의 사회주의문화의 기반 위에서 중국특색의 조선족 문화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⁰⁶ 그러나 한민족문화를 중국특색의 조선족 문화로 보는 사람들도 중국조선족의 역사 자체가 천입민족이 점차 중국 소수민족으로 적응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민족의 전통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¹⁰³ 위의 책, pp. 68-70.

¹⁰⁴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3), p. 90.

¹⁰⁵ 위의 책, pp. 90-91.

¹⁰⁶ 주재현, “중국특색의 조선족문화 연구에서의 몇 가지 문제,” 김종국·김원석·주재현 편, 『중국특색의 조선족문화 연구』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0), pp. 42-61.

또한 개혁개방 이후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인적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전통적 문화의 공유점을 찾는 현상도 증대하고 있다.

다. 한국 문화 접촉 및 교류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제한적으로 한국과 교류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이 사회주의권에 대한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주로 친척 방문 위주의 제한적 방문이었지만 여행증명서만으로 한국 방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 수가 늘어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체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부터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국민으로서 한국 입국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했으며, 1992년부터는 친지 방문도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미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에서는 한국으로의 진출 붐이 일기 시작했으며,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조선족의 대거 한국 진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의 파급 효과가 바로 조선족 사회를 휩쓴 ‘한국 붐’ 또는 ‘한국 바람’이었다.¹⁰⁷

한국 붐은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 경제적 이득, 고국인 한국과의 교류와 접촉의 확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도 가져다주었으나, 조선족공동체의 공동화(空洞化) 또는 ‘해체’의 위기라는 부정적 효과도 초래하였다.

그러나 한국 붐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한·중 수교라는 배경 위에서 중국 조선족이 모국 한국과 필연적으로 맺고 있는 특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크게 보아서 중국 사회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인구 이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진출과 한국인들의 중국으로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 조선족의 한국문화 접촉과 교류도 급격히 증대하

¹⁰⁷ 최우길, “중국 조선족, 그리고 우리의 정책,” 『정세와 정책』 (2000).

었다. 중국 사회의 도시화, 근대화가 진전되면서 조선족사회는 한국의 전통문화보다는 영화, 가요, 대중문화 등을 통한 근대화되고 서구화된 한국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든 조선족은 모국과의 친화도가 높은 것이 일상적이지만, 3~4세대의 조선족 젊은이들도 한국의 현대문화와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친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 접촉과 교류의 과정을 ‘역문화충돌’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조선족은 어려서부터 중국문화에 적응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접촉은 새로운 문화와의 조응으로써 재적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¹⁰⁸ 이러한 조선족의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은 때로는 중국특색의 조선족문화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 대한 한국 문화의 전파는 한·중 수교 이후 인적 교류의 매개를 통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발전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인터넷·DVD·휴대폰·mp3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들은 중국 조선족 사회를 한국 사회의 문화적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중국 조선족 및 탈북자 이산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 중국 조선족에게 책 보내주기, 현지 우리말 방송사 방송원의 우리 방송 통신원 활용, 동포 방송인 초청 연수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의 생활공간 분리에 따라 발생한 의식 형태 및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차이로 인해 한국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가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분류에 있어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는 한국 사회와는 문화적, 민족적 공유점을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특성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¹⁰⁸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3), pp. 91-101.

3. 고려인 사회

고려인 사회는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여러 공화국에 분산되어 형성되어 있다. 즉, 원래 소련의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였던 약 18만명의 고려인들이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되어 분산·정착하면서 중앙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소련의 각 지역에 고려인 사회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소련붕괴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농촌지역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고려인의 경제적 기반인 콜호즈(집단농장)의 와해, 탈러시아적 경향과 선주민족 중심의 언어정책 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이 보다 나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¹⁰⁹,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언어정책, 직업난, 자녀교육문제, 건강상의 문제, 선주민족 중심 민족정책 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이 나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또 키르기스탄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키르기스탄 거주 고려인들이 과거 고본질¹¹⁰을 다녔던 볼가그라드·카프카즈 등의 러시아 남서부 지역, 모스크바 및 근교지역,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근, 카자흐스탄의 상당수 고려인들도 러시아의 모스크바 및 근교지역, 볼가그라드 및 카프카즈 등의 러시아 남서부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5개국에는 약 35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데, 이

¹⁰⁹ 이에리아, “소련 붕괴후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화”, 『러시아 고려인 역사 140년: 성찰과 새로운 모색』 (재외동포재단·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2004.8.27-28).

¹¹⁰ 고본질은 거주지를 떠나 근거리 혹은 원거리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영농의 전과정을 수행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영농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고본질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내에서 발생하였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아래의 집단적 농업생산체제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며 전개되어 왔다.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이후에 농업 집단청부제와 토지 임대제도가 합법화되면서 고본질도 합법화되었다. 이에리아, 위의 글 참조.

는 구소련 전체 지역 고려인의 75%에 해당한다. 약 35만명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가운데 약 90%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는 경제적 기반인 콜호즈(집단농장)의 침화, 와해 등으로 인하여 강한 도시화 현상과 국내외 이주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아울러 활발한 상업 활동을 보이고 있다. 즉, 소련 붕괴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농촌지역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고려인의 경제적 기반인 콜호즈(집단농장)가 와해되면서,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려인들의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아울러 중앙아시아 각국의 농촌지역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고려인의 경제적 기반인 콜호즈(집단농장)의 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전문직종의 열악한 임금 수준 등으로 인하여 고려인들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자영업 특히 상업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재 중앙아시아 여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고려인들은 학력에 관계없이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예컨대, 도소매업, 무역업, 요식업, 서비스 업종, 건축업, 개인농에 의해 생산된 농축산물 및 식료품 판매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려인 사회의 경제적 변화는 근본적으로 콜호즈의 침화와 함께 전개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차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고려인 공동체 삶의 기반인 콜호즈의 침화는 집단적 거주 토대를 침화시키면서, 민족문화공동체 등 상부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가. 민족언어 능력 및 민족정체성

고려인의 한국어 사용능력은 민족정체성 확립 및 민족문화공동체의 계승·확대에 매우 중요하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약 60여년간 모국과의 단절에 따른 고립으로 인하여 점차 민족언어를 상실하고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즉, 대체로 고려인들의 언어는 러시아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 민족통혼을 중시하는 장년층보다 타민족과 결혼에 개의치 않는 젊은 계층, 농업보다는 상공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러시아어의 모국어화가 더욱 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¹¹¹

요컨대, 콜호즈의 고려인 학교에서 민족언어 교육을 시행하였지만¹¹², 제 2세대 이후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한국식 성과 러시아식 이름으로 작명하며 러시아를 모국어로 사용해 왔다.

그러므로, 구소련 붕괴후, 선주민족 중심의 언어정책이 시행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해 온 고려인들은 또 다시 언어장벽을 겪게 되었다. 구소련 붕괴이후 현지어가 공용어로 채택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해 온 고려인들은 하루아침에 문맹이 되어 사회적 위상이 저하되고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2000년에 실시된 고려인 언어사용 조사에 의하면, 그 실태는 <표 IV-1>와 같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79.7%의 고려인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민족언어인 고려어의 사용 가능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존속·계승·발전에 민족언어의 사용과 함께 민족통혼도 중요하다. 동일 민족간의 혼인은 기본적으로 혈연공동체의 존속·계승·발전에 매우 중요하지만, 문화공동체의 유지·계승·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¹¹¹ 강재식, “CIS성립 이후 고려인의 의식변화와 민족정체성,”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문화생활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재외동포재단, 2001).

¹¹² 필자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시켄트 근교에 있는 유명한 고려인 집단농장인 뿔리따젤을 방문한 바 있는데, 뿔리따젤내에는 1937년 강제이주 즉시 세워진 ‘19호 학교’가 지금도 초·중·고 과정 교육을 가르치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유치원 과정에서도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IV-1〉 고려인들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합 계
러시아어	88	95	37	220
	82.2%	78.5%	77.1%	79.7%
고려말	19	26	10	55
	17.8%	21.5%	20.8	19.9%
본지공용어			1	1
			2.1%	4%
합 계	107	121	48	276
	100.0%	100.0%	100.0%	100.0%
$\chi^2=5.320(a)$ sig=256				

출처: 강제식, “CIS성립 이후 고려인의 의식변화와 민족정체성,” 『중앙아시아 고령니 사회: 문화생활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재외동포재단, 2001).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타민족과 통혼은 매우 낮은 편이다. 즉, 고려인들의 타민족과의 통혼율은 약 5~10% 정도이다. 이는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오랫동안 콜호즈를 토대로 집단적 삶을 영위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농촌보다 도시지역, 고려인 콜호즈보다 러시아민족의 집중적 정주지역에서 타민족과의 통혼율이 높고, 구소련 붕괴이후 새로운 독립국가의 출현이후에는 해당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지민족과의 통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그동안 고려인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콜호즈가 붕괴하고, 고려인들의 강한 도시로의 진출 및 활발한 상업활동 등이 전개되면서 타민족과의 통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고려인들이 이중 정체성 즉 거주국에 대한 정체성과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가운데 민족언어 상실 및 민족통혼율의 증가는 민족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구소련 및 새로운 독립국가들과의 수교와 더불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고려인들은 한국의 국력에 긍지를 느끼면서 한국어 습득에 대한 의욕과 함께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밀려들어 오고 있는 한류 물결은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 제고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전통 민족문화의 계승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계승은 쌀·김치·국수·된장국·개고기 등 음식문화, 돌·결혼식·회갑·장례 등의 의례문화 등에서 나타난다¹¹³.

음식문화를 살펴보면, 고려인들은 일상 식생활에서 지역 음식뿐 아니라, 지역 야채들을 이용한 고려식 샐러드 및 쌀, 고춧가루로 양념한 김치, 배추·무우청을 말려 끓인 국, 된장국, 돼지고기로 만든 ‘순대’, 국시라고도 부르는 국수, 냉면, 개고기 등 전통음식을 즐기고 있다.

또, 고려인들은 전통문화에 따라 돌·회갑·장례 등을 치르고 있다.

돌잔치때에는 아이에게 한복을 입히고, 아이의 미래와 운명을 보여 줄 의식의 하나로 상 앞에 실·가위·책·돈 다양한 물건을 놓기도 한다.

결혼식에서는 보드카뿐 아니라 막걸리를 마시고, 찰떡·양념 민물생선회 등을 먹으며, 신랑신부의 상에는 염색한 끈으로 장식된 수탉을 반드시 놓는다. 그리고, 축하 연회에서는 러시아 노래뿐 아니라, 도라지·아리랑 등 전통민요를 부른다.

회갑연의 잔치상에도 찰떡·국수·만두 등 고려 음식이 반드시 차려 놓여지고, 전통에 따라 잔치상을 받은 사람은 잔치가 끝날 무렵 자신의 동갑들에게 잔치상의 음식을 선물로 나누어 준다.

¹¹³ 황류드밀라, “중앙아시아 고려사람들의 전통문화,”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문화생활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재외동포재단, 2001) 참조.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례의례에는 민족의 전통관습이 매우 강하게 투영되어 나타나는데, 망자에게 흰 천을 씌운 뒤 붉은 색의 기를 올려놓으며, 그 깃발 위에는 망자의 성명·출생지·출생연도 등을 흰색 혹은 검은색을 사용하여 적는다. 아울러, 사망후 3일째 입관을 하며, 관에 안치한 후에는 모두들 곡을 하며 세 번 절을 올리며, 망자를 묻은 후에는 망자의 옷을 태운다.

한민족의 전통관습은 이처럼 고려인들의 일상생활에 보존되어 계승되고 있다¹¹⁴. 따라서, 고려인들은 소련 사회주의체제 아래 모국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실시된 조사 즉 “귀하는 민족적인 문화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 항목에 전체응답자의 90.2%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표 IV-2> 참조).

<표 IV-2>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고려인의 태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합계
반드시 지켜야 한다	48	26	28	102
	41.7%	20.6%	51.9%	34.6%
지켜야 한다	62	79	23	164
	53.9%	62.7%	42.6%	55.6%
상관없다	4	17	3	24
	3.5%	13.5%	5.6%	8.1%
지킬 필요가 없다	1	3		4
	0.9%	2.4%		1.4%
모르겠다		1		1
		0.8%		0.3%
합 계	115	126	54	295
	100.0%	100.0%	100.0%	100.0%
$\chi^2=27.497(a)$ sig=.001				

출처: 강제식 “CIS성립 이후 고려인의 의식변화와 민족정체성”, 『중아시아 고령니 사회: 문화생활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재외동포재단, 2001).

¹¹⁴ 류드밀라, 위의 글 참조.

고려인들은 이와 같은 뿌리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의 각 주요 지역마다 고려인협회를 조직운영하고 있고, 산하에 전통 예술가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국문화 접촉 및 교류

한국이 구소련 및 새로운 독립국가들과의 수교와 함께 현지 대사관이 설립되면서 고려인들의 한국문화와의 접촉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 대사관은 산하에 한국어교육원을 운영하며 고려인들에게 무료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개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면서 문화접촉 및 교류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따라서, 타시켄트, 알마타이 등 중앙아시아 주요도시에는 한국교육원이 운영중이며,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고려인외에 현지인들도 등록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대학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ICA) 단원이 한글 강사로 파견되어 봉사하면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NGO들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한국문화 접촉 및 교류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한국기업 등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힘입어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새삼스럽게 자각하고 있고, 최근 중앙아시아로 밀려들고 있는 한류 열풍은 고려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층 제고시키고 있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의 젊은이들에게는 대우차를 타고 삼성·LG의 전자제품을 사는 것이 최고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울러 TV 드라마 ‘겨울연가’의 시청률이 60%에 이르면서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어학 연수생으로서의 한국대학에서의 연수기회는 고려인들에게 모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고, 아울러 산업연수생으로서 한국에서의 연수기회는 고려인들 및 현지 젊은이들에게 ‘코리아 드림’을 꿈꾸게 하면서 한국문화와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요컨대,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교류의 활성화, 한류열풍, 연수기회 등은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 젊은이들에게도 한국어 공부 및 영화·TV 드라마 등의 한국 대중문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고, 고려인들에게는 모국에 대한 존재를 새삼 인식시키고 있다.

V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유대인 디아스포라(diaspora), 화교네트워크, 헝가리 소수민족공동체 등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민족공동체 또는 민족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의 비전 및 전략과 대외전략의 차원에서 재외교민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내적 차원의 제도적·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재외교민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자 한다. 즉,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위한 교육 인프라, 문화인프라, 경제인프라, 교류인프라 등의 구축 방안에 관해 강구하고자 한다.

1. 교육 인프라

재외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확립 및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교육이다. 헝가리의 경우,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고, 헝가리 민족대학 등의 설립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민족교육의 내용은 거주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언어·문화 교육에 기본적으로 중점을 두면서, 젊은 세대들의 생존 및 발전 능력의 증강을 지향한 직업교육 및 엘리트 교육 등의 인프라 구축을 거주지 사정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재외 한인들의 생존능력의 증강을 위한 교육 인프라의 구축은 재외 한인들이 모국에 오지 않고 거주지에 머물면서 한민족으로서 혜택을 누리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가. 언어 및 민족문화 교육 인프라

모국어의 구사능력은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외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젊은 세대의 현지 사회에 대한 동화도가 심화되면서 모국어 구사 능력은 매우 취약해지고 있으며, 전통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도 일천해지고 있다.

민단계 재일 한인사회 및 고려인 사회의 경우, 젊은 세대의 모국어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중앙아시아 및 연해주의 고려인 사회는 약 60년간 모국과의 단절에 따른 고립된 상황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심각한 상황이다. 즉, 중앙아시아 및 연해주의 고려인 사회의 경우, 러시아어가 모국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글교육 및 민족문화 보급 활동을 재일 한인들의 민족정체성 유지 함양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2005년 한국정부의 한글교육 지원현황은 <표 V-1>와 같다.

민족정체성 유지 함양 차원에서 언어 및 민족문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글 교육과 민족문화 보급을 접목시킨다. 즉, 최근 한국 TV 드라마 및 영화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 물결을 한글 교육 및 민족문화보급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다. 한류의 대표적 인기 드라마인 ‘겨울연가’, ‘가을동화’, ‘아름다운 날들’ 등을 한글교육 교재로 재편집·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한글 교육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민요, 최근 인기 가요 등을 한글 교육 등에 활용하여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한국에 다가 오도록 한다.

둘째,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의 단원들이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한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한글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KOICA 단원을 양적으로 증대시킨다. 즉, 젊은

〈표 V-1〉 2005년 재외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내역(일본, 중국, CIS 지역)

(단위: USD, 원)

국 가 명	관할공관	학교수	교사수	학생수	지원액	
					USD	원
일 본		53	171	3,732	64,190	64,799,805
	일본(대)	7	32	577		
	오사카(총)	18	35	684		
	나고야(총)	1	18	551		
	요코하마(총)	3	4	98		
	고오베(총)	15	53	1,105		
	후쿠오카(총)	2	11	85		
	삿포로(총)	4	13	556		
	니카타(총)	-	-	-		
	히로시마(총)	3	5	76		
중 국		30	394	3,532	139,500	140,825,250
	중국(대)	3	32	403	15,800	15,950,100
	상하이(총)	5	79	634	23,600	23,824,200
	칭따오(총)	7	83	589	26,800	27,054,600
	선양(총)	5	82	516	20,600	20,795,700
	광저우(총)	6	64	818	28,300	28,568,850
	청두(총)	3	29	85	10,500	10,599,750
	홍콩(총)	1	25	487	13,900	14,032,050
러 시 아		141	356	9,118	225,620	227,763,390
	러시아(대)	46	111	2,464	67,288	67,927,236
	블라디보스톡(총)	95	245	6,654	158,332	159,836,154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대)	112	164	8,907	180,070	181,780,665
카자흐스탄		246	349	8,678	394,330	398,076,135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대)	183	260	6,373	293,530	296,318,535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대)	63	89	2,305	100,800	101,757,600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대)	17	52	696	27,340	27,599,730
소계(CIS지역)	5개국5개공관	516	921	27,399	827,360	835,219,920

KOICA 단원들은 교육기관에서 한글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진출을 위한 현지 전문가로서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현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글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한글 교사 절대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급 한글 교육 지도 교사의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초·중급 한글 교육 지도 교사의 양성 프로그램에 모국 연수 기회를 포함시켜 한글 교육 지도 교사의 사기 진작 및 의욕 제고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중국 조선족 및 중앙아시아 및 연해주의 고려인 한글 교육 지도 교사의 양성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한국어 방송 등을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개발·지원한다. 한국에 대한 포괄적 관심 및 이해의 제고를 위해 한국어 방송뿐 아니라 현지어 방송을 병행한다. 이는 현지인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나. 직업교육 인프라

중국 조선족 및 중앙아시아 및 연해주의 고려인 사회는 농업화에서 공업화 및 정보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조선족 및 고려인 젊은 세대가 산업화 및 정보화의 물결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직업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는 삶의 기반인 동시에 경제적 기반이 집단농장이 붕괴되고 있으므로, 전환기의 직업교육은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즉, 자동차 정비, 컴퓨터 조립, 봉제 및 디자인 등을 위한 전문 숙련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의 설립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조선족, 고려인 등 재외 한인의 생존 능력 증강을 위한 모국의 노

력은 이들에게 모국의 존재를 새삼 인식케 하면서 민족 정체성 확립 및 제고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 산업화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한 ‘전문직업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전문 숙련공을 위한 기술훈련, 직업윤리 교육은 물론, 한글 교육, 민족문화 교육 등을 병행 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산업화에 대한 기여 및 현지인과의 공존 공생을 고려하여 한인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직업훈련에도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재외 한인들의 생존 및 자조능력의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은 초기에는 모국 산업연수를 통해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지에 ‘산업인력 훈련센터’ 또는 ‘직업교육센터’ 등을 설립하여 한글교육, 민족문화 교육, 직업윤리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며, 현지인들에게도 공존 공생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 엘리트 교육 인프라

재외 한인사회의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는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뿐 아니라 재외 한인들의 현지 주류사회의 전략적 진출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 및 중국 조선족 사회의 중·고교 과정에는 상급 교육기관 진학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목들에 대한 교원 및 교육자재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과정에는 ‘국제경영과 한국학’이라는 전략적 목적 아래 한국학과, 한국학 연구센터, 국제비즈니스와 한국 연구센터 등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는 재외 한인 엘리트들의 활동 거점이 될 것이며 아울러 현지인 엘리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현재, 재외 한인사회의 경우에는 중등과정부터 엘리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구하고 있다. 재외한인들은 주력사업인 소위 ‘빠징꼬’, ‘불고기 식당’ 등의 업종으로부터 IT 사업 등 주류 비즈니스 업종에 참가하기 위해 ‘제2의 손정의’를 양성하는 엘리트 교육의 인프라를

강구하고 있다. 즉, 한국의 ‘민족사관고’ 외국어고·과학고 등의 특목고의 설립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 장학재단의 설립

민족정체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한글교육뿐 아니라 전문직업훈련, 고등 엘리트 교육 등이 매우 중요하나, 중국, CIS지역에는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게다가, 재외 한인학생들 가운데에는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를 비롯한 한민족 관련 단체, 재력가들이 재외 한인사회의 장래를 위해 장학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학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가정환경이 어렵더라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이는 재외 한인 학생들이 졸업후 거주국에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는 한민족으로서의 존재를 새삼 인식케 하도록 할 것이며, 한민족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둘째, 중국·CIS 지역 등 거주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에게 모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수확은 물론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모국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한민족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요컨대, 장학사업은 우수한 재외 한인 학생들의 면학 의욕 고취는 물론, 모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국에서의 수확이 학문적 차원을 넘어 민족적 차원에서 국내외 한민족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족정체성의 함양을 기반으로 한민족 역량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2. 문화 인프라

유대인 디아스포라(diaspora)는 종교를 매개로 세계시오니스트기구(WZO), 세계유대인회의(WJC), 유대학생세계연맹, 헤브루이민자지지원회, 미국유대인공동분배위원회(JDC)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는 세계한민족공동체의 구축을 지향한 네트워크 형성에 문화적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주의(大韓主義)를 지향하여 세계한민족공동체의 형성·구축을 추구해 갈 경우,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가. 전통문화 인프라

재외 한인들의 전통문화는 음식문화, 의례문화, 가무문화 등을 통해 계승되고 있는데, 일상생활속에서 침투(浸透)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음식문화이다.

일본, 중국, CIS 지역 등의 재외 한인들은 불고기, 김치, 비빔밥, 고추장, 된장, 떡국 등의 음식을 일상적으로 즐기고 있다. 특히, 한류 물결의 영향으로 한국음식은 인기 음식으로 등장하였는데, TV 드라마 ‘대장금’의 영향으로 궁중음식을 비롯한 전통음식은 한층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되었다.

IV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경우, 한국식당·반찬가게 밀집지역은 먹거리를 매개로 재일 한인들은 물론 일본인들까지 모이도록 하면서 치마·저고리 등 한복가게, 민예품 가게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가게들이 자리잡도록 하여 소위 ‘장터’를 형성케 하고 있으며, 행사 때에는 전통예술을 공연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민족 문화 관련 모임의 터’를 전통문화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중국, CIS 지역에도 ‘한국장터’ ‘한국거리’를 ‘코리아 타운’을 지향하면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지의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모국을 거점으로 한 한민족 전통문화행사도 정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재외 한인 전통예술인들이 전통문화를 유지·계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론 및 실기연마를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모국의 전통예술인들을 거점으로 교류·협력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전략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외동포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 및 기구들은 ‘재외동포 열린 문화축제’ ‘한민족 문화공동체 대회’ ‘재외동포 문학제’ 등의 문화행사를 전개하고 있고, 아울러 재외 한인들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통예술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외 한인사회내 문화예술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한민족공동체의 구현’을 지향하여 재외 한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나. 현대한국문화와의 접촉·교류 인프라

재일한인사회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약 30년 동안 한·일 양국 간에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므로, 현대한국문화와의 접촉·교류 인프라가 적지 않게 구축되었다.

한국의 전통문화 명인들 뿐 아니라, 인기 대중가요 가수 등 연예인들의 공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게다가 ‘겨울연가’, ‘가을동화’, ‘아름다운 날들’ 등의 TV드라마는 일본인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면서 엄청난 한류 열풍이 일어나도록 하였는데, 이들 한류 열풍의 주역 드라마영화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한국 영화 및 TV드라마는 일본의 주요 대형 체인 렌트 비디오 가게에 고정 코너를 가지면서 한국-재일한인사회-일본인사회의 문

화적 교류, 공감 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 및 CIS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국과 재외 한인들의 현대 한국문화와의 접촉·교류 인프라도 현지 문화가 정서적으로 용이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야부터 전개하는 것이 전략적이며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지 문화에 동화되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재외한인 3·4세들에게도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에 편승하여 현대한국문화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민족정체성의 함양을 도모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일 것이다. 현대한국문화와의 접촉·교류를 위한 현지 대중적 인프라로서는 케이블TV, 케이블 방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케이블TV가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울러, 고려인문화협회, 한국문화원 등 현지 한국문화 관련 단체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현지 문화기관들이 한류열풍의 주역으로서 한국의 드라마·영화·가요 등의 문화자료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한국문화와의 접촉·교류를 위한 한국 국내인프라로서는 ‘사이버 한민족 문화 공동체’를 구축하여 인터넷 접속을 통한 접촉·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민족문화제전’, ‘재외한인 열린문화축제’, ‘한민족문화공동체’ 등 각종 정례적인 한민족문화행사를 기획·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발굴·등용되도록 전략적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외 한인 문화예술인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전략적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 ‘한인 문화예술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현대한국 문화와의 접촉·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열린문화축제 등의 행사에서는 재외 한인들의 한민족 문화 뿐 아니라, 거주국 문화와 접목된 문화 등이 소개되도록 전략적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문화를 통해 한편에서는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외 한인들의 상호이해

증진을 꾀하면서 한민족문화공동체를 추구해 가는데 있어서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경제 인프라

유대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국제적 영향력, 중국의 경제개발과 화교네트워크의 역할과 운용 등에 있어서 경제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였듯이, 재외 한인들이 민족정체성 함양 및 민족문화 인프라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도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즉, 재외 한인들의 경제력은 거주지 주류사회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물질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족문화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핵심적 기반인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동북지역의 낙후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CIS 지역의 고려인들은 삶의 기반이면서 물질적 토대인 콜호즈(집단농장)의 붕괴로 인해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인프라의 구축은 민족문화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토대의 구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즉, 이들 지역은 농경사회에서 공업화와 정보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므로, 모국과의 협력 아래 경제 인프라의 구축은 경제적 차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현재,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구축을 지향한 사업으로서는 재외 한인 경제인간 유기적 교류 활성화 및 상호 네트워크의 구축·확대 즉 ‘한상 네트워크’의 구축·확대를 위해 ‘세계 한상대회’, ‘세계 한민족상공인 대회’, ‘재외 동포인 경제인 CEO포럼’ 등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한상 네트워크의 조기 실현을 위해 재외 한인 경제인 및 단체의 교류활동과 조직 활성화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첨단기술시대의 한민족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한인 기술경영인 대회’, ‘재일동포 IT 직업

연수', 'CIS지역 동포 IT 직업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기술경영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한상·기술경영인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정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 및 인프라들은 경제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경제 인프라들은 재외 한인들로 하여금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민족 정체성을 함양시키면서, 한상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축·발전·확대를 위해 민족문화에 대한 정서적 공감의 매우 중요함을 새삼 인식토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요컨대, 한민족 경제 인프라가 민족문화의 유지·계승·발전을 위한 인프라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인프라는 한편에서는 재외한인들의 삶의 기반의 확충으로서 거주지에 구축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외 한인 경제인간 유기적 교류 활성화 및 상호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해 모국을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는데, 경제 인프라의 구축·운영에는 문화 인프라로서의 시너지 기능 및 효과의 창출을 추구하는 전략적 기획·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4. 교류 인프라

유대인 디아스포라(diaspora), 화교네트워크, 헝가리 소수민족공동체 등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모국과 재외교민과의 교류 인프라, 재외 교민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는 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재외 한인들과 한국도 한민족 네트워크를 지향하여 교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재외 한인과 모국은 상호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해외 한민족 제전', '재외 한민족 올림픽', '한민족 예술제', '한민족 문화제', '한민족 IT기술 제전', '세계한상대회', '세계 상공인 대회', '글로벌 한민족 경영

인 대회',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 대회' 등 다양한 정례적인 한민족 행사를 모국과의 교류 인프라 및 상호간의 교류 인프라 구축을 지향해 운영하고 있다. 즉, '세계 한민족 행사'는 일회적 행사 이상의 차원에서 교류 인프라로서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전략적 사고아래 기획·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민족 네트워크를 지향한 교류 인프라는 재외 한인들의 거주지에서도 구축되고 있다. 재외 한인들의 거주지에서의 교류 인프라 구축은 교류 이상의 차원에서 전략적 추진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재외 한인들의 거주지에서 구축되는 있는 교류 인프라는 재외한인들이 거주지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정치·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순기능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획아래 추진되어 모국-재외한인사회-거주지 주류사회를 연계시키는 교류 인프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재외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거주지 주류사회와의 전략적 연계를 추구할 있는 공간, 즉 다목적종합문화회관, 한인역사 자료관 및 이민박물관, 한국-거주지역 관계 연구센터(예, 한국-우즈베키스탄 종합센터, 카자흐스탄 한국비즈니스센터 등) 등의 건립 및 설립을 지원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현지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등은 재외 한인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뿐 아니라 모국 연수, 유학, 비즈니스 등에 관한 상담 역할 등을 행하여 재외한인사회와 모국을 연계시키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CIS 지역 등 경제·교육환경 등이 열악한 지역의 한인들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지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정치·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국과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구심력 있는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재일 한인사회도 유사한 입장이다.

요컨대, 한민족 네트워크 및 문화공동체를 지향한 교류 인프라 구축은 재외한인들이 한민족의 자산으로서 모국과 거주국과의 교류에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배려와 함께 한국-재외 한인사회-거주지 주류사회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의 20%이상 비중을 점하면서 3대 경제권의 하나로서 부상하고 있으나, 안보환경은 여전히 과거 냉전의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불확실성·불안전성·유동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은 협력과 경쟁, 대립과 갈등 등이 혼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경제, 안보 등 기능적 접근을 통하여 협력과 통합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안보 등의 기능적 접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접근 등을 통한 포괄적 지역통합을 추구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인데, 사회문화협력은 안보협력과 경제협력 주체들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협력기반의 조성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 지역 국가들간의 신뢰 회복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사회문화협력은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면서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북아 사회문화협력을 추구해 가는데 있어서 한류 열풍과 재외한인들은 한국의 중요한 자산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공유부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한류와 재외한인들을 동북아 지역의 사회문화협력에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동북아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인프라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대사의 비극으로 인해 동북아 각 지역에 흩어져 삶을 꾸려가고 있는 고려인·조선족 재외 한민족들은 삶의 기반인 동시에 경제적 토대인 콜호즈의 붕괴, 낙후된 경제 환경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존능력이 약화되면서 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유대인 디에스포라(diaspora)의 국제적 영향력, 중국의 경제개발과 화교네트워크의 역할과 운용 등에 있어서 경제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였듯이, 재외 한인들이 민족정체성 함양 및 민족문화 인프라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도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즉, 재외

한인들의 경제력은 거주지 주류사회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물질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족문화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핵심적 기반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재외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지향한 인프라의 구축을 이들의 생존능력을 증강시키는 다양한 인프라의 구축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교육인프라, 경제인프라, 교류인프라, 문화인프라의 구축 등을 시너지 효과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재외 한인들이 한민족의 자산으로서 모국과 거주국과의 교류에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재외 한인사회-거주지 주류사회를 연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존능력의 증강에 대한 전략적 배려를 기반으로 교육인프라, 경제인프라, 교류인프라, 문화인프라의 구축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대한주의(大韓主義)를 지향하여 국적 여부에 관계 없이 재외 한민족 역량 강화 전략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문화인프라의 구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권재일. 『체코슬로바키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 김광익·전영평.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김종국·김원석·주재현 편. 『중국특색의 조선족문화 연구』.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0.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비전과 과제』. 서울: 국정홍보처, 2003.
- 박병석. 『중화제국의 재건과 해체』. 서울: 교문사, 1999.
- 서경교·김웅진 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 연구의 쟁점과 전략』. 서울: 인간사랑, 2000.
- 설용수. 『재중동포 조선족 이야기』. 서울: 미래문화사, 2004.
- 이광규. 『동포는 지금』. 서울: 집문당, 2005.
- 양승윤·황규희 외. 『동남아-중국관계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 윤필준 역. 『화교』. 서울: 다락원, 2003.
- 이상협. 『헝가리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 자오찬성. 『중국의 외교정책: 미시-거시 연계 접근 분석』. 서울: 오름, 2002.
-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사회 연구』. 서울: 재외동포재단, 2003.
- _____.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신흥 고려인 사회 네트워크』. 서울: 재외동포재단, 2003.

- (사)한중경제포럼. 『현대중국건설과 화교의 역할』. 서울: 재외동포재단.
-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3.
- Bellah, Robert. *Tokugawa Religion: the Cultural Root of Japan*. New York: Free Press, 1957.
- Fitzgerald, Stephen. *China and the Overseas Chinese: A Study of Peking's changing policy, 1949~19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Hanrieder, Wolfram F. *Germany, America, Europe: Forty Years of German Foreign Poli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 Jowitt, Ken. *New World Disorder: The Leninist Extinc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 Kahn, Herman.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Boulder: Westview Press, 1979.
- Metzger, Thomas A. *Escape from Predica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 Neher, Clark D. · Marlay, Ross.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New York: Westview Press, 1995.
- Taylor, Michael.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The Times. *Concisis Atlas of World History*. Maplewood, New Jersey: Hammond, 1982.
- 丘進 外.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實施辦法 釋義』.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4.
- 福岡安則·金明秀.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 東京大學出

- 版會, 1997.
- 新中國領事實踐 編組 『新中國領事實踐』,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0.
-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社, 1991.
- 吳主惠 『漢民族的 研究』, 臺北: 臺灣商務印書館發行, 民國71年.
-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 『第3次 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查中間報告書』, 東京: 在日韓國人青年會 中央本部, 1994.
- 中國華僑出版社. 『華僑華人百科全書: 僑鄉卷9』,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8.
- 中國華僑出版社. 『華僑華人百科全書: 法律條例政策卷』,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8.

2. 논문

- 강재식. “CIS성립 이후 고려인의 의식변화와 민족정체성.” 『중양아시아 고려인 사회: 문화생활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재외동포재단, 2001.
- 김 철. “새 세대 조선족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텔재단 주최 2004 재외동포 초청 통일문제 세미나 발표논문, 2004. 5. 24~25.
- 이애리아. “소련 붕괴후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화.” 『러시아 고려인 역사 140년: 성찰과 새로운 모색』, 재외동포재단·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2004. 8. 27~28.
- 이진영. “21세기 중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아태연구』, 제8권 2호, 2001.
- _____.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4호, 2002.

최영진.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반성.”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2호.

최우길. “중국 조선족, 그리고 우리의 정책.” 『정세와 정책』. 2000.

항류드밀라. “중앙아시아 고려사람들의 전통문화”,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문화생활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재외동포재단, 2001.

Bobrow, Davis B. “Multilateral Approaches to Peace Building in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n-Governmental Six Party Talks on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sues and Agenda』.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Cho, Sung-Hwan·Kim, Yong-Jick. “Views of Asian World by Modern Intellectuals in the Northeast Asia,” NAIS, Agenda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Its Ideal & Realit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Opening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Northeast Asia Intellectuals’ Solidarity(NAIS) Movement, November 2001.

3. 기타 자료

『매일경제』.

Korean Weekly.

박창욱 연변대학 민족연구소 교수 현지인터뷰(2004. 6. 14).

김영만 전 연변자치주 상무위부주석 현지 인터뷰(2004. 6. 15).

박민자 연변가정문제연구소장 현지인터뷰(2004. 6. 15).

<<http://user.alpha.co.kr/~eastasia/forum>>.

<<http://www.countrystudies.us/romania/41.html>>. (2005.4.24 검색)
<<http://www.ndu.edu/inss/strforum/SF-93/forum93.html>>.
(2005.4.22 검색)
<<http://www.gov.hu/reports2004/slovakia.2004.html>>. (2005.5.2 검색)
<<http://www.eumap.org/journal/features/2003/october/minmediaslovakia>>. (2005.2.25 검색)
<<http://www.gov.hu/reports2004/voivodina2004.htm>>. (2005.5.2 검색)
<<http://www.eubusiness.com/afp/030907035258.b68583zj/>.
(2005.4.22 검색)
<<http://www.unpo.org/news-detail.php?arg=24&par=47>>.
(2005.4.22 검색)
<<http://www.htm.hgov.hu/reports2004/romania2004.htm>>.
(2005.5.2 검색)
<<http://www.hljshinmun.com>>.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문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편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년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를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